2026 청소년상담연구 · 260

청소년복지시설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실태 및 운영모형 개선 연구

책임 연구자 : 정 경 은
공동 연구자 : 조 규 필
이 희 연
조 성 희
김 아 래 미
보조 연구자 : 정 민 경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260

청소년복지시설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실태 및 운영모형 개선 연구

인　　쇄 : 2026년　10월　29일
발　　행 : 2026년　10월　29일

발 행 인 : 한정원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13 / F. (051)662-3008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비매품

ISBN 978-89-8234-931-7 94330
ISBN 978-89-8234-001-7 (세트)

본 간행물은 성평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간 행 사

최근 가정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는 가족갈등과 주거불안뿐만 아니라 자살·자해,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와 학업중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라는 보호체계에서 벗어난 청소년은 위기 상황을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보호·회복·자립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변화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과 지원 욕구를 살펴보고,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지원 실태 및 운영모형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및 행정자료 분석과 국내외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인터뷰, 현장전문가 FGI, 전국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의견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시설유형과 보호기간 중심 체계를 청소년의 위기 수준과 지원 욕구에 따른 '응급·위기안정-집중회복-자립전환'의 기능 중심 지원체계로 발전시키는 운영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 주신 청소년 여러분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년복지시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애써주신 초당대학교 정경은 교수님과 공동 연구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운영모형이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가정 밖 청소년이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충분히 회복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10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한정원

초 록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체계는 제도 설계는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왔으나, 지역별 설치 불균형으로 인해 청소년의 거주 지역에 따라 시설 간 연계가 제한되어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원인 및 특성(정신건강문제, 경계선 지능 등 복합 고위험군)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은 다소 소극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역별 불균형과 보호기간 중심으로 설계된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하여, 기존의 기간 중심 운영에서 기능 중심 운영을 지향하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호·자립지원 실태, 국내외 사례 조사, 이용청소년 및 관계자 의견조사 등의 연구 내용을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및 2차 자료 분석, 청소년복지시설 이용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FGI), 143개소(2026. 8. 기준 169개소 중 84.6% 참여) 청소년복지시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기능 중심 유형 전환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별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능 중심의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지향하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을 제시하였다. 운영모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모형의 핵심 사항은 기존의 기간 구분 방식으로 운영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을 대상별·위기 수준별 맞춤형 접근을 강화한 기능 중심 통합지원(One-stop)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운영모형은 총 3개 트랙으로 구성되며, 트랙 1은 응급·위기안정(Drop-in Center & Emergency Hub), 트랙 2는 집중회복(Intensive Recovery & Healing), 트랙 3은 자립전환(Independent Buildup & Transition)이다.

둘째, 두 가지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지역별 시설 불균형으로 인한 서비스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한 건물 내에서 모든 트랙을 운영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 모델은 각 트랙이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위치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식이다.

셋째, 운영모형은 '가정 밖 청소년 위기·회복·자립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대전제로 하여, '청소년 중심성', '기능 중심성', '연속성과 통합성', '선택성과 유연성', '현장 참여', '단계적 전환'의 6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넷째, 운영모형의 시설·인력·서비스·예산(안)을 제시하였다. 시설 측면에서 모든 트랙은 공통적으로 침실을 1실 1인 또는 2인으로 변경하고, 응급·위기안정 트랙과 집중회복 트랙에는 안정화실(1인 1실)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존 상담실 외에 응급·위기안정 트랙에는

초기접수・위기선별대응실, 집중회복 트랙에는 가족상담실, 자립전환 트랙에는 자립체험(훈련)실과 전환주거 연계공간(체험형 독립공간)을 설치한다. 인력 측면에서는 응급・위기안정 트랙에 전문사정・연계요원, 집중회복 트랙에 정신건강상담요원, 자립전환 트랙에 자립지원요원을 배치하고, 통합 운영 모델에는 추가로 각 트랙별 팀장을 배치한다.

트랙별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응급・위기안정 유형의 서비스는 ① 보호 및 현장 지원, ② 찾아가는 거리상담, ③ 거리위험 대처 및 안전교육, ④ 연계 지원 및 긴급위기개입의 4가지로 구분된다. 집중회복 유형의 서비스는 ① 안전보호 및 일상생활 지원, ② 다학제적 심리・정서 케어 및 치료 연계, ③ 가정복귀 및 관계회복 지원, ④ 학업지속 및 진로・직업 기초지원, ⑤ 법률 지원 및 문화여가 지원, ⑥ 교정특화형 또는 법원연계형 서비스의 6가지로 구분된다. 자립전환 유형의 서비스는 ① 독립주거 연계 및 주거안정 지원, ② 소득・생계・금융 및 경제관리 지원, ③ 취업・훈련 및 직업 역량 강화, ④ 교육・진학 및 건강・일상생활 지원, ⑤ 개별 자립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의 5가지로 구분된다.

예산 측면에서는 신규시설의 운영예산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만을 단순히 적용하는 대신, 기존 시설의 2026년 예산에 최소 인력 보강 및 기능전환 전문인력의 추가 인건비를 반영하여 산출한 기능별 기관당 평균 운영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하였다. 이에 따라 전환 이후 기관당 평균 예산은 응급・위기안정 트랙 509,995천 원, 집중회복 트랙 422,434천 원, 자립전환 트랙 419,668천 원으로 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운영모형 개편 추진 로드맵과 정책적 제언 및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응급・위기안정, 집중회복, 자립전환, 로드맵

목차 ▌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 주요 내용 ····· 5
3. 연구방법 ····· 6

Ⅱ. 가정 밖 청소년 특성의 변화와 청소년복지시설 현황분석 ▌ 9

1. 가정 밖 청소년 특성의 변화 ····· 9
2. 청소년복지시설의 현황 ····· 15
3. 소결 ····· 46

Ⅲ.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해외사례 ▌ 48

1.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해외 사례 개요 ····· 48
2. 해외 사례 검토 ····· 49
3. 소결 ····· 60

Ⅳ. 청소년 인터뷰 ▌ 64

1. 청소년 인터뷰 개요 ····· 64
2. 청소년 심층면접 내용분석 결과 ····· 66
3. 소결 ····· 91

Ⅴ. 현장전문가 FGI ▌ 94

1. 현장전문가 FGI 개요 ····· 94
2. 현장전문가 FGI 분석 결과 ····· 99
3. 소결 ····· 123

Ⅵ.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전환 의견조사 ▌ 129

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전환 의견 조사 개요 ····· 129
2. 조사대상자 및 소속 기관의 일반적 특성 ····· 131
3.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전환 인식 ····· 137
4. 소결 ····· 146

Ⅶ.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편(안) ▌150

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편(안) 마련 과정 ····· 150
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안) ····· 156
3.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델 시설(안) ····· 158
4.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델별 인력 ····· 164
5.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델별 서비스 ····· 166
6.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델별 예산 ····· 175
7.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편 추진 로드맵 ····· 185
8. 정책 제언 ····· 187

참고문헌 ▌ 198

부록 ▌ 205

Abstract ▌ 215

표 목차

<표 Ⅰ-1> 질적연구 개요 ····· 7
<표 Ⅰ-2> 청소년복지시설 의견조사 개요 ····· 7
<표 Ⅱ-1> 2013~2024 가출경험과 가출 이유 ····· 10
<표 Ⅱ-2> 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변화 ····· 13
<표 Ⅱ-3> 청소년복지시설의 유형 ····· 16
<표 Ⅱ-4> 청소년복지시설 시설 기준 ····· 18
<표 Ⅱ-5> 청소년복지시설 인력 구성 ····· 19
<표 Ⅱ-6> 전체 시설 현황 ····· 22
<표 Ⅱ-7> 시설유형별 지역 현황 ····· 24
<표 Ⅱ-8> 시설유형별 보호청소년 성별 현황 ····· 25
<표 Ⅱ-9> 시설유형별 시설물 형태 ····· 26
<표 Ⅱ-10> 시설유형별 소유주체 ····· 27
<표 Ⅱ-11> 시설유형별 소유형태 ····· 27
<표 Ⅱ-12> 시설유형별 설치주체 및 운영형태 ····· 28
<표 Ⅱ-13> 전체 종사자 현황 ····· 30
<표 Ⅱ-14>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지역 현황 ····· 31
<표 Ⅱ-15>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성별 현황 ····· 32
<표 Ⅱ-16>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학력 ····· 33
<표 Ⅱ-17>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연령대 ····· 34
<표 Ⅱ-18>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고용형태 ····· 35
<표 Ⅱ-19>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급여형태 ····· 36
<표 Ⅱ-20>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근무형태 ····· 37
<표 Ⅱ-21>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주 40시간 이상 근로여부 ····· 37
<표 Ⅱ-22> 청소년쉼터 현원 ····· 38
<표 Ⅱ-23>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현원 ····· 39
<표 Ⅱ-24> 일시청소년쉼터 연간 이용자 수 ····· 39
<표 Ⅱ-25> 단기청소년쉼터와 중장기청소년쉼터 연간 이용자 수 ····· 40
<표 Ⅱ-26>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연간 이용자 수 ····· 40
<표 Ⅱ-27> 2021~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이용기간 ····· 41
<표 Ⅱ-28> 2021~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보호기간별 이용자 비중 ····· 42
<표 Ⅱ-29> 2021~2025년 청소년쉼터 재입소 현황 ····· 43
<표 Ⅱ-30> 2021~2025년 단기 및 중장기청소년쉼터 재입소 현황 ····· 44

<표 Ⅱ-31> 2021~2025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재입소 현황 ····· 44
<표 Ⅱ-32> 2023년 6월~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기관 연계 현황 ····· 45
<표 Ⅱ-33> 2023년 6월~2025년 청소년자립지원관 기관 연계 현황 ····· 46
<표 Ⅲ-1> 위기청소년 지원시설의 유형 ····· 49
<표 Ⅲ-2> 해외 사례 요약 ····· 61
<표 Ⅳ-1>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청소년 연구참여자 ····· 65
<표 Ⅳ-2> 청소년 참여자의 청소년복지시설 이용경험 내용분석 결과 ····· 67
<표 Ⅴ-1> 현장전문가 FGI 연구 참여자 현황 ····· 95
<표 Ⅴ-2 > 현장전문가 FGI 개방코딩 현황 ····· 101
<표 Ⅴ-3> 기능 중심 트랙 ····· 123
<표 Ⅴ-4> 시설 명칭 기능별 브랜드 제안 ····· 127
<표 Ⅵ-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관련 의견 조사 문항 ····· 130
<표 Ⅵ-2> 연구대상자의 특성 ····· 131
<표 Ⅵ-3> 연구대상자 소속 시설 특성 ····· 132
<표 Ⅵ-4> 연구대상자 소속 시설의 청소년 특성 1 ····· 134
<표 Ⅵ-5> 조사대상자 소속 시설의 청소년 특성 2 ····· 136
<표 Ⅵ-6>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전환 필요성 ····· 138
<표 Ⅵ-7>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기능 중심 전환 필요 여부 ····· 138
<표 Ⅵ-8>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개편의 기대효과 ····· 141
<표 Ⅵ-9>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개편의 우려 사항 ····· 142
<표 Ⅵ-10> 기능 중심 시설유형 재편에 따른 기존 시설의 기능적 유형 인식 ·· 143
<표 Ⅵ-11> 기능 중심 시설유형 전환 용이성 및 준비 수준 ····· 144
<표 Ⅵ-12>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한 필요 지원 ····· 145
<표 Ⅶ-1>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개편 신/구 비교 ····· 157
<표 Ⅶ-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델 추가 시설 ····· 159
<표 Ⅶ-3>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시설관리 기준(안) ····· 160
<표 Ⅶ-4>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편모델별 인력구성(안) ····· 164
<표 Ⅶ-5>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변경에 따른 추가 인력 ····· 165
<표 Ⅶ-6>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트랙별 서비스 ····· 167
<표 Ⅶ-7> 사후관리 유형 ····· 173
<표 Ⅶ-8> 사후관리 단계별 지원내용 및 방법 ····· 174
<표 Ⅶ-9> 2026년 청소년복지시설 예산(추정치) ····· 176
<표 Ⅶ-10> 46개 권역으로 구분한 추가 필요 시설 개수 ····· 178
<표 Ⅶ-11> 기능전환에 따른 2026년 인력 추계 ····· 180

<표 Ⅶ-12> 기능 전환에 따른 2026년 예산 추계 ····· 181
<표 Ⅶ-13> 신규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추계 ····· 181
<표 Ⅶ-14> 기능 중심 운영모형 적용 세부 예산(안) ····· 182
<표 Ⅶ-15>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개편에 따른 예산(추정치) ····· 184

그림 목차

[그림 Ⅱ-1] 2013~2024 가출경험과 가출 이유 ····· 10
[그림 Ⅱ-2] 가정 밖 생활 경험 여부 및 빈도 : 생애 경험 ····· 11
[그림 Ⅱ-3] 가정폭력 경험 여부 및 빈도 : 신체적 폭력 및 학대 ····· 12
[그림 Ⅱ-4] 가정 밖 생활 중 어렵고 힘들었던 점(복수응답) ····· 14
[그림 Ⅱ-5] 가정 밖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방안(1순위) ····· 14
[그림 Ⅶ-1] 가정 밖 청소년 특성의 변화와 청소년복지시설 현황분석 결과 시사점 151
[그림 Ⅶ-2]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해외 사례조사 결과 시사점 ····· 152
[그림 Ⅶ-3]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시사점 ····· 153
[그림 Ⅶ-4] 현장전문가 FGI 결과 시사점 ····· 154
[그림 Ⅶ-5]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전환 의견조사 결과 시사점 ····· 155
[그림 Ⅶ-6] 청소년복지시설 통합지원 운영모형(안) ····· 156
[그림 Ⅶ-7]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원칙 ····· 158
[그림 Ⅶ-8]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편 정책과제(안) 로드맵 ····· 187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를 살펴보면,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1],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4종류이다. 각 시설의 서비스 대상은 상이한데,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학습 · 정서 · 행동 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의 보호처분 중 1호 처분자 중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받은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 및 퇴소 청소년이 그 서비스 주요 대상[2]이다. 2026년 3월 기준 청소년쉼터 138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13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8개소,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개소가 운영중이다(성평등가족부 내부자료). 이 시설들 가운데 청소년쉼터는 다른 시설보다 좀 더 복잡한 구조를 지닌다. 청소년쉼터 유형은 청소년보호 기간과 기능에 따라 일시, 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로 구분된다. 2026년 성평등가족부 사업 안내에 따르면 일시청소년쉼터는 24시간~7일 이내 거리상담, 가출예방, 조기발견 및 초기개입, 일시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단기청소년쉼터는 3개월 이내 단기보호하지만 최장 2년까지 가정・사회복귀 지원을 담당하며, 중장기청소년쉼터는 최장 4년까지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자립지원을 제공한다(성평등가족부, 2026).

청소년복지시설은 전문기관으로, 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이 제작되어 왔다. 1997년 IMF 사태로 위기가정이 증가하고, 전국 2개소

1)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학습 · 정서 ·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양한 청소년들이 서비스 대상이라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음.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2호 의거, 청소년자립지원관 서비스 대상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 학교 ·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임. 하지만 성평등가족부 발간 청소년사업안내에 제시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대상은 법적 서비스 대상 외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서 사례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명시하여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에 불과하던 청소년쉼터가 1998년 들어 광역시에까지 확대운영되면서 청소년쉼터 운영모형 연구(이민희 외, 1998)가 시작되었다. 이후 일시청소년쉼터와 중장기청소년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2005년에 청소년쉼터 세부운영모형 연구(김지혜 외, 2006a; 김지혜 외, 2006b; 양미진 외, 2006)를 시작으로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전달체계 개편을 포함한 2009년 청소년운영모형(정익중 외, 2009)이 완성되었다.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청소년복지시설에 신규 시설로 추가되었고,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모형 연구(김지연, 백혜정, 2017)가 진행되었다. 2016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청소년복지시설로 신설되었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서정아, 박선영, 2016; 임영식 외, 2016)가 진행되었으나 구체적 운영모형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 이후 청소년쉼터 입소 기간 연장 외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청소년쉼터 운영모형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김윤나, 2024; 황진구, 김지연, 2000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변화에 대해 구체적 필요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청소년쉼터 운영체계는 제도 설계의 체계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에서의 실제 작동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시설 유형별 설치를 전제로 한 공급방식이 지역별 여건과 수요 분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일시청소년쉼터 33개, 단기청소년쉼터 67개, 중장기청소년쉼터 38개가 운영중이며 13개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운영 중이다(성평등가족부 내부자료). 제도상으로는 일시·단기·중장기 보호와 자립지원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기능이 동질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거주하거나 발견된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보호·회복·자립지원의 범위와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체계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황진구와 김지연(2020)은 청소년쉼터 세부 유형별 실제적인 기능과 역할에서의 차별성이 적고, 가정 밖 청소년의 발굴과 일시보호, 단기 및 장기보호 서비스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계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체계의 또 다른 한계는, 지원 구조가 청소년의 위기 경험과 회복 경로보다 시설 유형 구분을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데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위기 발생 시점에 즉각적인 보호와 안정화가 필요하며, 이후 심리적 회복, 학업 지속, 가족관계 조정, 진로탐색, 자립 준비 등의 지원이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운영방식

은 일시·단기·중장기라는 입소 기간을 중심으로 한 시설 유형이 먼저 제시되고, 청소년은 이에 따라 입소와 연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제도 이해 측면에서는 명확할 수 있으나, 실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에게는 서비스 진입과 이동 과정에서 또 다른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지역에 필요한 유형의 시설이 부재한 경우 초기 보호 이후 다른 지역 시설로의 전원이나 재연계가 불가피해지고, 이는 보호의 연속성과 사례관리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간의 기능 분절 역시 개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제도상 청소년쉼터는 보호와 회복을, 청소년자립지원관은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주요 기능이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 규모가 2026년 5월 기준 전국 13개 설치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의 이행 단계가 지역별로 균질하게 보장되기 어렵다. 가정 복귀가 곤란하거나 독립생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퇴소 이후 주거, 경제, 진로, 대인관계, 정서적 지지 등 다차원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호 단계와 자립 단계가 분리되어 운영되면, 청소년은 시설 퇴소 시점에서 다시 지원 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공백은 재가출, 주거불안, 학업중단, 불안정 취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보호체계의 정책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의 개편은 개별 시설의 증설 여부를 넘어, 입소 초기부터 퇴소 이후까지 연속적인 지원경로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원인 및 특성(정신건강문제, 경계선 지능 등 복합 고위험군)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일시·단기·중장기 쉼터가 체류기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 청소년쉼터의 현행 보호·자립지원 체계 및 운영모델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이 되는 이유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과거에는 청소년의 가출 원인이 성인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비유되었지만, 최근에는 가정 이슈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은 2014년 57.4%에서 2024년 70.2%로 12.8%p 높아졌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는 2014년 0.2%에서 2024년 2.3%로 2.1%p 높아졌는데 비율상 10배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2014년 16.2%에서 2024년 7.9%로 8.3%p 감소하여 절반 가까이 줄어 들었다. 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 이슈 또한 제기되고 있는데,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 우울은 6.8%p 높고, 자해도 2.8%p 높다. 고립감 또한 일반청소년의 14.0%에 비해 위기청소년은 59.1%가 고립감을

경험하여, 일반청소년에 비해 45.1%p나 높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가정 밖 청소년은 가족과의 갈등 문제로 가정 밖 청소년이 되며, 일반청소년에 비해 정신건강이 상당히 취약하여 단순 보호가 아닌 청소년의 안전문제로 바라봐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접근 방향성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을 지원하여 비행의 재발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16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법적 제도화되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우리 사회가 비행경험 청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으로 보려는 회복적 사법의 제도적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문제는 제도 설계의 중심축이 여전히 '보호처분의 집행'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제도상 보호자를 대신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입소 청소년 상당수는 원가정 자체가 회복 기반이 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서정아와 박선영(2016)은 1호 처분 청소년 상당수가 원가정의 구조적・기능적 어려움 때문에 보호자 위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입소 청소년에게 시설이 단지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형식상 '보호자의 대리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가족해체・학대・방임・빈곤・관계 단절을 경험한 청소년의 회복을 담당하는 고난도 생활・치유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서정아, 박선영, 2016)는 의미이다. 또한 입소 청소년에게 가족은 보호자이자 동시에 상처의 원인일 수 있다. 그런데 운영모형이 여전히 '가정 복귀'를 성과로 상정하면, 가족관계의 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형식적 재결합을 추진할 위험이 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는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일 수 있다. 원가정 복귀는 목표가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여야 하며, 복귀 가능성・안전성・관계회복 정도에 따라 다층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

황진구와 김지연(2020)의 연구에서 기존 청소년쉼터의 구조적 개편 문제를 다루었으며 기능 중심 개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연구 방법 측면에서 실무자 및 전문가 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참여자의 제한,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쉼터 중 단기청소년쉼터와 중장기청소년쉼터를 통합 운영안을 제안하여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실태 고찰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모형 개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주요내용

가. 가정 밖 청소년 특성변화와 청소년복지시설 실태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특성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보호 청소년 수의 변화 추이 및 시설 보호 현황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행정시스템 자료를 재분석하여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끝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정책과 전국 청소년복지시설 분포 현황 및 주요 기능의 내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국내・외 사례조사

청소년복지시설과 유사한 시설 사례를 국내·외 시설 관련 자료들을 고찰하고 분석해 보았다. 국외 주요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총 6개국을 비교하였고,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특히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시설 제도를 살펴보았다.

다. 청소년복지시설 이용청소년 및 관계자 의견 조사

청소년복지시설 이용청소년과 관계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면접을 통해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안)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라.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안) 제시

문헌 및 데이터 분석 및 관계자 의견 조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을 제안하고 정책적・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본 연구는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에 부합하는 보호·자립 체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강화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청소년복지시설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지원 실태 및 운영모형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과 사업지침, 정책보고서,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자료와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나. 2차 자료 분석

2차 자료 분석은 청소년복지시설 기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입퇴소 기간, 보호기간, 연계체계, 사례관리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청소년복지시설 행정시스템에 각 시설들이 입력・제출한 원자료에 대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성평등가족부의 사용 동의를 거쳐 분석 가능한 2차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연구진이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분석하였다.

다. 해외 사례연구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의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특히 쉼터 및 자립지원시설 제도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제도적 특성과 핵심 모델을 파악하였다.

라. 질적연구: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입소청소년 면담조사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선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과 실무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로 골고루 참여하도록 계획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실무자 중심 면담이었다면,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 이용자인 청

소년들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Ⅰ-1> 질적연구 개요

구분	내용
참여자 대상	현장전문가: 청소년복지시설 5개 유형 실무자 11명
	입소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5개 유형 입소청소년 14명
주요 내용	현장 전문가: 반구조화 집중 집단 인터뷰
	입소청소년: 청소년 상황에 맞는 집단 또는 개인인터뷰
면담 기록	연구자 참여 동의 후 녹음 및 전사
면담자	연구진

마. 청소년복지시설 의견조사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청소년들의 건강 이슈,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핵심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관련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에 대해서는 연구 발주처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긴밀히 협의하였고, 전문가 자문에 따라 연구진이 여러 차례 수정하였다.

청소년복지시설 의견조사는 전체 16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공문과 유선 전화를 통해 의견조사 참여를 독려하여 총 143개소가 참여하였다. 의견조사는 시설당 1회로 참여를 제한하였으며, 신속한 응답과 코딩을 위해 웹조사로 실시하였다.

<표 Ⅰ-2> 청소년복지시설 의견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모집단 및 참여집단	청소년복지시설 169개소, 143개소 참여
조사내용	입소청소년 건강 관련 문항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전환 의견
조사방법	웹설문조사
조사시기	2026년 7월 24일~8월 2일

바. 전문가 자문

본 연구의 설계, FGI 분석결과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안)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단은 청소년복지 관련 교수, 가정 밖 청소년 및 범죄청소년 현장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II. 가정 밖 청소년 특성의 변화와 청소년복지시설 현황분석

1. 가정 밖 청소년 특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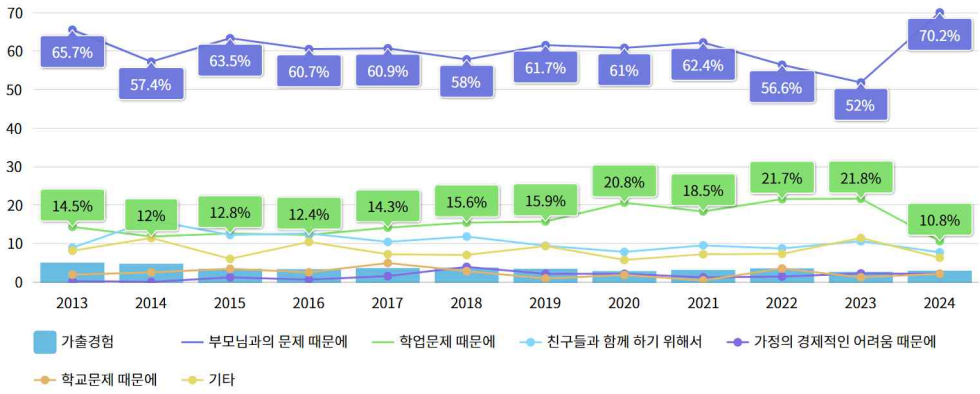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폭력・갈등・방임 등의 이유로 가정을 이탈하였거나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단순 가출・방황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가족 내 폭력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복합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복합위기형'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정 밖 청소년 통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주요 조사가 있다. 하나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로, 이 조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제154022호)이다. 2021년 제1차 조사 이후 2024년에 두 번째로 조사가 시행되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10개 유형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9~18세 청소년 4,627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두 번째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이다. 이 조사는 한국사회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200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국단위 국가승인통계이다. 조사대상자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생 1-3학년에 재학중인 아동・청소년이다. 이 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출 경험 및 원인의 변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경험은 2013년 5.1%에서 2024년 3.0%로 10년 새에 40% 이상 감소하였다. 가출하게 된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에'가 70.2%로 가장 많았고, 2013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 가장 높

은 비율을 유지하였고, 2024년에는 역대 최대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학업문제 때문에'가 10.8%,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7.9% 순이었다



[그림 II-1] 2013~2024 가출경험과 가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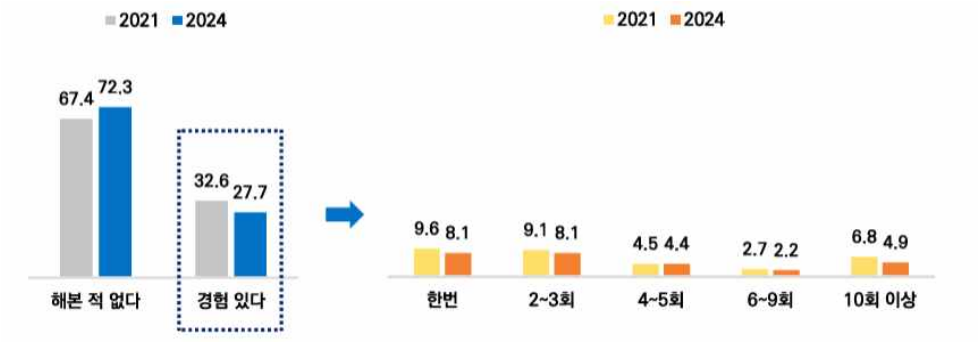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6)「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https://www.ypec.re.kr/mps/chartData/view?menuId=MENU00784&infoId=YS_RA

<표 II-1> 2013~2024 가출경험과 가출 이유

연도	가출 경험	가출 이유					
		부모님과의 문제때문에	학업 문제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기타
2013	5.1	65.7	14.5	9.1	0.4	2.1	8.3
2014	4.8	57.4	12.0	16.2	0.2	2.7	11.6
2015	3.5	63.5	12.8	12.4	1.4	3.6	6.2
2016	3.4	60.7	12.4	12.8	0.8	2.7	10.6
2017	3.7	60.9	14.3	10.6	1.7	5.1	7.4
2018	3.8	58.0	15.6	12.0	4.1	3.0	7.2
2019	3.5	61.7	15.9	9.6	2.3	1.1	9.5
2020	2.9	61.0	20.8	8.0	2.3	2.0	5.9
2021	3.2	62.4	18.5	9.7	1.4	0.6	7.4
2022	3.6	56.6	21.7	8.9	1.6	3.7	7.5
2023	2.7	52.0	21.8	10.8	2.4	1.4	11.6
2024	3.0	70.2	10.8	7.9	2.3	2.3	6.5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6).「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https://www.ypec.re.kr/mps/chartData/view?menuId=MENU00784&infoId=YS_RA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애에 가정 밖 생활을 경험해 본 아동은 27.7%였고, 이는 2021년 32.6%에 비해 4.9% 감소하였다. 1회는 8.1%였고, 10회 이상도 4.9%나 되었으나, 10회 이상은 21년에 비해 1.9%p 감소하였다. 두 번 이상 가정 밖 생활을 경험한 비율이 19.6%로 많은 편이었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 및 가정 폭력이 주된 이유인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2] 가정 밖 생활 경험 여부 및 빈도 : 생애 경험 (단위: %)

출처: 황여정 외 (2024).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을 하게 된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가족들과 싸워서)'이라는 응답이 69.5%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생활(34.3%), 가정폭력(26.3%)이 뒤를 이었다. 이는 2021년과 유사한 양상이며,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가출이 가장 많다는 결과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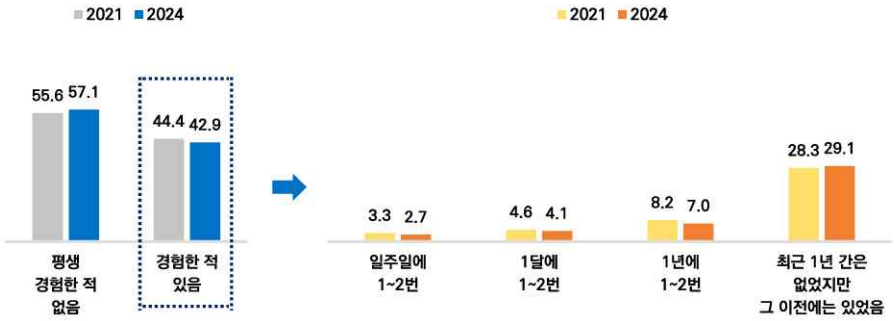
가정폭력을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4명 중 1명을 넘어, 단순 방황이 아닌 피해 회피형 가출이 상당 수준에 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는 시설유형별 이용자에 따른 가출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 청소년은 '가족의 폭력'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45.0%로 나타나, 전체 평균(26.3%) 보다 18.7%p 더 높게 파악되었다.

나. 가출 후 생활 공간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 후 주요 생활 공간은 친구·선후배 집(58.3%)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고, 거리·공원 등 노숙(29.6%), 모텔·고시원(23.3%)이 그 뒤를 이었다. 청소년쉼터에 머문 비율은 30.2%에 그쳐, 제도권 보호 체계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다수임을 보여준다.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3만 명(연간 실종 신고 또는 가출 응답 기준)에 달하지만, 실제 쉼터 입소 인원은 5,827명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대부분은 친구 집, 거리, 모텔 등 비공식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쉼터 이용 비율은 2021년 27.5%에서 2024년 30.2%로 2.7%p 증가하였다.

다. 가정 내 폭력 피해 경험

위기청소년의 가정 내 폭력 피해 경험은 예전보다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다.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서는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피해가 10명 중 4명 이상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 문제를 단순한 '가출 비행'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학대 및 안전 문제로 바라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주: '경험한 적 있음' 응답은 100에서 '평생 경험한 적 없음' 값을 제외한 것으로 세부 보기(횟수 범주)의 합과 다를 수 있음.

<그림 II-3> 가정폭력 경험 여부 및 빈도 : 신체적 폭력 및 학대 (단위: %)

출처: 황여정 외 (2024).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라. 정신건강 위기의 심화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위기청소년의 가출·은둔 등 행동적 위기 경험은 감소하였으나, 우울감과 자해 등 내적 정신건강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은 일반 청소년과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일반 청소년의 14.0%가 고립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위기청소년은 59.1%가 고립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의 원인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2021년 조사에서는 심리 불안이 48.4%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24년에는 37.3%로 감소하였다. 반면 학업 문제를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4.7%에서 15.0%로 10.3%포인트 급증하여,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교육 격차와 학습 부담이 위기청소년에게도 새로운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둔은 2021년 46.7%에서 25.8%로 크게 감소하였다. 위기청소년은 가정 내 폭력 외에도 또래로부터의 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도 일반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17.3%)는 이번 조사에서 신규로 측정된 항목으로, 위기청소년이 온·오프라인 복합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 청소년에서 이러한 피해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II-2> 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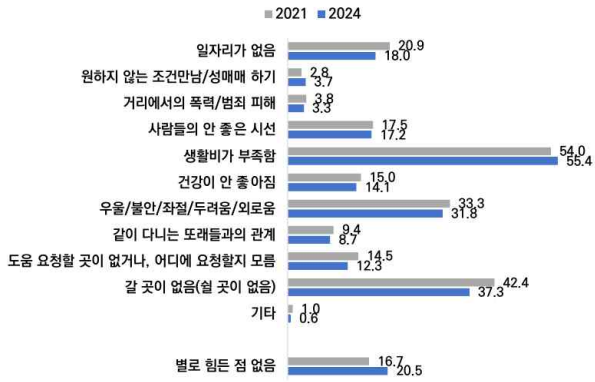
변화 유형	주요 내용
정신건강 악화	우울(↑6.8%p), 자해(↑2.8%p) 증가
고립감 심화	일반 청소년의 3배(45.1%p))
학업 문제 부상	자살 원인 중 학업 +10.3%p
은둔 감소	46.7% → 25.8% (−20.9%p)
디지털 피해 가시화	디지털 성범죄 17.3% (신규 측정)

출처: 황여정 외 (2024).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마.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수요

가정 밖 생활 중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점은 [그림 II-4]에서와 같이 '생활비가 부족함'이라는 응답이 55.4%('21년 54.0% 대비 1.4%p 증가)로 가장 많았고, '갈 곳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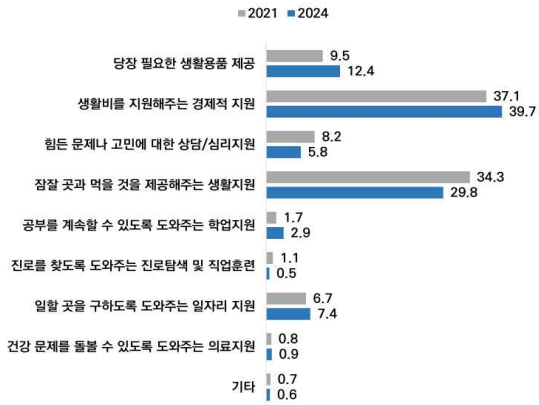
37.3%('21년 42.4% 대비 5.1%p 감소),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 31.8%('21년 33.3% 대비 1.5%p 감소)로 그 뒤를 이었다. '별로 힘든 점 없음'은 20.5%로 '21년(16.7%) 대비 3.8%p 증가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경제적 지원'이 39.7%('21년 37.1% 대비 2.6%p 증가)로 가장 많았고, '숙식을 제공해 주는 생활 지원' 29.8%('21년 34.3% 대비 4.5%p 감소), '당장 필요한 생활용품의 제공' 12.4%('21년 9.5% 대비 2.9%p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주: 가정 밖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그림 II-4] 가정 밖 생활 중 어렵고 힘들었던 점(복수응답) (단위: %)

출처: 황여정 외 (2024).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주: 가정 밖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그림 II-5] 가정 밖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방안(1순위) (단위: %)

출처: 황여정 외 (2024).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 청소년복지시설의 현황

가. 청소년복지시설의 개요

1) 청소년복지시설의 개요

청소년복지시설의 출발은 청소년쉼터이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1991년 서울YWCA 쉼터를 시작으로 1996년 부산, 1998년 그 외 광역시 지역에 설치되면서 전국적 확대되었다. 2004년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정으로 청소년쉼터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 가지 유형의 쉼터로 운영되다가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 및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에 '일시청소년쉼터(드롭인센터)'를 설치하기 시작, 2005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장기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2026년 3월 기준, 일시청소년쉼터 33개, 단기청소년쉼터 67개, 중장기청소년쉼터 38개, 총 138개의 청소년쉼터가 운영중이며 13개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83개의 청소년쉼터에 비해 1.66배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자립·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분류된다. 유형별로 기능과 운영방식이 다양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가정 밖 청소년의 사례관리, 자립지원,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협력 강화,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을 하는 시설이다. 청소년쉼터의 유형은 일시·단기·중장기로 구분된다. 일시청소년쉼터는 24시간~7일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고정형과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형으로 구분된다. 일시청소년쉼터의 주요 기능은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정 밖 청소년 조기구조 및 발견, 단기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한다.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단기청소년쉼터는 3개월 이내 단기보호이며, 사유에 따라 최장 24개월까지 보호하고,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단기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활동, 의식주, 의료 등 보호 서비

스 제공, 서비스 및 서비스지원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3년 이내 중장기 보호를 제공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최장 4년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자립지원이 주 목적이다.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성평등가족부, 2025).

<표 II-3> 청소년복지시설의 유형

	일시 청소년쉼터	단기 청소년쉼터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 지원관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발견 및 의뢰	경찰, 일시(이동형), 병원, 주변 사람 등으로부터 의뢰 또는 직간접으로 발견 및 신고자에 의해 의뢰		일시, 단기 청소년쉼터 등으로부터 의뢰	일시, 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 등으로부터 의뢰 혹은 지역사회자립 종료 청소년	법원
기능	가정밖 및 시설밖 초기상황 초기 보호, 긴급 및 응급 조치	긴급 및 단기 보호 단기 안정화, 귀가/중장기 연계	보호+자립+치유, 중장기 생활지원	자립생활 실행, 퇴소 후 사회 정착	감호위탁 보호 / 가정·사회 복귀/ 성장·회복
보호 기간	24시간~7일 이내	3개월씩 2회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 한도내에서 추가 연장(최장 24개월)	3년 이내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4년)	1년 이내 (연장 6개월 이내 2회까지 가능)	6개월 (1회 연장 가능, 최장 12개월)
개소	33	67	38	13	18

*2026년 3월 기준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5).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현황.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며, 이용형과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19~24세 청소년 중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예정 및 퇴소 청소년, 유관기관 추천 청소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직접지원서비스(주거, 생활, 건강, 안전, 자립, 법률)와 자립지원서비스(상담심리, 교육, 자립, 활동)를 제공한다. 자립지원 사례관리는 1년간 제공하고, 사후관리는 6개월간 실시한다(성평등가족부, 2025).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1호 처분 위탁 청소년을 보호하며, 범죄와의 단절 및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의 비행 및 탈선 예방, 정서적 예방, 가정 및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주거, 생활지도 및 훈육,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규모 대안가정 형태로 운영한다(성평등가족부, 2025).

청소년사업안내에 제시된 시설 설치 기준은 공통적으로 사무실, 상담실(공간), 비상재해 대비시설은 모두 제시되어 있다. 이동형 일시쉼터는 차량과 휴게공간, 숙직을 해야 하는 시설은 숙직실, 비숙박형 자립 이용시설 외 시설은 입지조건, 건물(시설)형태, 침실, 조리실・식당, 화장실・목욕실, 세탁건조장, 단체활동실이 공통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크게 숙박형/비숙박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공간 구성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김영한, 2023). 면적기준은 1인당 11㎡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각 시설 간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크며, 아동복지시설과 단순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어(황진구・김지연, 2020),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김영한(2023)은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1인당 11㎡ 면적, 상담실 16.5㎡, 상호교류실 6.6㎡, 침실 1실당 단기 3명, 중장기 2명 이하 등을 제안하였다.

<표 II-4> 청소년복지시설 시설 기준

구분	일시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 시설
	이동형	고정형		숙박형	비숙박형	
입지조건	○		○	○	○	○
건물(시설)형태	○	차량	○	○	○	○
침실	○		○	○		○
조리실 식당	○		○	○		○
화장실 목욕실	○		○	○	○ (화장실)	○
세탁건조장	○		○	○		○
상담실(상담공간)	○	○	○		○	○
단체활동실	○		○			
사무실	○	○	○	○ (상담실, 숙직실과 통합운영 가능)	○상담실과 통합운영 가능)	○ (상담실, 숙직실과 통합운영가능)
숙직실			○	○		○
비상재해 대비시설	○	○	○	○	○	○

주) 연구자가 청소년사업안내 각 청소년복지시설의 시설 안내를 참고로 재구성함

청소년복지시설 인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설 유형별로 인력 수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일시,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고정인력으로 제시되어 있다. 단기청소년쉼터는 청소년 10인 미만 시설 보호·상담원 최소 2인을 배치하고, 청소년 10명 이상의 경우 청소년 5명당 당 상담원 1인이 추가 배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사업안내의 2025년 실제 인건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복지시설의 법적 배치인원보다 더 많은 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일시청소년쉼터는 거리아웃리치전문인력, 단기와 중장기청소년쉼터는 야간근무인력, 청소년자립지원관에는 자립지원요원이 추가배치되었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법에서 제시한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로 채용해야 한다. 청소년복지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직위별로 동일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다. 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으로 청소

년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자격증을 적정하게 인정하고 있다.

<표 II-5> 청소년복지시설 인력 구성

단위: 명

	일시 청소년 쉼터	단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지 원시설
		10명 미만	10~15 명 미만	15~20 명 미만	20~25 명 미만			
시설장	1	1	1	1	1	1	1	1
보호·상담원	4	2	3	5	6	2	-	1
자립지원요원	-	-	-	-	-	-	1	-
행정원/조리원	1	1	1	1/1	1/1	1	1	-
법적 기준의 합계	6	4	5	8	9	4	3	2
2025년 인건비 지원 인원	이동형 8(보호5+거리3)	6(보호4+거리1+야간1)	14인미만 6(보호5+야간1)	8 (보호8)	10 (보호9+야간1)	6 (보호5+야간1)	이용형 6	3
	10(보호5+거리3+야간2)		14인 7 (보호5+야간2)				혼합형 6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간 15시간 이상 업무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최 직무연수 6시간 필수 포함). 종사자의 안전대책 준수 의무로, 폭염 및 한랭 등 기후 변화에 직접 노출되는 거리상담(아웃리치) 활동 시 근로자 휴게시간(1시간당 10~15분 휴식 등) 보장, 기후 악화 시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2) 청소년복지시설의 변화

지속적인 가정 밖 청소년의 증가와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 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의 청소년복지시설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일시적 보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보호를 넘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기반으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사회복귀,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전달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소년복지시설이다. 2010년 83개소에서 2026년 기준 전국 169개소로 확대되어 운영되면서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 사회복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일시청소년쉼터는 거리상담 및 긴급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단기청소년쉼터와 중장기청소년쉼터 역시 안정적인 보호와 자립준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충되었다. 물리적인 확충에 더하여 청소년쉼터는 단순 보호시설의 역할을 넘어 사례관리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상담전문요원과 야간보호상담원을 배치하여 위기청소년 발굴과 응급상황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초기에는 긴급보호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점차 상담, 사례관리, 학업지원, 자립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전문적인 청소년복지시설로 발전하였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이후에도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0년 인천광역시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8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형(비숙박형)과 혼합형(숙박형)으로 유형이 구분되었으며, 같은 해 최초로 국비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후 운영매뉴얼 개발,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급, 종합평가 실시 등을 통해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18년 4개소에서 2025년 기준 13개소로 확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내용 역시 단순 주거지원 중심에서 사례관리, 금융교육, 진로설계, 취업지원, 건강관리, 생활기술훈련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사회 공공서비스와 민간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자립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도입은 청소년복지정책이 보호 중심에서 자립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비행이나 반복적인 일탈 행동으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생활지도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과거에는 선도와 보호 중심의 접근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회복적 관점에 기반한 치료와 사회통합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2019년 기존 청소년회복지원센터 운영 특례가 종료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체계가 정비되면서 운영기준과 회계기준, 안전관리 기준이 표준화되었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구조를 강화하였다. 2025년 기준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단순 보호시설이 아니라 회복과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업훈련기관 등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보호 종료 이후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연계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자립지원 대상이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전체로 확대되면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나.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청소년복지시설 현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성평등가족부의 동의를 획득하여 내부시스템의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다.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변수로는 시설유형, 시설 수, 지역, 보호청소년의 성별, 정원, 현원, 시설물 형태, 시설 건령, 건물규모, 시설의 소유주체, 시설의 소유형태를 포함하였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변수로는 성별, 연령, 소지 자격증(복수응답), 지역, 고용형태, 40시간 이상 근로 여부를 포함하였다.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현황 자료는 2021년~2025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획득하였고, 변수로는 성별 이용자 수, 연간 이용자 수, 이용기간(평균, 최대), 보호기간별 이용자 비중, 재입소 건수, 재입소 사례의 직전 퇴소 사유, 청소년복지시설 기관 연계 현황을 포함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Stata 18.0을 활용하였다.

2026년 5월 기준 총 169개 청소년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시설구분에서는 청소년쉼터가 138개로 81.6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18개로 10.65%였으며 청소년자립지원관이 13개 7.69%로 가장 적었다. 청소년쉼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기청소년쉼터가 67개로 44.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장기청소년쉼터가 38개로 25.17%, 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이 19개로 12.58%, 일시청소년쉼터 이동형이 14개로 9.27% 순이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이용형이 7개, 혼합형은 6개였다.

<표 II-6> 전체 시설 현황

N=169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시설구분	청소년쉼터	138	81.66	보호청소년성별	남		58	34.32
	청소년자립지원관	13	7.69		둘 다 해당		44	26.0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8	10.65		여		67	39.64
지역	강원	9	5.33	시설유형 (N=151)	단기청소년쉼터		67	44.37
	경기	38	22.49		이용형		7	4.64
	경남	10	5.92		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19	12.58
	경북	7	4.14		일시청소년쉼터 (이동형)		14	9.27
	광주	6	3.55		중장기청소년쉼터		38	25.17
	대구	7	4.14		혼합형		6	3.97
	대전	9	5.33	시설물형태	단독건물		96	56.8
	부산	9	5.33		아파트		6	3.55
	서울	19	11.24		연립주택		8	4.73
	울산	6	3.55		상가건물		36	21.3
	인천	10	5.92		기타		23	13.61
	전남	4	2.37	소유주체	민간		32	18.93
	전북	7	4.14		법인		89	52.66
	제주	9	5.33		지자체		48	28.4
	충남	11	6.51	소유형태	소유		89	52.66
	충북	8	4.73		임대		80	47.34
설치주체 및 운영형태				구분	mean	SD	최소	최대
개인민간운영(설치신고)		10	5.92	정원 (N=156)	12.71	7.29	6	50
법인민간운영(설치신고)		86	50.89	현원 (N=147)	9.32	6.95	0	32
지자체 공공위탁(공립)		8	4.73	건령	27.35	12.27	1	65
지자체 민간위탁(공립)		65	38.46	규모 (N=154)	586.2	1,985.7	59.2	21,369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38개로 2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서울이 19개로 11.24%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 11개로 6.51%, 경남과 인천이 각각 10개로 5.92%, 강원, 대전, 부산, 제주는 각각 9개로 5.33%, 충북 8개로 4.73%, 경북, 대구, 전북은 각각 7개로 4.14%, 광주와 울산은 각각 6개로 3.5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4개로 2.37%를 기록하여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종시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시설 분류는 여성 전용 시설이 67개로 39.6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남성 전용 시설이 58개로 34.32%였으며 남녀 둘 다 해당하는 시설은 44개로 26.04%를 기록하여 가장 적었다. 이들 청소년복지시설의 정원은 평균 12.71명이며 표준편차는 7.29명, 최솟값은 6명, 최댓값은 50명으로 나타났다. 시설 현원의 경우에는 평균 9.32명이고 표준편차는 6.95이며 최솟값은 0명, 최댓값은 32명으로 조사되었다.

시설물 형태의 경우 단독건물이 96개로 56.80%를 차지하며 과반수로 가장 많았고 상가건물이 36개로 21.30%, 기타 형태가 23개로 13.61%, 연립주택이 8개로 4.73% 순이었으며 아파트는 6개로 3.55%를 차지해 가장 적었다. 시설의 건령은 평균 27.35년이며 표준편차는 12.27년, 최솟값은 1년, 최댓값은 65년으로 나타났다. 건물규모를 살펴보면 평균 586.2제곱미터이며 표준편차는 1,985.7, 최솟값은 59.2제곱미터, 최댓값은 21,369제곱미터로 나타났다.

시설의 소유주체는 법인이 89개로 52.6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자체가 48개로 28.40%였으며 민간은 32개로 18.93%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소유형태는 자가 소유가 89개로 52.66%를 차지하여 임대 형태인 80개인 47.34%보다 많았다. 시설의 설치주체 및 운영형태를 보면 법인민간운영 설치신고 형태가 86개로 50.89%를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자체 민간위탁 공립 형태가 65개로 38.46%, 개인민간운영 설치신고 형태가 10개로 5.92% 순이었으며 지자체 공공위탁 공립 형태가 8개로 4.73%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시설유형별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는 경기와 서울이 각각 4개로 21.0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인천과 강원이 각각 2개로 10.53%였으며 경북, 광주, 전남, 충남, 충북은 0개로 가장 적었다.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는 서울이 4개로 28.57%를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경기가 2개로 14.29%였으며 경남,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충남은 0개로 가장 적었다. 단기청소년쉼터는 경기도가 18개로 26.8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충남이 8개로 11.94%를 차지하여 그 뒤를 이었으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제주는 각각 2개로 2.99%를 기록해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청소년쉼터의 경우 경기도가 8개로 21.0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이 4개로 10.53%였으며 부산, 인천, 전남은 각각 1개로 2.63%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이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경기도가 2개로 28.57%를 기록하여 가장 많았고 강원, 대구, 대전, 서울, 제주가 각각 1개로 14.29%씩 존재하였으며 경남을 비롯한 나머지 10개 지역은 0개로 가장 적었다.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인천이 2개로 33.33%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경기, 부산, 서울, 충남이 각각 1개로 16.67%였으며 강원을 비롯한 나머지 11개 지역은 0개로 가장 적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경남이 4개로 2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기와 부산이 각각 3개로 16.67%였으며 강원, 경북, 대구, 서울, 인천, 전남, 충남은 0개로 가장 적었다.

<표 II-7> 시설유형별 지역 현황

구분		일시 쉼터 (고정형)		일시 쉼터 (이동형)		단기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용형		혼합형		회복 지원 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역	강원	2	10.53	1	7.14	3	4.48	2	5.26	1	14.29	0	0	0	0
	경기	4	21.05	2	14.29	18	26.87	8	21.05	2	28.57	1	16.67	3	16.67
	경남	1	5.26	0	0	3	4.48	2	5.26	0	0	0	0	4	22.22
	경북	0	0	0	0	4	5.97	3	7.89	0	0	0	0	0	0
	광주	0	0	1	7.14	2	2.99	2	5.26	0	0	0	0	1	5.56
	대구	1	5.26	1	7.14	2	2.99	2	5.26	1	14.29	0	0	0	0
	대전	1	5.26	1	7.14	2	2.99	2	5.26	1	14.29	0	0	2	11.11
	부산	1	5.26	1	7.14	2	2.99	1	2.63	0	0	1	16.67	3	16.67
	서울	4	21.05	4	28.57	5	7.46	4	10.53	1	14.29	1	16.67	0	0
	울산	1	5.26	0	0	2	2.99	2	5.26	0	0	0	0	1	5.56
	인천	2	10.53	1	7.14	4	5.97	1	2.63	0	0	2	33.33	0	0
	전남	0	0	0	0	3	4.48	1	2.63	0	0	0	0	0	0
	전북	1	5.26	0	0	3	4.48	2	5.26	0	0	0	0	1	5.56
	제주	1	5.26	1	7.14	2	2.99	2	5.26	1	14.29	0	0	2	11.11
	충남	0	0	0	0	8	11.94	2	5.26	0	0	1	16.67	0	0
	충북	0	0	1	7.14	4	5.97	2	5.26	0	0	0	0	1	5.56

시설유형별 보호청소년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는 둘 다 해당하는 시설이 17개로 89.47%를 나타내 대다수였으며 남성과 여성 전용 시설은 각각 1개로 5.26%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는 둘 다 해당하는 시설이 14개로 100% 전체를 차지하였고 남성과 여성 전용 시설은 0개로 가장 적었다. 단기청소년쉼터는 여성 전용 시설이 38개로 56.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남성 전용 시설이 29개로 43.28%였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여성 전용 시설이 21개로 55.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남성 전용 시설이 17개로 44.74%로 나타났다. 이용형 자립지원관은 둘 다 해당하는 시설이 7개로 100% 전체를 차지하였고 남성과 여성 전용 시설은 0개로 가장 적었다. 혼합형 자립지원은 둘 다 해당하는 시설이 6개로 100% 전체를 차지하였고 남성과 여성 전용 시설은 0개로 가장 적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남성 전용 시설이 11개로 61.11%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여성 전용 시설이 7개로 38.89%였으며 둘 다 해당하는 시설은 0개로 가장 적었다.

<표 II-8> 시설유형별 보호청소년 성별 현황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혼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호 청소년 성별	남	1	5.26	0	0	29	43.28	17	44.74	0	0	0	0	11	61.11
	둘다 해당	17	89.47	14	100	0	0	0	0	7	100	6	100	0	0
	여	1	5.26	0	0	38	56.72	21	55.26	0	0	0	0	7	38.89

시설유형별 시설물 형태를 살펴보면,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는 단독건물이 11개로 57.8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가건물이 6개로 31.58%였으며 연립주택은 0개로 가장 적었다.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는 단독건물이 9개로 64.2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가건물이 3개로 21.43%였으며 아파트는 0개로 나타났다. 단기청소년쉼터는 단독건물이 35개로 52.2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상가건물이 17개로 25.37%였으며 연립주택이 2개로 2.99%를 기록해 가장 적았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단독건물이 23개로 60.53%를 기록해 과반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상가건물이 6개로 15.79%였으며 아파트는 0개로 가장 적었다. 이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단독건물이 4개로 57.14%를 차지해 가장 높

은 비중을 보였고 기타가 3개로 42.86%였으며 상가건물, 아파트, 연립주택은 0개로 가장 적었다.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단독건물이 3개로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가 2개로 33.33%였으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0개로 가장 적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단독건물이 11개로 61.11%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상가건물이 3개로 16.67%였으며 기타와 연립주택이 각각 1개로 5.56%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표 II-9> 시설유형별 시설물 형태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혼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설물 형태	기타	1	5.26	1	7.14	10	14.93	5	13.16	3	42.86	2	33.33	1	5.56
	단독건물	11	57.89	9	64.29	35	52.24	23	60.53	4	57.14	3	50	11	61.11
	상가건물	6	31.58	3	21.43	17	25.37	6	15.79	0	0	1	16.67	3	16.67
	아파트	1	5.26	0	0	3	4.48	0	0	0	0	0	0	2	11.11
	연립주택	0	0	1	7.14	2	2.99	4	10.53	0	0	0	0	1	5.56

시설유형별 소유주체를 살펴보면,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는 지자체가 9개로 47.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법인이 6개로 31.58%였으며 민간이 4개로 21.05%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는 법인이 7개로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자체가 4개로 28.57%였으며 민간이 3개로 21.43%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단기청소년쉼터는 법인이 33개로 49.25%를 나타내 가장 많았고 지자체가 25개로 37.31%였으며 민간이 9개로 13.43%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법인이 25개로 65.7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민간이 7개로 18.42%였으며 지자체가 6개로 15.79%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이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법인이 6개로 85.71%를 기록해 대다수였고 지자체가 1개로 14.29%였으며 민간은 0개로 가장 적었다.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법인이 3개로 50%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지자체가 2개로 33.33%였으며 민간이 1개로 16.67%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법인이 9개로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민간이 8개로 44.44%였으며 지자체가 1개로 5.56%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표 II-10> 시설유형별 소유주체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혼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유 주체	민간	4	21.05	3	21.43	9	13.43	7	18.42	0	0	1	16.67	8	44.44
	법인	6	31.58	7	50	33	49.25	25	65.79	6	85.71	3	50	9	50
	지자체	9	47.37	4	28.57	25	37.31	6	15.79	1	14.29	2	33.33	1	5.56

시설유형별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는 임대가 11개로 57.89%를 차지해 소유인 8개인 42.11%보다 많았고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는 소유가 9개로 64.29%를 기록해 임대인 5개인 35.71%보다 많았다. 단기청소년쉼터는 자가 소유가 45개로 67.16%를 기록해 임대 형태인 22개인 32.84%보다 많았고 중장기청소년쉼터는 임대가 24개로 63.16%를 차지해 소유인 14개인 36.84%보다 많았다. 이용형 청소년자립지원관도 소유가 5개로 71.43%를 기록해 임대인 2개인 28.57%보다 많았다.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소유와 임대가 각각 3개로 50%씩 동일하게 나타났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역시 임대가 13개로 72.22%를 기록해 소유인 5개인 27.78%보다 많았다.

<표 II-11> 시설유형별 소유형태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혼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유 형태	소유	8	42.11	9	64.29	45	67.16	14	36.84	5	71.43	3	50	5	27.78
	임대	11	57.89	5	35.71	22	32.84	24	63.16	2	28.57	3	50	13	72.22

시설유형별 설치주체 및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는 민간 법인과 위탁 민간이 각각 9개로 47.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위탁 공공이 1개로 5.26%였으며 민간 개인은 0개로 가장 적었다.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는 위탁 민간이 7개로 50%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민간 법인이 5개로 35.71%였으며 민간 개인과 위탁 공공이

각각 1개로 7.14%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단기청소년쉼터는 민간 법인이 37개로 55.22%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위탁 민간이 24개로 35.82%였으며 민간 개인은 0개로 가장 적었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민간 법인이 20개로 52.6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위탁 민간이 17개로 44.74%였으며 위탁 공공은 0개로 가장 적었다. 이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위탁 민간이 5개로 71.43%를 나타내 가장 많았고 민간 법인이 2개로 28.57%였으며 민간 개인과 위탁 공공은 0개로 가장 적었다.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민간 법인이 4개로 66.6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위탁 민간이 2개로 33.33%였으며 민간 개인과 위탁 공공은 0개로 가장 적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민간 법인이 9개로 50%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민간 개인이 8개로 44.44%였으며 위탁 공공은 0개로 가장 적었다.

<표 II-12> 시설유형별 설치주체 및 운영형태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혼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설치 주체 운영 형태	민간	개인	0	0	1	7.14	0	0	1	2.63	0	0	0	0	8	44.44
		법인	9	47.37	5	35.71	37	55.22	20	52.63	2	28.57	4	66.67	9	50
	위탁	공공	1	5.26	1	7.14	6	8.96	0	0	0	0	0	0	0	0
		민간	9	47.37	7	50	24	35.82	17	44.74	5	71.43	2	33.33	1	5.56

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총 1,321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현황을 보면, 우선 시설구분에서는 청소년쉼터 종사자가 1,166명으로 88.2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가 88명으로 6.66%였으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가 67명으로 5.07%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시설유형별 종사자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청소년쉼터가 590명으로 47.0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장기청소년쉼터가 269명으로 21.45%, 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이 199명으로 15.87%, 일시청소년쉼터 이동형이 108명으로 8.61%, 이용형이 46명으로 3.67% 순이었으며 혼합형 종사자가 42명으로 3.35%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성별은 여성 종사자가 839명으로 63.51%를 차지해 남성 종사자인 482명인 36.49%보다 많았다. 학력 수준은 학사 학위 소지자가 842명으로 63.74%를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석사가 266명으로 20.14%, 전문학사가 115명으로 8.71%, 고졸이 61명으로 4.62%, 박사가 35명으로 2.65% 순이었으며 중졸은 2명으로 0.15%에 그쳐 가장 적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자격증 소지 현황에서는 사회복지사가 1,003명으로 48.3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청소년지도사가 445명으로 21.44%, 청소년상담사가 304명으로 14.64%, 기타 자격이 222명으로 10.70%, 교원자격증이 72명으로 3.47% 순이었으며 임상심리사는 30명으로 1.44%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종사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30대가 389명으로 29.45%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50대가 349명으로 26.42%, 20대가 274명으로 20.74%, 40대가 248명으로 18.77%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은 61명으로 4.62%를 기록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사된 종사자들의 실제 나이는 평균 41.07세이며 표준편차는 11.57, 최솟값은 22세, 최댓값은 78세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46명으로 26.19%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9명으로 13.55%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 91명으로 6.89%, 충남 74명으로 5.60%, 강원 73명으로 5.53%, 부산 63명으로 4.77%, 제주 62명으로 4.69%, 대전 60명으로 4.54%, 대구와 충북이 각각 56명으로 4.24%, 경남 53명으로 4.01%, 경북 49명으로 3.71%, 전북 47명으로 3.56%, 울산 40명으로 3.03%, 광주 39명으로 2.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33명으로 2.50%를 차지해 종사자 수가 가장 적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012명으로 76.61%를 기록해 대다수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기간제가 238명으로 18.02%, 무기직이 71명으로 5.37% 순이었으며 무보수는 2명으로 0.15%를 차지해 가장 적었다. 급여형태는 호봉제가 1,085명으로 82.13%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연봉제가 230명으로 17.41%였으며 시간제는 4명으로 0.30%를 차지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의 경우 주간근무가 761명으로 57.61%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교대근무가 307명으로 23.24%였으며 야간근무는 253명으로 19.15%를 차지해 가장 적었다.

마지막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예라고 응답한 종사자가 1,237명으로 93.64%를 차지해 대다수였으며 아니오는 84명으로 6.36%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종사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14시간이며 표준편차는 9.00, 최솟값은 9시간,

최댓값은 168시간으로 확인되었다.

<표 II-13> 전체 종사자 현황

N=1,321

항목		빈도	비율	항목		빈도	비율
시설 구분	청소년쉼터	1,166	88.27	지역	강원	73	5.53
	청소년자립지원관	88	6.66		경기	346	26.19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7	5.07		경남	53	4.01
시설 유형 (N=1,254)	단기청소년쉼터	590	47.05		경북	49	3.71
	이용형 청소년자립지원관	46	3.67		광주	39	2.95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199	15.87		대구	56	4.24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108	8.61		대전	60	4.54
	중장기청소년쉼터	269	21.45		부산	63	4.77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	42	3.35		서울	179	13.55
성별	남	482	36.49		울산	40	3.03
	여	839	63.51		인천	91	6.89
학력	고졸	61	4.62		전남	33	2.5
	박사	35	2.65		전북	47	3.56
	석사	266	20.14		제주	62	4.69
	전문학사	115	8.71		충남	74	5.6
	중졸	2	0.15		충북	56	4.24
	학사	842	63.74	고용 형태	기간제	238	18.02
자격 (복수)	사회복지사	1,003	48.31		무기직	71	5.37
	청소년상담사	304	14.64		정규직	1,012	76.61
	청소년지도사	445	21.44		무보수	2	0.15
	임상심리사	30	1.44	급여 형태	시간제	4	0.3
	교원자격증	72	3.47		연봉제	230	17.41
	기타	222	10.70		호봉제	1,085	82.13
연령	20대	274	20.74	근무 형태	교대근무	307	23.24
	30대	389	29.45		야간근무	253	19.15
	40대	248	18.77		주간근무	761	57.61
	50대	349	26.42	주 40시간 이상 근로	예	1,237	93.64
	60대 이상	61	4.62		아니오	84	6.36

구분	mean	SD	최소	최대	구분	mean	SD	최소	최대
연령	41.07	11.57	22	78	근로 시간	41.14	9.00	9	168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는 경기도가 46명으로 23.1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42명으로 21.11%였으며 경북, 광주, 전남, 충남, 충북은 0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는 서울이 32명으로 29.6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경기도가 16명으로 14.81%였으며 경남,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충남은 0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II-14>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지역 현황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혼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역	강원	20	10.05	6	5.56	27	4.58	14	5.2	6	13.04	0	0	0	0
	경기	46	23.12	16	14.81	180	30.51	66	24.54	16	34.78	6	14.29	16	23.88
	경남	10	5.03	0	0	20	3.39	12	4.46	0	0	0	0	11	16.42
	경북	0	0	0	0	28	4.75	21	7.81	0	0	0	0	0	0
	광주	0	0	7	6.48	14	2.37	14	5.2	0	0	0	0	4	5.97
	대구	10	5.03	7	6.48	19	3.22	14	5.2	6	13.04	0	0	0	0
	대전	9	4.52	9	8.33	18	3.05	12	4.46	6	13.04	0	0	6	8.96
	부산	11	5.53	8	7.41	20	3.39	7	2.6	0	0	6	14.29	11	16.42
	서울	42	21.11	32	29.63	63	10.68	28	10.41	6	13.04	8	19.05	0	0
	울산	10	5.03	0	0	12	2.03	15	5.58	0	0	0	0	3	4.48
	인천	21	10.55	8	7.41	38	6.44	6	2.23	0	0	18	42.86	0	0
	전남	0	0	0	0	27	4.58	6	2.23	0	0	0	0	0	0
	전북	10	5.03	0	0	21	3.56	13	4.83	0	0	0	0	3	4.48
	제주	10	5.03	8	7.41	14	2.37	14	5.2	6	13.04	0	0	10	14.93
	충남	0	0	0	0	57	9.66	13	4.83	0	0	4	9.52	0	0
	충북	0	0	7	6.48	32	5.42	14	5.2	0	0	0	0	3	4.48

단기청소년쉼터는 경기도가 180명으로 30.51%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63명으로 10.68%였으며 울산이 12명으로 2.03%를 차지해 가장 적었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경기도가 66명으로 24.54%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28명으로 10.41%였으며 인천과 전남이 각각 6명으로 2.23%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이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경기도가 16명으로 34.78%를 나타내 가장 많았고 강원, 대구, 대전, 서울, 제주가 각각 6명으로 13.04%였으며 경남을 비롯한 나머지 10개 지역은 0명으로 가장 적었다.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인천이 18명으로 42.86%를 나타내 가장 많았고, 서울이 8명으로 19.05%였으며 강원을 포함한 나머지 11개 지역은 0명으로 가장 적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경기도가 16명으로 23.88%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경남과 부산이 각각 11명으로 16.42%였으며 강원, 경북, 대구, 서울, 인천, 전남, 충남은 0명으로 가장 적었다.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도 여성 종사자가 103명으로 51.76%를 기록해 남성 종사자인 96명인 48.2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는 남성 종사자가 59명으로 54.63%를 차지해 여성 종사자인 49명인 45.37%보다 많았다. 단기청소년쉼터는 여성 종사자가 405명으로 68.64%를 기록해 남성 종사자인 185명인 31.36%보다 많았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여성 종사자가 181명으로 67.29%를 나타내 남성 종사자인 88명인 32.71%보다 많았고 이용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역시 여성 종사자가 32명으로 69.57%를 차지해 남성 종사자인 14명인 30.43%보다 많았다.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 또한 여성 종사자가 26명으로 61.90%를 차지해 남성 종사자인 16명인 38.10%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도 여성 종사자가 43명으로 64.18%를 기록해 남성 종사자인 24명인 35.82%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II-15>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성별 현황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혼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종사자 성별	남	96	48.24	59	54.63	185	31.36	88	32.71	14	30.43	16	38.1	24	35.82
	여	103	51.76	49	45.37	405	68.64	181	67.29	32	69.57	26	61.9	43	64.18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는 학사가 141명으로 70.8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석사가 35명으로 17.59%였으며 중졸은 0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는 학사가 78명으로 72.2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석사가 15명으로 13.89%였으며 중졸은 0명으로 가장 적었다. 단기청소년쉼터는 학사 학위 소지자가 370명으로 62.7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석사가 115명으로 19.49%였으며 중졸이 2명으로 0.34%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학사가 155명으로 57.62%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석사가 69명으로 25.65%였으며 중졸은 0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학사가 35명으로 76.09%를 나타내 가장 많았고 석사가 8명으로 17.39%였으며 고졸과 중졸은 0명으로 가장 적었다.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학사가 25명으로 59.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석사가 13명으로 30.95%였으며 박사와 중졸은 0명으로 가장 적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학사가 38명으로 56.72%를 나타내 가장 많았고 석사가 11명으로 16.42%였으며 중졸은 0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II-16>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학력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혼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력	고졸	2	1.01	2	1.85	39	6.61	12	4.46	0	0	1	2.38	5	7.46
	박사	4	2.01	2	1.85	12	2.03	10	3.72	2	4.35	0	0	5	7.46
	석사	35	17.59	15	13.89	115	19.49	69	25.65	8	17.39	13	30.95	11	16.42
	전문학사	17	8.54	11	10.19	52	8.81	23	8.55	1	2.17	3	7.14	8	11.94
	중졸	0	0	0	0	2	0.34	0	0	0	0	0	0	0	0
	학사	141	70.85	78	72.22	370	62.71	155	57.62	35	76.09	25	59.52	38	56.72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는 30대가 66명으로 3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20대가 51명으로 25.63%였으며 60대 이상은 4명으로 2.01%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는 30대가 42명으로 38.89%를 기

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20대가 33명으로 30.56%였으며 60대 이상은 1명으로 0.93%를 나타내 가장 적었다. 단기청소년쉼터는 50대 종사자가 178명으로 30.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가 150명으로 25.42%였으며 60대 이상은 32명으로 5.42%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30대가 83명으로 30.8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50대가 70명으로 26.02%였으며 60대 이상은 14명으로 5.20%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이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30대가 16명으로 34.78%를 나타내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각각 11명으로 23.91%였으며 60대 이상은 0명으로 가장 적었다.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30대가 23명으로 54.76%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40대가 9명으로 21.43%였으며 60대 이상은 0명으로 가장 적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50대가 35명으로 52.24%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10명으로 14.93%였으며 20대는 6명으로 8.96%를 나타내 가장 적었다.

<표 II-17>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연령대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혼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20대	51	25.63	33	30.56	129	21.86	37	13.75	11	23.91	7	16.67	6	8.96
	30대	66	33.17	42	38.89	150	25.42	83	30.86	16	34.78	23	54.76	9	13.43
	40대	38	19.1	17	15.74	101	17.12	65	24.16	11	23.91	9	21.43	7	10.45
	50대	40	20.1	15	13.89	178	30.17	70	26.02	8	17.39	3	7.14	35	52.24
	60대 이상	4	2.01	1	0.93	32	5.42	14	5.2	0	0	0	0	10	14.93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는 정규직이 142명으로 71.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간제가 47명으로 23.62%였으며 무기직이 10명으로 5.03%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는 정규직이 85명으로 78.70%를 나타내 가장 많았고 기간제가 14명으로 12.96%였으며 무기직이 9명으로 8.33%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단기청소년쉼터는 정규직이 448명으로 75.9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간제가 105명으로 17.80%였으며 무기직이 37명으로 6.27%를 기록해 가

장 적었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정규직이 219명으로 81.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간제가 45명으로 16.73%였으며 무기직이 5명으로 1.86%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이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정규직이 34명으로 73.91%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기간제가 7명으로 15.22%였으며 무기직이 5명으로 10.87%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정규직이 28명으로 66.67%를 나타내 가장 많았고 기간제가 9명으로 21.43%였으며 무기직이 5명으로 11.90%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정규직이 56명으로 83.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간제가 11명으로 16.42%였으며 무기직은 0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II-18>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고용형태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혼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고용형태	기간제	47	23.62	14	12.96	105	17.8	45	16.73	7	15.22	9	21.43	11	16.42
	무기직	10	5.03	9	8.33	37	6.27	5	1.86	5	10.87	5	11.9	0	0
	정규직	142	71.36	85	78.7	448	75.93	219	81.41	34	73.91	28	66.67	56	83.58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급여형태를 살펴보면,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는 호봉제가 158명으로 79.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연봉제가 41명으로 20.60%였으며 무보수와 시간제는 0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는 호봉제가 95명으로 87.96%를 나타내 가장 많았고 연봉제가 13명으로 12.04%였으며 무보수와 시간제는 0명으로 가장 적었다. 단기청소년쉼터는 호봉제가 467명으로 79.15%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연봉제가 122명으로 20.68%였으며 시간제는 0명으로 가장 적었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호봉제가 237명으로 88.1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연봉제가 31명으로 11.52%였으며 시간제는 0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호봉제가 45명으로 97.83%를 차지해 대다수였고 연봉제가 1명으로 2.17%였으며 무보수와 시간제는 0명으로 가장 적었다.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호봉제가 35명으로 83.3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연봉제가 5명으로 11.90%였으며 무보수는 0명으로 가장 적었다. 청소년회복지원

시설은 호봉제가 48명으로 71.64%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연봉제가 17명으로 25.37%였으며 무보수는 0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II-19>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급여형태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혼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급여 형태	무보수	0	0	0	0	1	0.17	1	0.37	0	0	0	0	0	0
	시간제	0	0	0	0	0	0	0	0	0	0	2	4.76	2	2.99
	연봉제	41	20.6	13	12.04	122	20.68	31	11.52	1	2.17	5	11.9	17	25.37
	호봉제	158	79.4	95	87.96	467	79.15	237	88.1	45	97.83	35	83.33	48	71.64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는 주간근무가 116명으로 58.2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교대근무가 43명으로 21.61%였으며 야간근무가 40명으로 20.10%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는 교대근무가 68명으로 62.9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간근무가 30명으로 27.78%였으며 야간근무가 10명으로 9.26%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단기청소년쉼터는 주간근무가 355명으로 60.17%를 나타내 가장 많았고, 야간근무가 131명으로 22.20%였으며 교대근무가 104명으로 17.63%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주간근무가 154명으로 57.25%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야간근무가 64명으로 23.79%였으며 교대근무가 51명으로 18.96%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이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주간근무가 46명으로 100% 전체를 차지하였고, 교대근무와 야간근무는 0명으로 가장 적었다.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주간근무가 31명으로 73.81%를 나타내 가장 많았고, 교대근무가 7명으로 16.67%였으며 야간근무가 4명으로 9.52%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교대근무가 34명으로 50.7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간근무가 29명으로 43.28%였으며 야간근무가 4명으로 5.97%를 기록해 가장 적었다.

<표 II-20>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근무형태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혼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근무 형태	교대근무	43	21.61	68	62.96	104	17.63	51	18.96	0	0	7	16.67	34	50.75
	야간근무	40	20.1	10	9.26	131	22.2	64	23.79	0	0	4	9.52	4	5.97
	주간근무	116	58.29	30	27.78	355	60.17	154	57.25	46	100	31	73.81	29	43.28

마지막으로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주 40시간 이상 근로 여부를 살펴보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예라고 응답한 종사자는 단기청소년쉼터 537명(91.02%), 이용형 청소년자립지원관 46명(100%),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 185명(92.96%),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 108명(100%), 중장기청소년쉼터 258명(95.91%),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3명(94.03%),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 40명(95.24%)으로 모든 시설유형에서 예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아니오라는 응답은 이용형과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의 0명을 포함하여 모두 최소 비중을 나타냈다.

<표 II-21>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주 40시간 이상 근로여부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혼합형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40시간 이상 근로	예	185	92.96	108	100	537	91.02	258	95.91	46	100	40	95.24	63	94.03
	아니오	14	7.03	0	0	53	8.98	11	4.09	0	0	2	4.76	4	5.97

라.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현황

전체 청소년쉼터의 현원은 2021년 817명에서 2023년 930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800명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5개년 평균 현원은 약 869명이다.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균형(약 1:1)을 이루고 있으나, 2025년에는 여성(475명)이 남성(415명)보다 다소 많아졌다. 쉼터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기청소년쉼터가 전체 현원의 가장 큰 비중(연평균 약 60~70%)을 차지하고 있고, 중장기청소년쉼터는 매년 230~240명 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고정형)는 현원 규모 자체는 작으며, 연도별 변동성이 다소 있는 편이다.

<표 II-22> 청소년쉼터 현원

구분	청소년쉼터														
	전체			일시청소년쉼터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단기청소년쉼터			중장기청소년쉼터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21년	817	409	408	15	6	9	32	20	12	530	265	265	240	118	122
2022년	844	430	414	19	7	12	22	15	7	569	289	280	234	119	115
2023년	930	471	459	-	-	-	62	29	33	629	330	299	239	112	127
2024년	864	422	442	-	-	-	26	16	10	600	292	308	238	114	124
2025년	890	415	475	2	2	-	37	17	20	613	290	323	238	106	132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현원을 살펴보면, 연도별 현원 추이에서 서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1년 276명에서 2024년 352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현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5년은 351명으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연도별 편차가 큰데,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여성이 늘어난 반면, 2025년에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21년 98명에서 2023년 132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5년에는 114명을 기록하였다. 5개년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 현원의 비중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다.

<표 II-23>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현원

구분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계	남	여	계	남	여
2021년	276	122	154	98	52	46
2022년	298	117	181	126	83	43
2023년	311	118	193	132	80	52
2024년	352	127	225	124	70	54
2025년	351	143	208	114	73	41

일시청소년쉼터의 연간 이용자 수는 연간 2만~2만 8천 명 선이다. 전체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약 2.1만 명에서 2022년 약 2.86만 명으로 급증한 이후, 2.4만~2.5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이용자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50:50에 가깝게 맞아떨어진다. 일시청소년쉼터의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 이용자가 전체의 약 60~80%를 차지하여 주를 이룬다.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는 연간 3,500~4,800명 수준의 이용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II-24> 일시청소년쉼터 연간 이용자 수

구분	전체				청소년쉼터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계	남	여	무응답	계	남	여	무응답	계	남	여	무응답
2021년	21,475	10,302	11,173	-	4,147	1,495	2,652	-	1,632	5,980	5,652	-
2022년	28,627	13,742	14,885	-	3,937	1,588	2,349	-	18,749	9,398	9,351	-
2023년	24,654	12,079	12,493	82	3,516	2,047	1,412	57	15,311	7,971	7,316	24
2024년	24,233	12,002	12,231	-	3,591	1,901	1,690	-	15,321	7,752	7,569	-
2025년	25,441	12,226	13,215	-	4,801	2,263	2,538	-	15,154	7,628	7,526	-

현원 규모와 마찬가지로 연간 이용자 수에서도 단기청소년쉼터가 중장기청소년쉼터보다 이용자 수가 훨씬 더 많게 나타난다. 단기청소년쉼터 연간 이용자는 매년 4,700~5,200명 수준이다. 현원 통계와 달리, 연간 총 이용자 수에서는 여성 청소년의 비율이 남성보다 매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중장기청소년쉼터 연간 이용자는 2021년 753명에서 2025년 486명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전

반적으로 여성 이용자가 남성 이용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II-25> 단기청소년쉼터와 중장기청소년쉼터 연간 이용자 수

구분	청소년쉼터							
	단기청소년쉼터				중장기청소년쉼터			
	계	남	여	무응답	계	남	여	무응답
2021년	4,943	2,434	2,509	-	753	393	360	-
2022년	5,192	2,348	2,844	-	749	408	341	-
2023년	5,147	2,341	2,805	1	680	355	325	-
2024년	4,796	2,117	2,679	-	525	231	294	-
2025년	5,000	2,125	2,875	-	486	210	276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연간 이용자 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계 600명대 수준으로 이용자 규모가 증가하였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연간 이용자 수가 200~300명대 사이에서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연도별 증감 변동 폭이 있는 편이다.

<표 II-26>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연간 이용자 수

구분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계	남	여	계	남	여
2021년	466	209	257	269	147	122
2022년	516	232	284	358	229	129
2023년	584	237	347	333	199	134
2024년	624	246	378	377	218	159
2025년	634	249	385	356	217	139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기간은 18.29~22.45일로 20일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시설유형별로 이용기간을 살펴보면,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은 2024년 40.74일에서 2025년 7.21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은 2~3일 정도 머무르며, 2024년은 4.84일로 가장 길었다. 단기 쉼터는 43.36~54.93일로 1~2개월 정도 머무르고 있었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179.01~354.95일로 연도별 편차가 있었는데,

2024~2025년의 이용기간이 300일 내외로 긴 편이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339.97~422.35일 정도로 1년 내외로 이용하는 편이었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161.90~176.73일로 5~6개월 정도 이용하는 편이었다. 이러한 이용기간은 시설유형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한편, 최대 이용기간은 쉼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의 최대 이용기간은 587~1,849일로 4년이 넘는 경우도 있었고,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의 최대 이용기간은 184~614일로 1년이 훌쩍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일시이용이라는 일시청소년쉼터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단기청소년쉼터의 최대 이용기간은 1,820~5,274일로 14년이 넘는 경우도 있었고, 중장기청소년쉼터의 최대 이용기간은 2,360~3,523일로 10년 가까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최대 이용기간은 404~610일이었다.

<표 II-27> 2021~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이용기간

단위: 일

구분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전체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2021년	평균	22.45	24.36	2.62	44.87	203.13	339.97	172.09
	최대	3,508	1,849	409	1,820	3,508	917	564
2022년	평균	18.94	27.73	2.21	43.36	179.01	421.26	171.78
	최대	3,260	1,360	614	2,310	3,260	912	404
2023년	평균	20.92	20.62	2.47	53.49	201.05	394.48	176.73
	최대	5,274	1,498	184	5,274	2,360	1,322	470
2024년	평균	22.30	40.74	4.84	54.93	298.82	405.79	168.31
	최대	3,109	1,524	464	2,128	3,109	1,532	573
2025년	평균	18.29	7.21	2.51	48.81	354.95	422.35	161.90
	최대	3,523	587	275	2,289	3,523	1,105	610

○ 산출 방식
- 모수: 조회 기간 중 종결(퇴소 및 이용종료)한 사례
- 이용 기간: 사례종료일 - 사례시작일 + 1 (당일 포함)

※ 최소 이용기간은 1일이므로 제외하였음
※ 2023년은 시스템 변경(2023.06.01.)에 따라 2개 시스템 실적을 합산하였음
이에 따라서, 일부 중복 실적 혹은 오입력된 실적이 존재할 수 있음
※ 일시쉼터(이동형)는 사례등록 필수기관이 아니기에 청소년안전망시스템 등록이 선택적임. 일시이동과 단기쉼터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반복적 재입소, 청소년 개인적 사유, 실무자의 사례 미종결 등에 따른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2021~2025년까지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이용기간 구성은 <표 Ⅱ-28>과 같다. 일시청소년쉼터 이동형은 3개월 미만이 9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은 3개월 미만이 98.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단기청소년쉼터는 3개월 미만이 8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4%,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3.3%였다.

<표 Ⅱ-28> 2021～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보호기간별 이용자 비중

단위: 명(%)

구분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계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2025년	계	18,668 (100.0)	937 (100.0)	13,105 (100.0)	4,378 (100.0)	248 (100.0)	283 (100.0)	242 (100.0)
	3개월 미만	17,910 (95.9)	919 (98.1)	13,091 (98.9)	3,802 (86.8)	98 (39.5)	20 (7.1)	46 (19.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34 (1.8)	6 (0.6)	11 (0.8)	281 (6.4)	36 (14.5)	29 (10.3)	150 (62.0)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76 (0.9)	7 (0.8)	3 (0.2)	145 (3.3)	21 (8.5)	29 (10.3)	38 (1.7)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0 (0.4)	2 (0.2)	-	53 (1.2)	15 (6.1)	51 (18.0)	4 (1.7)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63 (0.3)	-	-	37 (0.9)	26 (10.5)	70 (24.7)	3 (1.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52 (0.3)	3 (0.3)	-	31 (0.7)	18 (7.3)	44 (15.6)	1 (0.4)
	24개월 이상	63 (0.3)	-	-	29 (0.7)	34 (13.7)	40 (14.1)	-

○ 산출 방식
- 모수: 조회 기간 중 종결(퇴소 및 이용종료)한 사례
- 보호기간: months_between(사례종료일, 사례시작일)

※ 2023년은 시스템 변경(2023.06.01.)에 따라 2개 시스템 실적을 합산하였음
이에 따라서, 일부 중복 실적 혹은 오입력된 실적이 존재할 수 있음

※ 일시쉼터(이동형)는 사례등록 필수기관이 아니기에 청소년안전망시스템 등록이 선택적임. 일시이동과 단기쉼터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반복적 재입소, 청소년 개인적 사유, 실무자의 사례 미종결 등에 따른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중장기청소년쉼터는 3개월 미만이 39.5%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4.5%, 24개월 이상 13.7% 순이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이 24.7%로 가장 많았고, 9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8.0%,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6% 순이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62.0%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쉼터(전체)는 50% 수준의 재입소 건수가 있었고, 재입소 사례의 직전 퇴소 사유는 가정 복귀가 대부분이었고, 타시설 연계, 군입대, 입원 등, 보호기간 만료 순이었다. 재입소 건수의 직전 퇴소 사유 중 강제 및 무단 퇴소 비율은 22.9%였다.

<표 II-29> 2021~2025년 청소년쉼터 재입소 현황

단위: 건

청소년쉼터(전체)	사례등록건수	재입소건수(총계)	재입소 사례의 직전 퇴소 사유												
			기간만료 및 연계, 합의에 의한 퇴소							강제 및 무단퇴소					
			소계	가정복귀	경제적 자립	기숙(대안)학교	타시설 연계	군입대, 입원 등	보호기간 만료	기타 퇴소	소계	법률형 집행	강제 퇴소	무단 퇴소
2021년	15,776	8,810	8,666	3,614	73	72	758	611	449	3,089	144	15	56	**73**
2022년	18,465	10,312	10,143	4,716	163	64	713	487	459	3,541	169	13	57	**99**
2023년	18,919	9,571	9,458	3,629	175	16	1,160	457	394	3,627	113	10	21	**82**
2024년	18,113	9,830	9,682	4,266	491	-	2,090	34	405	2,396	148	7	22	**119**
2025년	18,723	9,656	9,517	4,218	753	-	1,984	38	309	2,215	139	14	14	**111**

청소년쉼터(단기·중장기)는 30~40% 정도 재입소하였고, 재입소 사례의 직전 퇴소 사유는 가정 복귀가 대부분이었고, 타시설 연계, 경제적 자립 순이었다. 재입소 건수의 직전 퇴소 사유 중 강제 및 무단 퇴소 비율은 2.8%였다.

<표 II-30> 2021~2025년 단기 및 중장기청소년쉼터 재입소 현황

단위: 건

청소년쉼터(단기·중장기)	사례등록 건수	재입소 건수(총계)	재입소 사례의 직전 퇴소 사유											
			기간만료 및 연계, 합의에 의한 퇴소								강제 및 무단퇴소			
			소계	가정복귀	경제적 자립	기숙(대안)학교	타시설 연계	군입대, 입원등	보호기간 만료	기타 퇴소	소계	법률형 집행	강제 퇴소	무단 퇴소
2021년	4,842	1,750	1,663	977	46	56	131	148	49	256	87	11	38	38
2022년	5,133	2,185	2,109	1,203	59	42	184	93	87	441	76	7	37	32
2023년	5,014	1,963	1,906	859	80	13	181	40	52	681	57	7	12	38
2024년	4,439	1,620	1,580	836	94	-	241	18	34	357	40	3	4	33
2025년	4,627	1,718	1,670	893	164	-	294	24	27	268	48	10	3	35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10% 수준의 재입소 건수가 있었고, 재입소 사례의 직전 퇴소 사유는 감호위탁만료가 대부분이었고, 6~10호 처분변경, 무단이탈, 시설부적응 사유도 있었다.

<표 II-31> 2021~2025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재입소 현황

단위: 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사례등록건수	재입소 건수(총계)	재입소 사례의 직전 퇴소 사유							
			감호위탁만료	감호위탁 취소			감호위탁 기관 변경			기타
				감형	6~10호 처분변경	무단이탈	기관폐업	학업(진학, 전학등)	시설부적응	
2021년	189	18	8		8	-				2
2022년	259	13	9	-	-	1	-	-	-	3
2023년	221	15	2	-	2	1	-	-	-	10
2024년	251	27	15	-	1	3	-	-	-	8
2025년	238	28	12	-	3	2	-	-	1	10

2023년 6월부터 2025년까지 청소년쉼터 기관 연계 현황은 <표 II-32>와 같다. 일시청소년쉼터에서 단기청소년쉼터로 연계된 사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단기청소년쉼터에서 중장기청소년쉼터로 연계된 사례가 많았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청소년쉼터로 연계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기관 연계 접수 시 70~90% 정도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 2023년 6월~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기관 연계 현황

단위: 명

구분	청소년쉼터													
	전체		일시→단기		일시→중장기		단기→중장기		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쉼터		그 외 *청소년복지시설 내	
	전체	접수승인	전체	접수승인	전체	접수승인	전체	접수승인	전체	접수승인	전체	접수승인	전체	접수승인
2023년 6~12월	148	110	58	46	11	10	7	7	-	-	2	2	70	45
2024년	348	268	168	132	14	10	26	21	6	6	-	-	134	99
2025년	452	398	187	171	11	10	31	28	14	11	-	-	209	178

○ 산출 방식
- 청소년복지시설 행정지원시스템(~2023.05.31.): 청소년안전망시스템 개발에 따라 연계 메뉴 개발을 중단하였음
- 청소년안전망시스템(2023.06.01.~): 단위업무(청소년쉼터 등) 선택 → 입퇴소관리 → 연계의뢰에 등록된 건 수

※ 그 외 *청소년복지시설: 동일한 시설 유형 내 연계, 중장기→일시, 중장기→단기, 단기→일시 등을 포함

2023년 6월부터 2025년까지 청소년자립지원관 기관 연계 현황은 <표 II-33>과 같다. 단기청소년쉼터에서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연계된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시청소년쉼터에서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연계된 건 수가 많았다. 접수승인률은 90% 이상이었다.

<표 II-33> 2023년 6월~2025년 청소년자립지원관 기관 연계 현황

단위: 명

청소년자립지원관											
전체		일시 →청소년자립지원관		단기 →청소년자립지원관		중장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청소년 자립지원관		그 외 *청소년복지 시설 내	
전체	접수 승인	전체	접수 승인	전체	접수 승인	전체	접수 승인	전체	접수 승인	전체	접수 승인
11	9	9	8	1	-	-	-	1	1	-	-
24	19	3	2	16	13	4	4	-	-	1	-
61	56	21	21	29	25	7	7	-	-	4	3

○ 산출 방식
- 청소년복지시설 행정지원시스템(~2023.05.31.): 청소년안전망시스템 개발에 따라 연계 메뉴 개발을 중단하였음
- 청소년안전망시스템(2023.06.01.~): 단위업무(청소년쉼터 등) 선택 → 입퇴소관리 → 연계의뢰에 등록된 건 수

※ 그 외 *청소년복지시설: 동일한 시설 유형 내 연계, 중장기→일시, 중장기→단기, 단기→일시 등을 포함

3. 소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출경험은 2013년 5.1%에서 2024년 3.0%로 감소하고 있으나, 가출원인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10년 동안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 가출하는 비율은 12.8%p 낮아지고, 부모님과의 갈등, 가정폭력, 가정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출의 비율이 높아졌다. 위기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40%에 해당하는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은 가정폭력 경험으로 가출한 이유가 45.0%이다. 이는 자립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 복귀가 어려워,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자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이 많음을 시사한다. 또한 원가정과의 관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의 건강관련 이슈도 최근 주목해야 하는 이슈이다.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고, 고립감에서도 일반청소년(14.0%)보다 위기청소년(59.1%)이 45.1%p 높다. 우울감과 자해 등 내적 정신건강 문제

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위기청소년은 가정 내 폭력 외에도 또래로부터의 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도 일반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출 이후 청소년쉼터에 머문 비율은 30.2%에 그쳐 제도권 보호 체계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다수임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쉼터 입소과정의 문제 혹은 청소년쉼터로 자진 입소도 중요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 발굴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제 가정 밖 청소년의 문제는 단순한 '가출 비행'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학대 및 안전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청소년쉼터는 초기에는 긴급보호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점차 상담, 사례관리, 학업지원, 자립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전문적인 청소년복지시설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쉼터 행정데이터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쉼터의 설치에 있어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위기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과도 관련이 있다. 청소년의 거주 지역에 청소년쉼터가 없으면, 청소년들은 거리를 배회하거나 노숙, 또는 가출팸을 형성할 가능성이 큼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각 청소년쉼터 이용률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중장기청소년쉼터 연간 이용자는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전반적으로 연간 이용자 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청소년복지시설 전체 재입소율은 50%를 넘고 있다. 그리고 각 청소년복지시설의 법적 이용기간을 비교적 준수하고 있으나, 특정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쉼터의 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일시청소년쉼터 1~4년, 단기청소년쉼터 14년, 중장기청소년쉼터 약 10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6년 등의 장기이용 청소년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동안 청소년의 문제가 단기간 해결되지 않은 점,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실패를 경험한다는 점, 현재의 청소년쉼터 보호기간의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III.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해외사례

1.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해외 사례 개요

가정 해체, 학대, 빈곤, 학업 중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사회적 과제이다. 이들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 없이는 노숙, 범죄, 약물, 인신매매 등 더 깊은 위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보호에서부터 장기 자립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미국・영국・캐나다・독일・일본・싱가포르 5개국의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특히 쉼터 및 자립지원시설 제도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제도적 특성과 핵심 모델을 파악하고, 한국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국가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을 선정하였고, 아시아 국가로 일본과 싱가포르를 선정하여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가. 서비스 연속체 개념과 국제 동향

위기청소년 지원시설은 단일 유형의 시설로는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의 상황과 자립 준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계되는 '서비스 연속체(Continuum of Care)'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내외의 서비스 연속체 논의들을 살펴보면, 서비스 연속체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각국은 이 연속체를 법률과 예산 체계 내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며, 민간 비영리 위탁, 정부 직영, 민간 운영 등 운영 주체도 다양하다. 최근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위기청소년 시설 운영의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규모 수용시설보다 가정형 보호인 소규모 그룹홈・지역사회 산재형 주거가 선호되고 있다. 둘째, Housing First 원칙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교육・취업 등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먼저 안정적 주거를 제공한 후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의 효과성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셋째, 보호

종료 이후 자립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시설 퇴소 후 고위험 시기에 대한 집중 사후관리 기간이 연장되는 추세이다. 넷째, 청소년 권리 관점의 적용이 강화되고 있다. 시설 내 청소년의 의견 반영, 케어 플랜 참여권, 비밀 보장 등 권리 중심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표 III-1> 위기청소년 지원시설의 유형

단계	유형	주요 기능	기간
1단계	긴급보호·위기개입	즉각적 안전 확보, 의식주 제공, 가족연락	수일~3주
2단계	단기 쉼터	안정화, 개인상담, 욕구사정, 연계계획 수립	1~6개월
3단계	전환거주·자립훈련	생활기술 훈련, 학업·취업 지원, 독립 준비	6개월~2년
4단계	자립 사후관리	독립 주거 연계, 사례관리 지속, 재통합 지원	퇴소 후 1~2년

2. 해외 사례 검토

가. 미국

1) 법·제도적 기반

미국의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체계는 1974년에 제정된 「가출 청소년 법(Runaway Youth Act)」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가출·홈리스 청소년 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RHYA)」으로 발전하였다. 이 법은 연방 보건부(HHS) 산하 가족청소년서비스국(FYSB)의 관리 아래 전국의 민간 비영리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이 되었다. 특히 2022년에는 「가출·노숙 청소년 및 인신매매 예방법(RHYTPA)」으로 재수권되면서 인신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고, 현재 2025년 재수권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National Network for Youth, 2025). 미국의 이와 같은 시스템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민간이 주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결과 전국 각지에 법률에 기반한 자생적인 3단계 서비스 연속체가 유기적으로 형성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ACF, 202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박희진 외, 2026).

2) 지원 제도

이 연속체의 첫 단계인 '기본센터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 BCP)'은 18세 미만의 가출 및 노숙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21일간의 긴급 보호를 제공한다. BCP는 긴급 숙식과 의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집단·가족 상담 및 위기개입을 수행하며, 사후관리 서비스와 더불어 가족 재결합 또는 위탁가정이나 쉼터 등의 대안을 배치 및 연계한다. 특히 BCP는 단순한 임시 보호를 넘어 가족 관계 회복을 통한 가족 재결합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ACF, 202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박희진 외, 2026).

다음 단계인 '전환거주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TLP)'은 16세에서 22세 사이의 노숙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18개월 동안 성인으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 한국의 청소년자립지원시설과 유사하다. TLP는 그룹홈이나 산재형 아파트와 같은 안전한 장기 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금전 관리, 요리, 청소, 임대차 계약 등 자립에 필수적인 생활기술 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업 지속과 고졸 동등학력 취득을 돕고 취업 준비 및 직업훈련을 연계하며,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 내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모자 그룹홈'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은 거주 기간 동안 사례관리자와의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받게 된다(ACF, 2026; Youth.gov, 2026).

마지막으로 '스트리트 아웃리치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 SOP)'은 위기청소년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전담 아웃리치 워커가 직접 거리로 나가 거리 생활 청소년 및 성착취·인신매매 위험 청소년을 발굴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 SOP는 거리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식품과 위생용품 등 긴급 생존 물품을 제공하고, 성착취 및 인신매매 예방 교육과 개입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쉼터·의료·법률 서비스로 청소년들을 연계한다(ACF, 2026). 이 프로그램은 National Runaway Safeline의 24시간 위기 상담 핫라인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ACF, 2026).

또한 Safe Place라는 민관 거점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소방서, 도서관, 편의점 등에서 위기청소년이 언제 어디서든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허민숙, 2024). 최근에는 Housing First 모델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Housing First는

조건 없이 주거공간을 먼저 제공하고,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모델로, 최근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안정된 주거공간을 먼저 제공함으로써 더 빠르게 정서가 안정되고, 자립의지 및 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송아영, 2021).

나. 영국

1) 법·제도적 기반

영국의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는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1989)」과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 2004)」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특히 2004년 아동법은 '모든 아동이 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s)'는 의제를 법제화하여,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3).

주거 지원 측면에서는 2017년 홈리스 감소법(Homelessness Reduction Act)을 제정하여 홈리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홈리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 책임이 있다. 대상은 홈리스상태에 있는 누구나이지만 16, 17세는 아동법과 주거법에서 모두 의무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우선필요 범주로 명시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재난재해로 집이 없거나 집이 적정주거공간이 아닐 때, 가정폭력피해를 입었을 때, 주거비 감당이 어려울 때, 건강과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때 등의 상황에 있는 16, 17세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 된다. 16, 17세 청소년이 홈리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는 즉시 임시 거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호시설을 떠나는 보호종료아동(Care Leaver)에 대해서는 2000년에 제정된 「아동 이탈(청소년을 위한) 법(Children (Leaving Care) Act 2000)」에 의거하여, 21세까지(경우에 따라 25세까지) 전담 개인 어드바이저를 배정하고 맞춤형 경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원가정복귀, 친족과의 거주 가능성을 확인하지만, 청소년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가지 않을 수 있다(Shelter England, 2025; 허민숙, 2024).

2) 지원 제도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운영되는 'Foyer(포이에르) 모델'은 1990년대 초 영국이 프랑스의 청년 기숙사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개발한 독창적인 청소년 전환 주거 모델이

다. 당시 영국에서는 기술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직업이 없어 집을 구할 수 없고, 반대로 집이 없어 직업도 구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Foyer는 이러한 이중 장벽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주거와 교육・훈련・취업을 통합한 접근법으로 설계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35개소 이상이 운영되어 시설별로 30~40명 내외의 16세에서 25세 사이 주거 위기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 모델은 입주 시 '학습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이나 취업 참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거를 제공하되, 청소년이 독립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기한 없는 거주'를 원칙으로 삼아 강제 퇴소로 인한 재노숙을 방지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자아 효능감과 성취 경험을 중시하는 발달적 접근을 취하며 학습공간, 컴퓨터실, 공동라운지, 정원 등의 공용 시설을 통해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모델의 질 관리와 인증은 1992년에 설립된 Foyer 연합이 담당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호주(14개소 이상)와 캐나다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IGH, 2026; Your Housing Group, 2026).

더불어 영국은 자립준비청소년만을 위한 촘촘한 자립 지원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퇴소 전에는 개인별 주거, 교육, 취업, 건강 계획을 포함하는 경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퇴소 후에는 21세(최대 25세)까지 지정된 개인 어드바이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삶을 지원한다. 재정적 지원으로는 자립준비청소년이 25세 미만인 경우 1인 가구 기준의 주거급여를 우대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와 함께 가정 내 빈방을 제공받아 머물면서 요리나 금전 관리 등 구체적인 자립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 단계 거주 형태인 '지원형 숙박(Supported Lodgings)' 프로그램과 독립 주거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Programme)도 혼용하여 제공하고 있다(박희진 외, 2026).

다. 캐나다

1) 법・제도적 기반

캐나다는 연방국가의 특성상 주(Province)별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관련 법률과 서비스 체계가 다르게 운영된다. 연방 차원에서는 공공안전부(Public Safety Canada)의 국가범죄예방전략(NCPS)이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하며, 온타

리오 주나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 등 주요 주 정부는 독자적인 아동·청소년 복지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캐나다 사회에서 청소년 노숙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국 청소년 노숙 허브(Homeless Hub)는 캐나다 전역의 쉼터와 전환거주 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체계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Government of Canada, 2021; Homeless Hub, 2026).

2) 지원 제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캐나다의 주요 비영리 단체들은 16~24세 청소년을 타깃으로 다채로운 전환거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토론토의 'YouthLink'는 최대 21개월 동안 아파트형 독립 거주를 지원하며, 오타와의 'Youth Services Bureau'는 성별을 분리한 긴급 쉼터와 전환거주, 장기거주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YMCA 토론토'는 긴급 쉼터와 더불어 캐나다 최초로 성소수자(2SLGBTQIA+) 청소년에게 특화된 전환거주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Covenant House'는 토론토와 밴쿠버를 중심으로 긴급 쉼터와 전환거주 프로그램(TLP)을 영국의 Foyer 모델과 통합하여 운영 중이다. 캐나다 전환거주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별성은 청소년의 민족, 성별, 성적 지향 등 개별적 정체성을 깊이 고려한 특화 서비스가 고도로 발달했다는 점인데, 퍼스트 네이션, 이누이트, 메티스 등 원주민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안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Homeless Hub, 2026; Youth Services Bureau, 2026).

한편, 캐나다는 Foyer 모델 외에도 'Housing First(주거 최우선)'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Gaetz, 2019; 박희진 외, 2026). 이 모델은 교육이나 취업 참여 등의 전제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즉시 안정적인 주거를 먼저 제공한 후,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사후 연계한다는 회복 지향적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캐나다 노숙연구소(Canadian Observatory on Homelessness)의 정의에 따르면, 주거 안정이 다른 모든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에서 이 모델이 출발한다. 학습 계약 같은 조건을 일절 부과하지 않는 '조건 없는 주거 우선 제공', 시설 집중 거주보다는 지역사회에 흩어져 사는 것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통합', 그리고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원 서비스 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다. 현재 온타리오 트릴리엄 재단(Ontario Trillium Foundation)의 재정 지원을 받아 Youth Services Bureau 등의 기관이 Housing First 원칙을 기존 전환거주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으

며, 비록 Foyer 모델과 Housing First 모델이 서로 다른 철학적 기반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의 욕구에 따라 두 모델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Homeless Hub, 2026; 송아영, 2021; YSB, 2026).

라. 독일

1) 법·제도적 기반

독일의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체계는 「사회법전 제8편 아동·청소년복지법(Sozialgesetzbuch Achtes Buch – Kinder- und Jugendhilfe, SGB VIII)」을 핵심 법적 근거로 삼는다. 동 법은 1991년 1월 1일 시행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연방·주(Länder)·지방자치단체의 3단계 책임 구조를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지원·보호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규율한다(김응수, 2018; kinder-jugendhilfe.info, 2025;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1990).

행정 체계 측면에서 연방가족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가 법·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16개 주 정부가 이를 구체화하며, 실무 서비스는 전국의 지역 청소년청(Jugendamt)이 담당한다(김응수, 2018). 독일 SGB VIII의 특징은 공공 부문과 민간 복지기관(Wohlfahrtsverbände — Caritas, Diakonie, AWO, DRK, Paritätischer 등)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충성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을 채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간 복지단체가 1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청소년청은 조정·감독·자원 미충족 시 직접 개입의 역할을 수행한다(kinder-jugendhilfe.info, 2025).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강화법(Kinder- und Jugendstärkungsgesetz, KJSG)」이 시행되어 SGB VIII이 대폭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보호종료청소년(Care Leaver)의 자립 지원 강화, 사후돌봄 의무화, 장애아동 통합지원 일원화(2028년 시행 예정) 등이다. 특히 이 개정으로 청소년청은 지원 종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필요 시 재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게 되었다(Careleaver e.V., 2022; IGFH, 2021).

2) 지원제도

독일 위기청소년 지원시설은 SGB VIII의 단계적 개입 원칙에 따라 긴급보호→단기거주→중장기 그룹홈→자립지원의 연속체로 운영된다.

가) 긴급보호(Inobhutnahme)

긴급보호는 독일 위기청소년 지원의 첫 번째 관문으로, 지역 청소년청이 법적 의무로 시행한다. 청소년청은 청소년이 스스로 보호를 요청하거나, 위험 상황이 확인되거나, 보호자 없이 입국한 외국 미성년자인 경우 즉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긴급보호 기간 동안 청소년은 적합한 가정, 시설 또는 기타 주거 형태에 임시 배치되며, 청소년청은 생계·의료 지원, 신뢰인 연락, 보호자 통보,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Bundesministerium der Justiz, 1990).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연간 약 45,400건의 긴급보호조치가 시행되었다. 보호자가 긴급보호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정식 지원계획(Hilfeplanverfahren) 절차가 개시된다. 긴급보호조치는 즉각성과 법적 의무성이 핵심이며,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신속한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Grokipedia, 2026).

청소년사회사업은 사회적 불이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취업,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포괄적 제도이다. 27세까지 적용 가능하며, 거리 아웃리치(Mobile Jugendarbeit/Streetwork), 직업훈련 연계, 청소년 이주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특히 직업훈련과 주거 지원을 결합한 취업연계형 거주 지원은 자립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전환 지원을 제공한다(Bundesministerium der Justiz. 1990).독일의 Mobile Jugendarbeit/Streetwork는 위기청소년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청소년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는 아웃리치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미국 SOP, 싱가포르 Youth GO!와 유사하다.

나) 거주형 교육지원(Heimerziehung)

거주형 교육지원은 가정 밖에서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주거 지원 서비스이다. 일상생활과 교육·치료적 지원을 결합하여 청소년의 발달을 촉진하며, 원가정 복귀, 위탁가정 전환, 또는 자립을 위한 장기 거주 형태를 목표로 설계된다(Bundesministerium der Justiz., 1990). 운영 형태는 크게 그룹홈, 집중적 소

규모 그룹홈, 개별 지원 거주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룹홈은 6~8명 규모로 다양한 연령 혼합 구성, 사회화 기능을 강조하며 대형 복지기관(예, Caritas, Diakonie)이 운영한다. 집중 소규모 그룹홈은 4~6명 규모로 심리적 문제 및 복합 위기 청소년에게 특화된 모델이며, 사회교육을 지원한다. 개별지원 거주는 1~2명 규모로 준독립 주거에 가깝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원한다. 자립전환단계의 지원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이용 연령은 16~21세이다.

2021년 기준 145,052명의 청소년·청년이 거주형 돌봄을 이용하였으며, 이 중 약 60%가 복수 그룹 시설, 36%가 단일 그룹 시설, 4%가 개별지원 거주 형태에 배치되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 수는 87%나 증가하여 12,400개소에 달했으며, 이는 독일이 대규모 시설 중심에서 소규모 분산형 시설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다(kinder-jugendhilfe.info, 2025).

다) 청년자립지원 및 사후돌봄

독일은 18세 이후에도 자립 역량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경우 21세까지(개별 사정에 따라 최대 27세까지) 교육·훈련·취업·주거 지원을 지속하도록 규정한다. 2021년 KJSG 개정으로 이 권리는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되었으며, 125,025명의 18~26세 청년이 해당 지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kinder-jugendhilfe.info, 2025).

2021년 KJSG 개정을 통해 '사후돌봄(Nachbetreuung)'을 공식 제도화하였다. 지원 종료 이후에도 청소년청은 정기적으로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연락하고, 지원이 조기 종료되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재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Care Leaver 단체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입법 성과로, 보호 종료 후 노숙·학업 중단·심리 문제 등이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Careleaver e.V., 2022). 또한 보호종료청소년의 자기 부담금 상한이 본인 소득의 25%로 제한되어, 경제적 이유로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마. 일본

1) 법・제도적 기반

일본의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체계는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을 핵심 축으로 삼아 움직인다. 아동복지법 제6조의3 및 제33조의6에 따라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이 제2종 사회복지사업으로 법적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립지원홈이 설치・운영된다. 아동복지법에는 지방정부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책임이 명시되어 있고, 시정촌과 도도부현이 역할을 구분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시정촌과 도도부현은 위기청소년 발굴 시 상호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도도부현은 아동상담소를 설치하여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관 부처는 후생노동성이며, 실무적으로는 아동상담소가 위기청소년의 입소를 결정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일본은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케어 플랜 수립 시 아동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어 2024년 개정에서는 보호 중인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체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더욱 강화하였다(Nippon.com, 2025; Rossitto, 2020; 愛知県福祉局児童家庭課, 2026.4.10 추출; 全国自立援助ホーム協議会, 2026.4.10 추출).

2) 지원 제도

일본의 위기 대응 체계는 일시보호와 중장기 거주 체계로 나뉜다. 전국 아동상담소에 부설되어 운영되는 '일시보호소'는 학대, 비행, 가출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일시 보호한다.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마다 도도부현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기간을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김혁, 2019). 이곳에서는 학교에 가는 대신 시설 내에서 학습을 제공받으며, 향후 연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심리 판정과 행동 관찰,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후 중장기 거주가 필요한 청소년들은 '아동양호시설'로 연계되어 18세(필요한 경우 22세까지 연장 가능)까지 생활하게 되는데, 2018년 기준 전국 608개소에 약 2만 7천 명의 청소년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에는 대규모 시설 형태에서 벗어나 소규모화 및 지역분산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약 6명 내외의 소인원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거주하는

패밀리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Rossitto, 2020; 愛知県福祉局児童家庭課, 2026; 全国自立援助ホーム協議会, 2021).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무교육을 수료한 후 아동양호시설 등을 퇴소한 청소년들이 사회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전, 과도기적 단계에서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이 바로 '자립援助ホーム(Jiritsu Enjo Home)'이다. 입소 대상은 의무교육 수료 후부터 20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20세 이상도 거주가 가능하다. 운영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 형식으로 민간 NPO 등 비영리 법인이 주로 담당하며, 이용 청소년들은 시설별로 상이하나 대략 월 2~3만 엔 내외의 이용료를 지불한다. 이 홈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시설장 및 직원들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치료 기능을 한다는 철학 아래, 청소년에게 '당연한 일상생활'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개인별 역량에 맞춘 취업 지원과 직업 체험을 연계하고, 금전 관리, 요리,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기술에 대한 촘촘한 생활지도를 병행한다. 무엇보다 퇴소 후에도 '언제든 다시 돌아와도 좋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전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자유로운 상담을 보장한다. 2021년에는 퇴소 후 갑작스러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최대 10만 엔 한도의 무이자 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 사업의 구심점인 '전국자립援助ホーム협의회'는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후생노동성과 지자체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 제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입소 청소년들의 평균 입소 기간은 1.1년, 입소 경로의 43.3%는 복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愛知県福祉局児童家庭課, 2026; 全国自立援助ホーム協議会, 2021).

바. 싱가포르

1) 법・제도적 기반

싱가포르의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체계는 정부 부처인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가 중심이 되어 일원화된 구조로 총괄・관리한다. 핵심 법률인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명령, 돌봄 명령, 법원 명령 등을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

다. 전체적인 지원 인프라는 MSF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직영 시설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발적 복지기관의 이중 체계로 견고하게 맞물려 있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은 국가범죄예방재활위원회(NCPR)가 담당하는데, 여기에는 MSF를 비롯해 교육부, 내무부, 법원, 검찰 등 7개 유관 기관과 다양한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원팀으로 참여하여 사각지대를 방지한다(MSF, 2019; MSF, 2026; Social Collaborative Singapore, 2026).

2) 지원 제도

정부가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거주시설로는 MSF가 직접 경영하는 '싱가포르 청소년의 집(Youth Homes)'이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 남자 청소년의 집'과 '싱가포르 여자 청소년의 집'으로 분류된다. 이곳의 입소 대상은 사법부로부터 법원 명령을 받은 재활 목적의 청소년들과 행정적 돌봄·보호 명령을 받은 위기청소년들이다. 시설 내에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교육 지속성을 엄격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MOE) 소속 정규 교사들을 시설 내부로 직접 파견하여 소규모 학급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과 교육을 실시하며, 일정한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청소년에게는 시설 밖 기존 학교로의 통학도 허용한다. 연령과 학력 수준에 맞춰 직업교육학교(ITE)와 연계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재원 기간 중 부모의 정기적 방문과 가정 외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가족 유대감과 관계 회복을 도모하며, 퇴소 시점이 되면 가족 복귀를 최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친족 보호, 임대주택 또는 호스텔 연계 순으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 MSF는 이러한 직영 시설 외에도 민간 비영리 기관이 운영하는 소규모 거주형 시설인 '허가된 거주시설(Licensed Residential Homes, LRH)'의 인허가 및 감독을 총괄하며, 돌봄·보호 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성공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Boys' Town Singapore, 2026; Fei Yue Community Services, 2026; MSF, 2020).

싱가포르 위기청소년 정책의 가장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면모는 바로 '사후관리(Post-Care) 체계'의 과감한 확충에서 드러난다. 싱가포르 정부는 시설 내부에서의 치료만큼이나 퇴소 후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단계에서의 '재활의 연속성'이 재발 방지에 결정적이라는 인식 하에, 2019년 Youth Home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보장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퇴소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자

발적 복지기관(VWO) 파트너가 배정한 사후관리 담당자가 시설 안으로 미리 찾아와 청소년과 밀착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퇴소 이후에는 청소년이 지닌 환경적 위험 수준과 개별적 욕구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지원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도별 차등 지원을 실시하며, 학교 복귀나 취업 선도, 건전한 취미 기반의 집단 참여 등 사회적 지지망을 연결해 준다. 최근에는 데이터 통합을 기반으로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 기관 간의 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계하는 '지역화 커뮤니티 네트워크(LCN)'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퇴소 청소년들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안전망을 고도화하고 있다(MSF, 2019; MSF, 2020; MSF, 2026).

3. 소결

해외 6개국의 사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Ⅲ-2>와 같다. 6개국 모두 위기청소년을 위하여 법을 기반으로 연속체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서비스 분절이나 누락을 막기 위한 연속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다. 긴급, 일시보호부터 중장기,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국가별로 지원 기간이나 모델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관심질문 중 하나인 지원기간에 따른 시설유형 구분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겠다. 기간에 따라 시설이 가장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BCP(긴급・최대 21일), TLP(전환거주・최대 18개월), SOP(거리 아웃리치)가 법률상 별개 프로그램으로 각각 다른 기관이 운영하고, 보조금 체계도 분리되어 있다. 다만 Covenant House처럼 한 기관이 여러 단계를 모두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단계별로 분리 운영이 원칙이지만, Foyer는 긴급 호스텔(단기)과 전환거주를 사실상 통합한 독특한 형태이다. 그런데 입주 기한을 두지 않아서 단기와 중장기 경계가 흐릿하다. 긴급 상황은 별도 호스텔에서 처리하고, 안정화된 후 Foyer로 이동하는 구조이다. 캐나다는 기관에 따라 다르다. YMCA나 YSB처럼 긴급 쉼터・전환거주・장기거주를 모두 한 기관 내에서 단계별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물리적으로는 별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표 III-2> 해외 사례 요약

항목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법적 근거	RHYA (1974~)	아동법 1989·2004	주별 아동복지법	SGB VIII (1991~) → KJSG 2021 개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법
핵심 모델	3단계 서비스 연속체	Foyer 모델	Foyer + Housing First	3단계 거주형 교육지원 + 사후돌봄	자립지원 홈	직영 Youth Home
긴급 보호	BCP (최대 21일)	긴급 호스텔	긴급 쉼터	긴급보호 법적 의무 즉각 배치	일시보호소 (~2개월)	수사·보호 명령
전환 거주	TLP (최대 18개월)	Foyer (기한 없음)	THP (최대 21개월)	Heime그룹 홈·소규모 홈·개별거주 (기간: 사정에 따라 결정)	자립지원 홈 (~평균 1.1년)	Youth Home + LRH
사후 관리	사후관리 서비스	PA (최대 25세까지)	Housing First 서비스	재지원 의무화	퇴소 후 상담 지속	1년 Post-Care
운영 주체	민간 비영리 (연방보조금)	지방정부 주거협회·자선단체	YMCA 등 비영리	청소년청, 민간 NPO	지방정부 민간 NPO	MSF 직영 + VWO
핵심 철학	가족 재결합 우선	주거+취업 동시 해결	주거 먼저(조건 없음) 확산	소규모 분산형 자립 역량 개발	일상 경험·신뢰 형성	재활 연속성

독일도 캐나다처럼 기능별로 청소년을 지원하고 소규모 가정형태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고, 최근 사후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단계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일시보호소(아동상담소 부설)→아동양호시설(중장기)→자립援助ホーム(자립 전환)이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운영 주체를 가진다. 입소 경로도 반드시 아동상담소를 거쳐야

해서 단계 간 이동이 공식 절차를 따른다는 특징이 있다(김혁, 2019). 싱가포르는 MSF 직영 Youth Home이 법원 명령 청소년을 위한 중장기 재활시설 역할을 하고, 긴급・단기 보호는 별도의 허가된 거주시설(LRH)이나 지역사회 기관이 담당한다. 퇴소 후 사후관리는 VWO에 위탁하는 식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MSF, 2019; MSF, 2020).

종합하면, 어떤 국가도 한 건물에서 일시・단기・중장기를 뒤섞어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캐나다나 미국은 같은 기관이 여러 단계 시설을 모두 운영하기도 하고,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단계마다 다른 기관이 담당한다는 차이가 있다. 영국의 Foyer는 단기와 중장기 경계 자체를 없앤 모델이라는 점에서 기간에 자유로운 모델이다.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환거주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청소년쉼터 체계는 일시・단기・중장기로 구분되어 있으나, 시설 퇴소 후 완전한 독립생활까지의 '전환 단계'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영국의 Foyer 모델이나 미국의 TLP처럼 6개월~2년의 집중적인 자립 역량 개발 단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후관리 기간 및 강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독일이 재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사후관리를 규정화하고, 싱가포르가 퇴소 후 사후관리를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퇴소 후 추적 관리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Housing First 원칙의 적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취업 참여를 조건으로 요구하기 이전에 안정적 주거를 먼저 확보하는 Housing First의 원칙은 복합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유효하다. 특히 자립 준비가 덜 된 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심리적 안전기지로서의 시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 자립援助ホーム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임을 명확히 하는 것처럼, 한국의 청소년자립지원관도 퇴소 후 재위기 시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연결고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다기관 데이터를 통합하고, 조기 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지역화 커뮤니티 네트워크(LCN)처럼 교육・복지・사법 데이터를 통합하여, 위기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특화 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LGBTQ+ 특화 쉼터, 원주민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처럼 성소수자・다문화・장애 등 청소년의 다양한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제도의 '연속체' 성격

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의 보호 욕구와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일시・중장기・자립지원을 연결시켜, 서비스 단절과 누락을 방지하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황진구・김지연, 2020; 이상정 외, 2020). 이를 위해 기간 중심의 시설유형을 통합하거나,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미국・영국・캐나다・일본・싱가포르 5개국의 위기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시설 제도를 시설 연속체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각국은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독자적인 모델을 발전시켜 왔으나, 공통적으로 '단계적 자립 지원', '지역사회 기반 접근', '사후관리 강화'라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미국은 1974년부터 축적된 법적 기반과 민간 주도의 서비스 연속체를 갖추고 있으며, 영국의 Foyer 모델은 주거와 직업 훈련의 통합이라는 혁신적 접근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는 Housing First와 Foyer를 유연하게 혼합하며, 일본은 '당연한 일상'이라는 철학으로 시설의 치료적 기능을 강조한다. 싱가포르는 소규모 도시국가의 특성을 살려 정부 직영과 민간 위탁을 결합하고 퇴소 후 사후관리를 체계화하였다. 한국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의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전환 단계 지원의 부족, 사후관리 기간의 단기성, 다기관 연계의 분절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이상정 외, 2020; 황진구・김지연, 2020). 해외 사례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청소년 인터뷰

1. 청소년 인터뷰 개요

실무자 외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1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요구 파악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유형을 고려하여 집단 및 개인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일시, 단기, 중장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급적 2개 시설 경험이 있는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1차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총 3명의 청소년이 2차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면접은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집단 또는 개별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자세한 참여 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인터뷰 참여 동의서 및 설명문에 포함되어 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는 참여전 연구진의 연구목적 및 참여 방법, 연구 참여의 권리와 의무 등을 안내받은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며 연구 참여 후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가. 참여자 선정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 이용경험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시청소년쉼터, 단기청소년쉼터, 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의 청소년복지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로 단일 또는 중복경험을 가진 청소년 중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참여에 동의한 청소년을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청소년 연구참여자

구분	연령대(만)	성별	시설유형(중복)	이용기간
참여자1	20대	여	단기, 중장기, 청소년자립지원관	5년
참여자2	20대	여	일시, 단기, 청소년자립지원관	2년
참여자3	10대	여	단기, 중장기	1년6개월
참여자4	10대	여	단기	1년6개월
참여자5	20대	남	단기, 중장기	6년
참여자6	10대	여	일시, 단기, 중장기	2년
참여자7	20대	여	단기	6년
참여자8	20대	여	단기, 중장기, 청소년자립지원관	2년6개월
참여자9	20대	남	일시, 단기	2년
참여자10	20대)	남	일시, 단기	6개월미만
참여자11	20대	남	일시, 단기, 중장기, 청소년자립지원관	3년
참여자12	10대 후반	남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2개월
참여자13	10대 중반	여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5개월
참여자14	10대 중반	남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2개월

나.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6년 4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하였다. 유의표집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에게 구두 및 서면동의를 받은 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심층면접은 1인 대면면접 또는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한 1-3인 화상면접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면접의 소요시간은 1~2시간 내외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모두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자료화하였다. 그리고 질적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질적 내용분석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이 방법은 심층면접으로 수집된 자료로부터 드러나는 응답자의 다양한 관점과 반응을 확인하고, 사회적 경향이 반영된 장기간에 걸친 경험 혹은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Berg, 2007: 327). 이와 같은 방법론적 속성을 바탕으로 질적 내용분석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하였으며, 자료분석의 구체적인 단계

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단위를 선정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전사한 녹취록을 각 참여자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여 정독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구, 절, 문장들을 추출하여 분석단위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구문과 문장을 엮는 작업을 진행하는 범주화 분석과정을 거쳐(Morse & Field, 1995; Berg, 2007), 연구주제에 따른 실제적 의미를 추출하였다.

2. 청소년 심층면접 내용분석 결과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청소년의 이용경험을 분석한 결과, <표 Ⅳ-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38개의 하위범주와 9개의 범주 및 3개의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영역과 범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①이용계기: '의뢰 -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이 의뢰함, 복지기관·학교의 의뢰, 아는 지인의 소개', '자발적 방문 - 가출생활 중 쉼터정보를 알게 되어 검색해서 방문함, 가출직후 쉼터홍보전화로 연락하여 방문함'이다. ②유형별 이용경험: '일시청소년쉼터 - 가출시 숙식 등 긴급지원을 받음, 정보제공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음, 일시청소년쉼터가 갖는 의미', '단기청소년쉼터 - 다양한 프로그램과 의무교육, 집단생활 경험과 규칙, 인원이 많고 구성원 변동성이 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지냄, 지지체계가 되어 줌, 담당 선생님과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연장할 경우 중장기 거주가 가능함, 단기청소년쉼터가 갖는 의미', '중장기청소년쉼터 - 생활안정성이 높음, 실제적인 자립준비를 도움, 규칙이 융통적임, 좋은 부모같은 선생님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받아서 변화하고 성장함, 중장기 쉼터가 갖는 의미', '자립지원관 - 담당선생님이 매달 동행하여 생필품 지원 및 일상생활 상담, 다양한 경제적 지원, 자립 정보 및 연계지원, 다양한 모임 지원, 직업탐방 및 직업훈련, 자립을 통해 집단생활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과 자유를 얻음,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의미'이다. ③유형별 개선방안: '일시청소년쉼터 - 위기응급상황시 상시·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방안, 쉼터인식개선 및 접근성 개선방안',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 프로그램·의무교육 개선방안, 집단생활과 사생활의 균형,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규칙 운영방안, 라포형성과 이용자 중심의 관점 및 개입방안, 고위기 청소년 증가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분리된 개인공간 확보 등 주거환

경 개선방안, 홍보 및 시설·지원 확대방안, 필요한 기능은 살리면서 통합운영하는 방안, 행정업무 효율화 및 보상체계 강화방안', '자립지원관 - 차별없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 쉼터와 연계 운영방안'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2> 청소년 참여자의 청소년복지시설 이용경험 내용분석 결과

영역	범주	하위범주	내용
1) 이용 계기	① 의뢰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이 의뢰함	• 가정경제 파탄으로 모텔 등에서 생활하다 무단결석 및 방임 등으로 담임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됨 • 가정폭력으로 형이 신고하여 경찰에 의해 의뢰됨 • 아동학대로 이웃이 신고하여 경찰에 의해 의뢰됨
		복지기관·학교의 의뢰	• 쓰레기집 등으로 신고되어 담당 사회복지사가 의뢰함 • 학교의 교육복지사가 의뢰함
		법원의 행정명령	• 법원의 1호 처분으로 의뢰됨
		지인의 소개	• 보육원 퇴소할 무렵 복지분야 종사자인 지인이 쉼터를 소개해 줌
	② 자발적 방문	가출생활 중 쉼터정보를 알게 되어 검색해서 방문함	• 가정사로 인해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가출하여, 가출헬퍼를 만나 생활하다가, 쉼터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생활고가 심해져 자발적으로 가까운 쉼터를 검색해서 방문함
		가출 직후 쉼터 홍보 전화로 연락하여 방문함	• 가출 직후 막막한 상황에서 쉼터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쉼터의 안내를 받고 찾아감
2) 유형별 이용경험	① 일시 쉼터	가출 시 숙식 등 긴급지원을 받음	• 샤워, 숙식, 생필품 지원 등 긴급 지원을 받음 • 일시적이지만 안전한 거처가 되어 줌 • 거처마련할 동안 거주함
		정보제공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음	• 자취 등 자립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받음 • 심리·정서적으로 지원받음
		일시청소년쉼터가 갖는 의미	• 도움닫기: 갈 곳 없는 상태에서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적절한 도움 받음
	② 단기	다양한 프로그램과 의	• 쉼터에서 생애 첫 여행을 해봄

영역	범주	하위범주	내용
	쉼터	무교육	• 소풍,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경험의 기회가 많음 • 필수적인 의무교육이 있음 •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기도 함
		집단생활 경험과 규칙	• 휴대폰 반납해야 함 • 귀가시간(통금), 식사, 취침, 기상 시간 등 규칙이 강한 편임 • 아르바이트 등 개인적 사정이 있어도 가능한 규칙을 지켜야 함 • 집단생활에서 갈등은 회피만 할 수 없기에, 직면하고 해결하면서, 대인관계를 배우고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함
		인원이 많고 구성원 변동성이 큼	• 시설 규모에 비해 정원이 많음 • 구성원이 자주 바뀌고, 인원이 갑자기 증가했다가 갑자기 줄어들기도 함 • 구성원에 따라 조용하기도 하고 씨끌벅적하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짐 • 소위 노는 친구들이 들어오면 불안과 긴장이 높아짐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고위기 청소년들이 함께 지냄	• 우울 등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음 •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오히려 트라우마가 재발되기도 함
		지지체계가 되어줌	• 공부나 취미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해 줌 •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생김 • 진로와 자립을 도와줌
		담당 선생님과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담당 선생님은 이직이나 퇴직하기 전까지 거의 변동이 없음 • 담당 선생님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쉼터의 생활과 적응에 영향을 미침 • 청소년들은 담당 선생님과 친밀한 관계 형성 시 보다 지원받기 수월하다고 생각함
		연장할 경우 중장기 거주가 가능함	• 특수사례로 인정될 경우 연장이 되어 장기거주할 수 있음 • 장기거주시 보조선생님 역할 또는 갈등을 조정하거나 규율준수를 돕는 연장자 역할을 수행함

영역	범주	하위범주	내용
		단기청소년쉼터가 갖는 의미	• 요람: 쉼터에서 다시 태어남, 부모님 대신 키워준 곳 • 생명수: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해 줌. 부담 없이 하고 싶을 것을 할 수 있음 • 자립의 첫걸음마, 자립의 시작점 • 최후의 수단: 가출 당시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한 곳 • 기회: 중장기(살 곳)로 갈 수 있게 해준 곳 • 해결책: 혼자 하기보다 선생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해결됨 • 원수: 담당 선생님과의 갈등만 아니었으면 자리 잡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냈을 곳인데
	③ 중장기 쉼터	생활안정성이 높음	• 프로그램 중심보다 일상생활 기능이 높음 • 구성원의 변동성이 낮고 거주 안정성이 높음
		실제적인 자립준비를 도움	• 용돈관리, 정리정돈 등 일상생활을 배우고 익힐 수 있음 • 자립지원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 지원함
		규칙이 융통적임	• 집단생활이라 규칙이 있지만, • 개인상황(아르바이트, 대학생활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함
		좋은 부모같은 선생님들	• 선생님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고 챙겨주어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됨 • 선생님들이 나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줌 • 가족 같고 부모 같은 선생님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받아서 변화하고 성장함	• 내가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자원을 찾고 연결해서 지원해 주심 • 대학합격, 자격증 취득 등 지원과 노력에 따른 성취감을 경험함 • 삶의 낙이 생기고 삶의 동기가 생김
		중장기 쉼터가 갖는 의미	• 집: 진짜 집, 진짜 가족, 내 집이고 날 살아갈 수 있게 해줌, 제 집을 대체해줌 • 대학교 같음: 실제 자립준비를 시작하는 시기

영역	범주	하위범주	내용
			• 성장통: 힘들었지만 성장함 • 창고: 고민하고 쌓아둔 걸 정리해서 딱딱 넣어야 할 곳에 넣음 • 생활공간: 안전한 생활공간
	④ 자립 지원관	담당 선생님이 매달 동행하여 생필품 지원 및 일상생활 상담	• 담당 선생님이 매달 동행하여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면서일상생활을 상담하고 심리정서적 지원을 함 • 필요시 심리상담을 연계해줌
		다양한 경제적 지원	• 자립정착금 지원 • 월세지원 • 의료비지원 • 안경비지원 • 독서비지원 • 자립두배통장
		자립 정보 및 연계지원	• LH신청, 매입임대 등 주거 관련 정보 및 연계 지원 • 긴급 도움이 필요시 주민센터 등 자원 연계 및 대안 마련 방안 지원
		다양한 모임지원	• 자조모임 • 여행모임 • 또래모임
		직업탐방 및 직업훈련	•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직업훈련 연계 지원 • 사업장 견학 연계
		자립을 통해 집단생활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과 자유를 얻음	• 자취로 나만의 공간, 진짜 쉼이 있는 공간이 생김 • 자립으로 얻은 자유는 바꿀 수 없는 삶의 만족감을 줌
		자립지원관의 의미	• 마라톤때 시원한 물한컵의 도움 • 사후관리: 성인이 돼서도 지원받음 • 진짜 자립의 시작점 • 신용카드: 당장 0원이지만 눈앞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줄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짐
	⑤ 회복지원시설	규칙적 생활과 생활습관 변화	• 일정한 수면 • 규칙적인 식사 • 음주 감소

영역	범주	하위범주	내용
			• 학교 출석, 생활 관리
		종사자와의 관계를 통한 정서적 회복 경험	• 선생님과의 대화가 가족보다 끈끈함을 느낌 • 존중감 경험 • 나를 진심으로 위해줌 • 정서적 안정감 • 고민을 나눔
		상담 및 체험 중심 프로그램 경험	• 상담을 통한 안전한 감정표현과 정서적 해소 • 트레킹으로 성취감 경험 • 부모님과 함께 하는 캠프로 상호이해 향상
		자신감 및 미래목표 형성 경험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 향상 • 진로탐색의 기회를 통한 미래 목표 설정
3) 유형별 개선방안	① 일시 쉼터	위기응급상황시 상시·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방안	• 재이용시 한 달이 지난 후 이용가능한 규정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재이용이 제한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모색 • 위기응급상황시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과 이용안내
		쉼터인식개선 및 접근성 개선방안	• 청소년들에게 쉼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 또는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낙인감을 없애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방안 모색 • 이동쉼터에서 가벼운 심리상담, 생필품 제공 등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② 단기/중장기 쉼터	프로그램·의무교육 개선방안	• 교육효과가 낮고, 비효율적인 의무교육 개선방안 모색 • 참여자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자발적 참여방안 모색 • 개별 욕구 맞춤형 교육방식 확대
		집단생활과 사생활의 균형,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규칙 운영방안	• 일률적인 규칙이 아니라, 연령 및 특성 등 고려한 규칙을 마련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함 • 사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규칙은 완화하고 사생활과 집단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칙 모색 •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보장강화

영역	범주	하위범주	내용
		라포형성과 이용자 중심의 관점 및 개입방안	• 담당 선생님과의 라포관계가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뢰관계형성 방안 모색 • 이용자 중심의 관점 강화 • 즉시적이고 효과적인 개입방안 모색
		고위기 청소년 증가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해 개별분리공간 확보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	• 고위기 청소년의 증가로 상호 안전한 분리된 개별공간 필요 • 생활 공간과 사무실이 붙어있어서 사례관리가 감시받는 느낌이 듦 • 청소년기 특성을 고려하여,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공간과 활동공간 마련 • 다인실을 1-2인실로 개선 • 리모델링 등 낡고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을 개선 • 폭염시 냉방장치 가동 등 생활환경 개선
		홍보 및 시설·지원 확대 방안	• 쉼터를 더 많이 알려야 하고, 쉼터 자체도, 지원도 더 늘려야 함 • 쉼터는 꼭 필요하고, 지금도 좋으므로, 확대방안 모색
		행정업무 효율화 및 보상체계 강화방안	• 선생님들이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림 • 선생님들 업무강도는 매우 높은데 보상체계는 열악함
	③ 자립지원관	차별없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	• 안경비 10만원 한도로 고도 근시 등은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 모색 • 자립정착금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방안 모색
		쉼터와 연계 운영방안	• 쉼터와 바로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 • 쉼터와 같은 건물에서 통합운영 방안 모색
	④ 회복지원시설	관계 중심 공동체 활동 강화	•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험 • 여행과 산책을 통한 친밀감 형성과 갈등 완화
		문화나 체험 중심 프로그램 확대	• 문화 경험과 일상적 즐거움 필요 • 반복적이고 획일적인 프로그램 지양
		맞춤형 학업·진로 및 자립지원 강화	• 퇴소 후 진로 고민 • 부모와의 갈등으로 퇴소 후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음

영역	범주	하위범주	내용
			• 미래목표 지원의 구체적 지원 • 장기적 자립 지원 기능 확대
		전문인력 및 정서지원 체계 강화	• 시설 내 상담 등의 전문가 지원 • 정서지원 강화
		퇴소 후 지속적 지원체계	• 퇴소 후 비행청소년과 접촉 우려

가.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이용 계기

현재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게 된 계기는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가족이나 이웃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이 쉼터로 의뢰를 한 경우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복지기관이나 학교에서 쓰레기 집 등 문제가 발견되어 의뢰된 경우와 지인의 소개를 받아 오게 된 경우가 있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은 판사의 1호처분의 행정명령으로 의뢰되었다. 한편, 한 참여자는 가정문제로 가출하여 가출헬퍼를 만나 쉐어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중 또 다른 가출헬퍼가 쉼터를 알려주어 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쉼터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가출생활을 이어가던 중 생활비 대출 등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너무 막막한 상태에서, 문득 쉼터가 생각나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가까운 쉼터를 찾아 자발적으로 쉼터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참여자는 가출 직후 바로 쉼터의 대표 홍보전화로 연락해서, 방문하여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모두 학대, 방임, 가정경제 파탄으로 모텔생활, 쓰레기 집 등 가정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의뢰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쉼터를 이용하였다.

[의뢰]

-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이 의뢰함

"가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학교를 좀 자주 못 나갔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좀 위급 상황이라 생각하셔 가지고 경찰분들 좀 불러주셔가지고(중략) 아버지가 이제 돈벌이가 좀 사업 때문에 좀 안 좋았던 게 있어서 이사를 계속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모텔에서 가족이 지내게 됐었거든요. 그러다보까 학교를 좀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4)

"아빠가 그러니까 학대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6)

• 복지기관・학교의 의뢰

"완전히 좀 많이 심각했어요. 쓰레기집(중략) 미자(미성년자)였으니까, 그 복지관 사회복지사님이 최대한 괜찮은 쉼터로 보내주겠다 해서, 갔는데" (1)

"언니는 자취하고 오빠는 또 군대 갔고 엄마는 또 다른 지역 가가지고 저 혼자 보내는 상황이었어서, 그러는 동안 이제 혼자 지내다가 그러다가 쉼터로 가게 된 거예요(중략), 쌤한테 제 상황을 말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 주셔서(중략) 교육복지선생님께서 쉼터를 알려주셔서" (3)

• 법원의 행정명령

" 법원에서 판사가 1호 처분을 내리면서 이 시설에 가라고 해서...." (청소년 12)

• 지인의 소개

"전 단기쉼터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상담 선생님, 쉼터 선생님 이런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 아는 분 한 분이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10)

[자발적 방문]

• 가출생활 중 쉼터정보를 알게 되어 검색해서 방문함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장 강박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때문에 집안이 정말 쓰레기장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많이 더럽고 남들이 보면 쓰레기라고 생각할 만한 물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리고 또 실제 쓰레기들도 많이 방치하고(중략)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맞벌이시고 많이 바쁘셔서 좀 저에게는 신경을 쓰지 못하시고 또 저도 학교생활에도 많이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서의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서 우울감과 좀 그런 불안 이런 게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좀 저의 처지와 환경을 비관하고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가출할 당시에 정신이 좀 온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중략) 마음의 힘듦이 시작이 되어서 가출을" (2)

• 가출 직후 쉼터홍보전화로 연락하여 방문함

"그냥 어쨌든 그때 가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서(중략). 그 당시에 청소년 1388이라고 약간 찾아보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전화를 제가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보고 쉼터를 찾아 갔어요." (8)

나.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이용 경험

1) 일시청소년쉼터

일시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경험을 살펴보면, 참여자 중 일부는 가출하여 거처가 없는 상황에서 일시청소년쉼터에서 반나절 또는 하루이틀 길면 일주일간 숙식 등 긴급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한 참여자는 일시청소년쉼터를 이용하면서 샤워와 숙식 등의

지원을 받아 잠시나마 힘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자립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려고 잠시 머물렀는데, 그동안 숙식뿐 아니라 정보제공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렇게 일시쉼터를 이용한 참여자에게 일시쉼터는 도움닫기(갈 곳 없는 상태에서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적절한 도움을 받음)라는 의미가 되어 주었다.

- 가출시 숙식 등 긴급지원을 받음

  "그때 정말 더웠는데 땀도 이렇게 땀이 정말 많이 났었는데 샤워도 할 수 있었고 또 잠도 자고 또 그때 냉동식품이지만 밥도 주셔서 힘이 많이 됐습니다." (2)

- 정보제공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음

  "다 잘 챙겨주시고(중략) 알아봐 주실 거 다 알아봐 주시고 찾아봐주는 그런 게 좋았어요." (10)

- 의미

  "도움닫기, 일시가 없었더라면 제가 갈 곳도 없고 하니까 좀 더 어려웠을 상황이 많을 텐데-중략- 선생님들이 다 잘 챙겨주시고 정보도 주고 -중략- 일시 덕분에 좀 많이, 거처도 마련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덕분에 도움닫기 라고" (8)

2) 단기청소년쉼터

단기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경험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단기 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과 더불어 의무교육도 함께 받았다. 한 참여자는 생애 처음으로 쉼터에서 여행이라는 것을 가보았다고 하였고, 많은 참여자들이 쉼터에서 소풍,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일부 참여자들은 관심없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강요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쉼터 의무교육이 있는데, 이에 대한 참여는 매우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효과도 떨어지고 운영도 비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단기청소년쉼터는 집단생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다만 규칙이 다소 경직되고 운영상의 융통성이 적어, 특히 자립준비를 하는 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불편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한편 참여자 중 일부는 집단생활을 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경험과 더불어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미리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였다. 단기청소년쉼터는 일반적으로 중장기에 비해 정원이 많은 편이고 구성원의 변동성도 다소 큰 편이라, 구성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졌으며, 때로 쉼터규칙으로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소위 '노는 친구들'이 입소할 때는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등 생활안정성이 다소 떨어졌다. 그리고 단기청소년쉼터의 경우 대부분 우울 등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트라우마가 겪어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청소년들이 입소하여 함께 지내는 동안 어려움을 가중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참여자들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고, 진로와 자립을 돕는 등 쉼터 자체가 참여자들의 지지체계가 되어 주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단기청소년쉼터에 들어가면 처음에 담당 선생님이 정해지는데 선생님이 이직이나 퇴직하기 전까지는 계속 담당 선생님이 유지되는 편이며, 담당선생님과의 관계가 때로 쉼터 생활과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단기 쉼터에서 특수한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연속적으로 기간연장을 할 수 있고, 기간 연장이 승인되는 경우 중장기로 거주가 가능하였다. 이렇게 단기청소년쉼터에서 중장기간 거주한 참여자들은 단기 쉼터지만 중장기 쉼터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단기 쉼터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면, 요람이자 생명수 또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였으며, 또는 자립의 첫걸음마, 자립의 시작점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 다양한 프로그램과 의무교육

"단체로 소풍 같은 외부 활동을 나갈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패러글라이딩을 했던 경험이거든요. 그게 일반인들도 잘 안 해본 경험을 여기서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그런 게 좋고" (9)

"일단 단기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가 막 제가 가정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으니까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본 적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더니만 선생님이 바로 반영해 주셔서 쉼터에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게 기억에 너무 남아가지고" (5)

"어쨌든 저희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았어요.(중략) 인지행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어쨌든 다른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을 통해서 예전에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 저희도 여행을 가서 예를 들면은 역사 탐방을 주제로 일본을 간다든지 제주도를 간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어요." (4)

"안전 교육, 소방 안전 교육, 마약 교육 이런 교육을 다 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거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저한테는 너무 의미가 없는 시간 같고 재미도 없었어요." (2)

- 집단생활 경험과 규칙

"단기 쉼터는 그 규칙이 빡쎘어요. 통금이 빠르고 휴대폰도 내야 되고 씻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3)

"단기에서는 일단 제 핸드폰을 뺏어간 게 그래서 좀 생활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도 안 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으니까(중략)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좀 관계나 이런 거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게 좀 힘들고 안 좋지 않을까 해요." (5)

"이 규칙이라고 하면은 생활 규칙이 좀 대부분이거든요.(중략) 쉼터에 빨리 그러니까 귀소를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원치 않아도 남이랑 같이 생활을 해야되니까, 단체생활이니까" (9)

"쉼터들은 규칙들이 다 있고 이제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될 것도 많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좀 예상을 하고 가긴 갔는데 이제 그 규칙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좀 규칙이 좀 약간 조금 그래도 아이들이 사는 공간인데 이렇게 막 빡세게 하지 말고 좀 약간 풀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

- 인원이 많고 구성원 변동성이 큼

"단기 쉼터는 일단 입소생을 너무 많이 받아요(중략) 시설이나 서비스는 좋았는데 애들이 너무 많고 그 안에서의 관계성이 좀 힘든 점이" (8)

"이제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은 애들이 수시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들어오는 애들 중에서 좀 놀았던 애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애들도 가끔씩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같이 사는 애들도 좀 눈치가 보이고 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가 있고(중략) 저는 통제가 좀 안 될 것 같은 애들이 들어오는 게 좀 가장 크게 어려웠었고" (9)

"단기는 진짜 잠깐 지금 당장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바로 그냥 그냥 바로 다 받아줘요.(중략) 그래서 당장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 접근성 면에서 좋은 것 같고요(중략),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생활하는 공간에 다른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인원이 많아지면은 조금 개인의 시간을 좀 많이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게" (5)

"단기의 특성이 이제 조금 계속 바뀌는 특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변동이 좀 일상생활을 이렇게 쭉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조금 있는(중략) 지내는 곳에서 그 사람이 많이 바뀌면은 좀 적응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가" (4)

"환경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와 중장기 차이는 인원 수가 가장 크고요(중략) 단기쉼터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이제 청소년들도 많다 보니까 딱 같은 학교 같은 느낌이거든요." (11)

-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고위기 청소년들이 함께 지냄

"단기라서 좋은 점은 이제 좀 소위 말하자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이 왔을 때 몇 달에서 몇 주만 힘들면 그 친구들이 가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저는 장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재는 갈 거니까." (7)

"이제 스스로가 힘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안 좋은 길로 물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옮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중략). 청소년 도박 문제 사이버 도박 문제가 있는데 이게 쉼터 청소년들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질병처럼 전염이 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요. 그런 이제 아무래도 쉼터에 어린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지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11)

- 지지체계가 되어줌

"저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생겼던 게 사실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없었으면은 사실 대학 진학도 자격증 취득도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그냥 꿈도 그냥 포기한 채로 이렇게 지냈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게 가장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좀 그림에 뜻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 진학할 수 있게 입시도 지원해 주시고 이제 후원해 주실 분들 막 끌어오고 하시느라 많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중략) 선생님들이 의지가 많이 되어가지고 그 선생님들한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부모님한테 배울 수 있는 거를 좀 더 배웠던 것 같아요." (7)

"이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해 주니까 부담 없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중략) 여기서 살면서 이제 학원 같은 거 다니고 싶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방법을 좀 다 찾아서 이제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좀 따내서 이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도와주거나(중략) 최대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공부 쪽을 최대한 지원해 주시려고 도와주시고" (9)

"단기는 좀 저는 뭐냐 아버지만 계셔가지고 아버지가 일을 나가시면 좀 보살핌 받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단기 쉼터 들어가면서 거기 선생님들한테 좀 보살핌 받는다 그 느낌을 좀 받게 돼 가지고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5)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중략) 선생님들도 계시고(중략) 이제 최소한 내가 이제 혼자서 이제 생활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11) 가정 내에서 일단 지지를 못 받던 청소년들이 선생님한테 지지를 얻고 그 뒤에서 이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제 힘든 상황에 때 고민할 상황이 될 때 이제 막 아프다거나 이런때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1)

- 담당선생님과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그냥 거기 있는 선생님이랑 친하기만 하면 단기지만 다 연장도 되고(중략) 거기서 잘 생활하고 하면 그냥 거기 있는 소장님이라든지 샘들이 그냥 다 연장을 시켜주니까(중략), 솔직히 저같은 경우 그 담당 선생님만 아니었으면 진짜 검정고시도 하고 학원 잘 다녀서 합격도 했고 어려운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중략) 저는 그 선생님이랑 저랑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안 맞아서(중략), 그런데 저랑 그냥 그 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나머지 애들은 다 즐겁게 지내고, 선생님과 잘 지내면 정말 지원도 많이 받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애들도 다 활력이 넘치다 보니까 서로 사이 좋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10)

- 의미

"단기는 제게 해결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생활에 있어서라든지 저 혼자서 무언가를 다 한다기보다는 같이 계시는 선생님이랑 같이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해결사나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4)

"기회, 여기 중장기로 연계가 된 거니까 좀 저는 단기 생각하면은 항상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기 쉼터에 들어가게 돼서 내가 하나로 여기 중장기 쉼터에 올 수 있었다." (5)

"생명수,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해 주니까, 부담 없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

어서인 것 같아요." (9)

"시작, 제가 혼자 사는 생활을 시작, 혼자 스스로 살 준비, 나 이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할 수 있는 시작" (7)

3) 중장기 쉼터

중장기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경험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중장기 쉼터에서 다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의 경험에 따르면 중장기 쉼터는 단기 쉼터에 비해서 프로그램 다양성은 낮은 편이지만 프로그램보다는 일상생활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었고, 거주기간도 길어서 구성원의 변동성도 낮은 편이며 따라서 생활안정성이 단기 쉼터보다는 높은 편이었고, 규칙도 단기보다는 융통성이 있는 편이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연령에 따라 자립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할 때 용돈관리 등을 돕고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실제적인 자립지원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대체로 담당 선생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모든 선생님들과 친밀하거나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편이었으며, 많은 참여자들이 중장기 쉼터의 선생님들을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성장하도록 돕고 키워주는 좋은 부모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동기가 있다면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지원과 노력으로 취업, 대학합격,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성취경험을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중장기 쉼터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진짜 가족같고 진짜 집같은 곳이고, 나를 키워주고 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곳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리고 힘들지만 변화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고, 그래서 성장통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고민하고 쌓아둔 걸 정리해서 제자리에 딱딱 넣은 그런 경험을 한 곳으로 기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안전하게 살수 있었던 '안전한 생활공간'이기도 하였고, 실제 자립준비를 시작했던 시기라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정하는 의미에서 대학교 같은 곳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였다.

- 생활 안정성이 높음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중장기는 한 거의 2년이 만기예요. 이제 연장해서 2년씩 연장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랑 있는 기간이 단기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중략) 다 애들이 금방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한 11명 정도 있는데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좀 좀 마음이 안 맞으면 힘들 수도 있지만 마음이 맞는 친구를 친구가 들어오거나 하면 이게 좀 쉼터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떨 때는 제가 오래 있었으니까 하는 애기인데 이게 어떨 때는 엄청 시끌벅적하고 아이들이 서로서로 친하고 해서 근데 또 어떨 때는 엄청 조용하고 이럴 때가 있어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시끌벅적한 때가 좋았어 가지고 더 집 같게

느껴지고 하는" (5)

"일단 같이 지내는 사람 수가 적고 많이 안 바뀌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애들이 많이 안바뀌고, 약간 애들도 다 그냥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수도 적어서 그런지 좀 익숙해지고(중략). 아무래도 샘들과도 더 많이 소통하다 보니까 더 안정감이 생긴 것 같은(중략)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안정되는 곳에서 있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 약간 기분이 안좋을 때도 약간 혼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이 생긴 것 같고" (6)

- 실제적인 자립준비를 도움

"제가 돈 관리를 잘 못하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지금 돈이 좀 모인 거 같아요(중략). 제가 돈을 헤프게 쓰는 편이라, 약간 헤프게 소비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돈 관리를 잘 못 하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돈 관리를 해주셔 가지고 자취준비에 많이 도움이(중략) 그리고 또 수납 정리 프로그램이요. 그게 수납이랑 정리랑 청소랑 그런 거, 어지럽혀진거를 치우고 정리하는 방법같은 그런 거에요." (3)

"중장기 쉼터는 선생님들이 이제 보호 목적보다는 자립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단기 쉼터보다 경제나 부동산 아니면은 의학 이런 좀 교육을 더 많이 해 주시고(중략) 어쨌든 나이가 좀 있고 이제 성인 연령에 가까우면 이제 또 자립을 해야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서(중략) 선생님들께서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제 미래를 같이 찾아주시고 많이 아무튼 더 자립에 집중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5)

"중장기는 단순 보호를 넘어서 조금 자립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도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도와주시고(중략) 자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4)

- 규칙이 융통적임

"중장기 쉼터의 경험은 너무 좋았어요. 통금이 10시고 휴대폰도 안 내고 씻는 시간도 너무 자유롭고" (3)

- 좋은 부모같은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진짜 저는 진짜 가족같아서(중략) 너무 저를 잘 아시고 또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셔가지고(중략) 중장기는 제가 00년도 0월에 입소를 하게 됐는데 물론 선생님들끼리의 인사 이동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저는 뭐라고 할까 진짜 가족 같아요. 최대한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저를 잘 아시고 또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셔가지고(중략)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5)

"약간 선생님들과 저는 라포가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중략) 믿고 기댈 수 있고 내면의 힘이 생기게 되고(중략) 그래서 더 훨씬 심리적으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6)

●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받아서 변화하고 성장함

"쉼터에 선생님들이 여행을 이제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그런 게 많았어요. 여행 같은 가족 여행 같이 그런 것들이 쉼터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다 또 따라갔어요. 근데 뭔가 세상에는 아직 내가 못 본 것들도 많구나 그리고 왜냐하면 쉼터라는 그런 작은 사회에서도 이렇게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구나(중략), 여행도 많이 갔거든요. 내가 뭔가 꿈이 생기고 나의 뭔가 직업에서 얻는 성취감 이런 거랑 최근에 더 많은 사람들과 지내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중략), 쉼터는 이제 자원을 끌어서 어쨌든 내가 뭘 하고 싶다고 그러면 자원을 막 연결해주셔서, 먹을 것도 잘 먹고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고(중략) 무슨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그러면 그런 걸 다 지원해주셔서 다 됐거든요. 다 지원을 해 주려고 선생님들이 다 연결해서 자원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주셔서, 어쨌든 성취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이 저를 꿈꾸고 성장할 수 있게" (1)

● 의미

"성장통, 너무 변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힘들었던 것도 사실 많았고 그래서 성장통이라고 했어요. 저의 가정에서의 그런 가치관과 방향성이 있는데 그거를 바꾸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걸 바꾸는 그 과정도 힘들었지만, 감사하고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1)

"창고, 딱딱딱 맞게 장소를 해야 되잖아요. 자립을 위해서 진로는 어떻게 준비할 건지 학업은 어떻게 유지할 건지 그런 거 이제 정리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방법. 고민을 해봤지만 여러 가지가 고민을 해가지고 약간 옆에다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딱딱딱 넣어야 될 칸에 넣는 걸 시작하는" (10)

4)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자립지원관의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에서 담당 선생님과 매달 동행하여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일상생활 상담을 하였고, 자립정착금, 월세, 의료비, 안경비, 독서비, 자립두배통장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자립과 관련하여 LH매입임대 등 주거지원이나 다양한 정보제공을 받기도 하였고, 때론 긴급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연계해주거나, 대안방안을 마련해주는 등의 실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자조모임, 여행모임, 또래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지원받거나, 직업탐방・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심리적으로도 지지받고 응원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으며, 때론 자립한 성인으로 대우받는다고 느끼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립지원과 함께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취 등 자립하게 된 참여자들은 그동안의 집단생활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과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만족감을 준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의미를 살펴보면, 마라톤할 때 시원한

물한컵의 도움처럼 정말 간절할 때 작지만 큰 도움으로 느꼈으며, 진짜 자립의 시작 또는 성인이 된 후 지원받기에 사후관리같은 도움 등으로 느끼기도 하였고, 때론 당장 0원이지만 눈앞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서 '신용카드'라고 비유하기도 하였다.

- 담당선생님이 매달 동행해서 생필품 지원 및 일상생활 상담

"매월마다 생필품 지원을 해 주세요. 선생님이랑 무조건 같이 동행,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도 하고, 일상생활 얘기, 그때 샘들이 이 친구는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걸, 너무 이제 힘들고 약간 너무 우울증이 있거나 이러면, 심리상담 같은 거 필요하다 하면 지원하고(중략) 쉼터 퇴소하고 나서 자립지원이 없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쉼터에서는 외롭지도 않고 계속 심리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없어지면은 가정에서의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혼자서 또 살려고 그러면 아직 좀 저희도 덜 성장한 상태니까" (1)

- 다양한 경제적 지원

"자립 지원관을 일단 생필품을 두 달에 한 번 꼴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직접 선생님이랑 같이 장 보러 가서 이제 15만 원 정도 이제 장보는 생필품 지원이 있고, 자립 두배 통장도 있고, 정착금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지원해주고. 그리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월세를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정착금은 500만 원씩 두 번 받는데 500만 원을 한 번 받고 1년 뒤에 이제 500만 원 받는 거라 아직 저는 500만원만 받았고" (8)

- 자립정보 및 연계지원

"자립지원관에서 LH라든지 이런 연계 지원을 이제 해주는 거라서, LH 매입 임대주택을 연계를 해주셔서 자립을 준비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11)

"자립 지원관에서 몇 달 후에 입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중략) 청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많이 찾아서 도와주셔서(중략)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1)

- 다양한 모임 지원

"자립하는 애들이랑 모임, 자조 모임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오케이 나 자조 모임 들어가겠어요라고 동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1)

- 직업탐방 및 직업훈련

"원래는 제과제빵을 배웠었어요. 이것도 사실 자립지원관 담당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제과제빵에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배움카드라는 거를 추천을 해 주셨어요(중략). 자립지원관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인 삼성희망디딤돌을 추천해 주셔서, 거기를 소개시켜 주셔서 간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직업탐방으로 000에 견학을 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

• 자립을 통해 집단생활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과 자유를 얻음

"(독립) 그냥 너무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메리트가 커요. 이 자유라는 게, 이 자유 때문에 그냥, 쉼터는 너무 좋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 자유가 너무 커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중략)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못하고(중략) 뭔가 개인적인 거를 말해야 된다는 부담도 없고요. 혼자 살면은" (1)

• 의미

"마라톤 때 시원한 물한컵의 도움, 일단 선생님께서 저를 정말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저의 앞으로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알려주시는 것도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좀 마음에 또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하나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중략). 몇 개월 전에 러닝을 취미로 했었는데요. 그때 러닝을 하고 또 마라톤에도 한 번 나갔었습니다. 마라톤을 하면은 쉬지 않고 계속 달리기를 하고 또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지치고 덥고 목도 참 마르는데 중간에서 마실 수 있는 물 한 컵이 정말 평소에는 잘 모르는 그냥 물 한 컵일 뿐인데 그 달리기를 할 때는 그 물 한 컵이 정말 크더라고요. 저에게 자립지원관은 마라톤 중 물 한 잔, 목 타던 게 싹 내려가는 물 한모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게 자립은 저의 인생을 달려 나가는 마라톤 과정이고, 마라톤 중에 물 한 컵 한 컵 도움을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2)

"신용카드, 자립지원관은 제게 신용카드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 0원이지만 일단 눈앞에 닥친 문제같은 걸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8)

"또 다른 시작, 진짜 이제 자립을 시작. 진짜 자립의 시작. 실제로 자립을 하게 된 시작" (11)

5)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생활을 통해 규칙적 생활 습관이 형성되고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졌다는 경험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이전의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음주, 학교 부적응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생활 리듬과 안정된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종사자와의 관계를 통해 존중받고 보호받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러한 관계 경험이 자신감 향상과 미래목표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상담, 기질캠프, 체험활동 등 경험 중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단순 여가활동이 아니라 성취감과 자기효능감, 관계 회복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의 회복이 단순 통제나 문제 행동 감소가 아니라 긍정적 경험과 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규칙적 생활과 생활습관 변화

"규칙적인 생활이 진짜 밖에선 아예 안 됐었는데 센터 오고 나서 규칙적인 생활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밥도 밖에서 놀기 바빠서 맨날 안 먹었었는데 있으니까 밥도 잘 챙겨 먹을 수 그리고 술을 좀 많이 마셨었는데 센터에 있으니까 술도 안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 같

아서 좋아." (참여자 13)

- 종사자와의 관계를 통한 정서적 회복 경험

  "선생님이랑 항상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맨날 같이 둘이 대화하는 이 선생님이 아빠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12)

- 상담 및 체험 중심 프로그램 경험

  "상담 프로그램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상담에서 이제 못했던 말 다 하고 마음에 담아뒀던 거 다 말하니까 평상시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12)

- 자신감 및 미래목표 형성 경험

  "또 저도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거 상담이나 쌤들이 격려해 주는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성적은 개판 났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목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잡힌 것 같아서..." (참여자 14)

  "친구들이 저보고 뭔가 조금 안정적이게 변한 것 같다고 말해 주긴 했었는데... 제가 조금 외박 나가서도 조금 이제 이게 살롬 생활 습관이 조금 베었다가 보니까는 그거 보고 조금 놀라기도 하고..." (참여자 14)

다.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개선방안

1) 일시청소년쉼터

참여자들이 제안한일시쉼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일시청소년쉼터의 이용기간이 짧은 것은 이해하지만,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반나절만 이용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를 받거나, 일주일 이용 한 이후에는 한달 간 이용을 할 수 없는 등의 규정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가출위기상황에서 상시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드롭인 센터(drop-in center)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이용시 충분한 안내를 하며 재이용시 기간 제한에 대한 재검토 또는 융통적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쉼터가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거나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쉼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우 고위기 청소년이 많은 만큼 우선 숙식 및 생필품 지원 등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벼운 심리상담이나 정보제공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도 일시쉼터

에서 이러한 긴급지원 및 홍보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청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 및 인식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위기응급상황시 상시 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방안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이라면은 그때 저도 그랬듯이 좀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쉼터에서 본 대다수 아니면 전체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중략) 그때는 좀 그냥 사실 제 안전 정말 쉼터가 안전하고 숙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때 저는 제 안전을 지킨다라기보다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런 자해적인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중략) 일시쉼터를 그때 가출했을 때 한 번 갔었습니다. 제가 가출 헬퍼 그의 집을 전전하던 그쯤에 한 번 갔었는데 그때일시쉼터에서 반나절 딱 반나절을 쉬고 퇴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반나절 동안 이용 못하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반나절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중략) 그냥 일시는 반나절만 쉴 수 있는 곳이 있구나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일시는 연장이 안되고 무조건 한달 뒤에야 들어와야 재입소가 되요. 규칙이 참 이상해가지고, 솔직히 좀 그런게, 저보다 더 약한 더 어린 애들 더 열악한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시가 일주일밖에 못 있고 한달 뒤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게, 한달 동안 그 긴 시간동안 그 아이가 만약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또 나와야 되는 경우에 좀 그럴 수 있잖아요(중략) 한달 제한된 락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

- 쉼터 인식개선 및 접근성 개선방안

"우선은 지금 쉼터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모르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제가 쉼터에 들어갔다라는 걸 제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도 거기 괜찮은 거 맞냐 거기 좀 질 낮은 애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단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 쉼터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게 개선되어야(중략) 일단 쉼터에 당장 입소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좀 편하게 가볍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상담을 하면은 당장 생활에 필요한 뭔가 그런 정보나 생필품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구로 홍보를 하는 편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입소가 아니라 가벼운 상담(중략) 그런 친구들을 그래도 어떤 접촉점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2)

2) 단기/중장기청소년쉼터

참여자들이 제안한 단기/중장기 쉼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교육효과가 낮고 비효율적인 의무교육을 개선하고,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률적인 규칙이 아니라 청소년 특성과 연령 및 상황을 고려한 규칙을 마련하고 융통성있게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사생활과 집단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

칙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Ryan과 Deci(2000)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로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환경이 동기와 심리적 안녕에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남미자 외(2024)는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거주 경험에서 인권침해적 규칙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청소년의 존엄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쉼터 이용규칙은 공동생활의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청소년의 자율성과 사생활 등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와 권리를 충족하고 보장하도록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칙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용규칙이 청소년의 안전 및 자율적인 생활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생님들이 퇴소에 대해 너무 쉽고 가볍게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용자 중심의 관점을 기반으로 즉시적이고 반응적인 개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적응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과의 관계가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뢰관계 형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참여자들은 자신도 힘든 상황을 겪고 쉼터에 왔는데, 고위기 청소년들과 서로 예민한 상태에서 다인실의 협소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때론 트라우마를 다시 겪게 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기는 특히 사생활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과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리된 개별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현재 쉼터의 낙후된 시설과 협소한 다인실 구조가 참여자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간 거주하는 생활터전으로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1인 1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공간을 확보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낡고 노후화된 열악한 시설의 경우 안전문제도 있으므로 리모델링, 시설이전 등 시설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폭염시 냉방 등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쉼터의 적응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선생님들의 행정업무과다 및 이직률 등의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프로그램·의무교육 개선방안

"필수 교육이 인권교육, 성교육 그리고 안전 교육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알아요. 중요한 거

아는데(중략), 이걸 3개월에 한 번씩 잊을 만 하면 필수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중략). 나는 쉬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이게 참 불편하다는 거죠. 나도 내 입장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힘들고(중략) 그런 건 좀 개선하면 좋겠어요." (7)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좀 약간 빡센데 그 교육이나 그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어디 일을 나가지 않거나 그럴 시에는 무조건 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라 아프지 않는 이상 무조건 참여해라 약간 그런 게 그런 건 좀 개선해야" (10)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냥 어느 쉼터를 가든지 기본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런 거 다 진행을 하는데 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성교육을 좀 실제적으로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애들이랑 지내면서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성교육 물론 진행하겠지만 그 학교에서 하는 거는 정말 많은 다수의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니까 뭔가 좀 면밀히 막 이렇게 말해주지 않잖아요. 교육자체가 대부분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좀 특히나 좀 중장기 쉼터랑 이제 단기 쉼터랑 지역이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하고 제가 원래 고등학교를 전국권을 다녀서 좀 여러 지역의 애들을 봤었는데 좀 지역별로 애들의 성향이나 그런 성품이 조금 편차가 있는데 좀 큰 도시고 좀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수록 저는 좀 그런 실제적인 성교육이 좀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8)

- 집단생활과 사생활의 균형,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융통성있는 규칙 운영방안

"쉼터를 출입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쉼터를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선생님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거는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그 나갈 때 어떤 사유로 나가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저는 좀 불편했고" (2)

"선생님이 완전 철칙 완전 규칙을 지키는 그런 쪽이었다 보니까, 약간 이게 저는 알바를 하는데 알바 끝나고 오면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으니까(중략), 내가 알바해가지고 돈 모으고 자취하겠다는 건데, 좋은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제가 나쁜 의도로 알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일단 규칙은 규칙이다 지켜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게 안 맞아가지고" (10)

- 라포형성과 이용자 중심의 관점 및 개입방안

"약간 퇴소를 너무 이제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었어요(중략). 이제 그 여기 아이들에게 이제 퇴소라는 거는 진짜 힘든 건데(중략)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하면은 자기도 힘들고 이제 선생님도 힘든 건데, 선생님께서 (규칙안지키면 퇴소 등 처벌처럼) 퇴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10)

"지금 선생님들이 쉼터에 근무하셨던 적이 있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전 샘들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말했을 때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야 좀 바뀔까 말까 하는 그거였는데, 선생님들 바뀌고 나서는 저희들이 뭐 이렇게 그냥 스쳐지나가듯이 말해도 그냥 바꿔주시고 그냥 너무 잘해주셨어 가지고 그리고 애들이랑도 잘 지내고(중략), 주말에는 본인이 직접 재료를 이제 000원 처음엔 000원이었는데 나중에 000원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런 일정 금액 안에서 재료를 미리 평일에 골라놓으면 그걸로 주말에 직접 본인이 자율적으로 이제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게(중략) 주말에 일단 무엇보다 직접 자유롭게 요리해서 먹는 게 제일 좋았던 거죠. 그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8)

"청소년들과의 라포 형성을 되게 좀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들이 마음의 고민

이라든가 쉼터에 불편한 점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2)

• 고위기 청소년 증가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분리된 개인공간 확보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

"제가 2층을 썼고 저의 밑에 1층에 있는 친구가 생각보다 뭔가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적장애가 있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서 살짝 이상하게 답답했거든요." (8)

"그때 그 언니가 조금 몸 상태 약간 아팠어서, 좀 불안해하고 그런 거로 아픈" (3)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하기도 했고 그 불편함이 이제 다른 친구들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 청소년들의 특징이 좀 같이 지내기는 힘든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있기도 했고(중략),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 알지만 일단 다른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점이 함께 자고 개인공간이 없다는 점이 많이 스트레스였습니다(중략). 쉼터에서 있으면은 좀 즐겁지 않았습니다(중략). 쉼터 내에서 제가 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중략). 항상 누가 같이 있기도 하고" (2)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방은 3개밖에 없고 심지어 한 방에 침대가 따닥따닥 붙어서 있는 거죠(중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가 한 방인데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그림으로 표현). 그리고 침대와 거의 붙어있는 개인 서랍장이 있고, 거의 진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에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중략), 공간 자체가 협소한 게 1인당 공간이 너무 없어서, 더 예민해져요(중략). 이거는 한번 느꼈었는데 되게 ADHD인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살짝 정신적으로 이제 조금 힘든 친구가 들어왔었거든요. 욕하고 소리 지르는 친구였는데 근데 그런 애들이 가끔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애초에 가정에서 조금 그런 폭력이나 힘듦을 겪고 다 저희가 온 건데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이 나는데(중략),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반복되니까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고, 그게 제가 그 친구 상태를 정확히 몰라서, 어쩔 수 없는 일 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공간을 분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1)

"저희 같은 경우는 방이 4인실, 4인실, 6인실 이렇게 있어서 6인실은 한 방에 사람의 6명이 있으면 아무래도 통화를 하고 싶거나 이럴 때 거기 방에서는 아무래도 다 같이 쉬고 있으니까 내려가서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번거로워질 수도 있고(중략), 거의 정원이 16명, 14명 정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화장실이 이렇게 두 개란 말이죠. 그러면은 한 방에 하나의 화장실을 거의 10명에서 사용할 때도 있어요." (4)

"이제 계속 뭔가 사례 관리를 받잖아요. 감시 아닌 감시, 쉼터는 사무실이랑 생활 공간이랑 붙어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야간 주간 오가면서 상주하고 계시니까 좀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스트레스였어 가지고" (8)

"좀 한참 체력이 넘쳐나는 애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해서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공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좀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여가 활동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5)

"건물이 흔들리는 게 막 느껴져요. 이 건물 자체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5)

"가장 필요한 게 리모델링인데" (11)

• 홍보 및 시설・지원 확대방안

"가정이 좋아서 여기를 오는 경우는 없기는 하니까 어쨌든 진짜 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확실히 저는 쉼터가 좋아요. 필요한 것도 저는 많이 지원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중략). 쉼터를 많이들 알고는 있는데 알아도 약간 알아도 알긴 하더라도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도 해서 많이 알려져야 하고, 쉼터 자체도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지원도 좀 더 늘었으면 좋기는 하겠어요(중략). 쉼터 자체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더 힘든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6)

"지금은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좀 좋은 환경이라" (5)

• 필요한 기능은 살리면서, 통합운영하는 방안

"통합운영하면, 그 합치게 되면은 한 건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지 짐을 싸러 갈 때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중략) 그런데 규칙과 모든 게 다 합쳐지는 건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불합리한 상황이 왔을 때 어차피 여기 가나 뭐 다른 데를 가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오히려 더 애들이 이용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능은 분리하고 건물은 합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 (10)

"중장기는 어쨌든 간에 애들을 조금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애들을 보호하는 게 3년 정도인데, 그래서 그 기능은 분리해서 두고 건물을 합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11)

• 행정업무 효율화 및 보상체계 강화방안

"또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인가 뭐 그런 거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뭐 하는 것도 있고, 평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뭘 그렇게 많이 하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바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가 올라가는데 이 스트레스를 이제 저희들한테 푸시는 건 절대 아닌데 선생님들이 요즘 힘드시구나 라는 걸 저희도 이제 느끼니까 이런 걸 좀 더 간편화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중략), 여기 쉼터에서는 다들 위기청소년이에요. 저도 위기청소년이죠.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더 저보다 강도가 심하고 애정결핍이나 뭔가 좀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높은 애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을 하고 그 애 감정이나 이런 걸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하는 직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강도가 센데 거기에 맞는 돈을 사실 많이 받지 못하시는 걸로 알아요(중략). 선생님들은 왜 늘 어떤 사명감 같은 것만 요구받는 걸까, 굳건한 사명감이 없으면은 못 버티세요. 그렇게 못 버티시면은 선생님들이 그냥 나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나가면은 의지할 만한 어른이 있었던 애들은 무너져요. 쉼터는 애들도 많이 바뀌지만은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사실 심해지거든요." (7)

"선생님들의 인원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일이 많고(중략) 왜냐하면 샘들이 사례 지원도 하시는데 갑자기 여러 명의 애들을 이제 사례를 맡고 계신데 상담도 하시고 갑자기 병원도 가시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빠 아빠 알코올 지원센터랑 연계해서 계속 아빠 소식도 단박되게 하셨고 생활지도도 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되게 여러 가지 하시고 쌤들이 많이 교체됐었어요. 저희 담당 쌤은 지금 퇴직하셨지만 제 다른 애들 담당 선생은 많이 좀 교체가 됐었거든요.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중략) 제가 만약에 그 애 입장이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에서는 어머니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아니지

만(중략) 지금은 유지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되게 심하게 교체될 때는 3개월에 한 번씩(중략) 그냥 너무 바쁘고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시고" (1)

3)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자취로 얻은 생활상의 자유에 대한 만족감이 반영되었거나, 자취할 때 단비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높은 만족감과 더불어 크게 개선사항에 대해 제안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청소년쉼터가 바로 연계되거나 통합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차별없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

"안경 지원이 되는데, 이제 지정된 안경점에서 딱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한도가 있는데, 저는 제가 난시가 심해서 10만 원으로는 안경을 절대로 못하니까, 지원받은 적이 없어서(중략) 현실적인 지원이 되면" (11)

- 쉼터와 연계 운영방안

"자립지원관은 쉼터와 같이 가는 게(통합운영) 필요한 것 같아요. 애초에 뭔가 쉼터랑 자립지원관이랑 같이 왜냐하면 쉼터에서 퇴소를 하면 자립지원관으로 연계를 자연스럽게 바로 바로 되는 게 필요하고" (1)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참여자들이 제안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개선방안으로는 운영과 관련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험을 제시하였다. 단순한 생활지도나 프로그램 운영보다 친구들 및 종사자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기존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프로그램보다 여행, 놀이공원, 문화활동 등 체험중심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여행 프로그램은 단순한 외부활동이 아니라 성취감, 정서 환기, 새로운 경험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시설 운영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분 중 하나로 학업과 진로, 자립준비 지원을 언급하였다. 청소년들은 상담과 정서적 지지 경험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문 상담 인력과 정서 지원 체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관계 중심 공동체 활동 강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같이 모여서 좀 산책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 이제 몰랐던 것

도 좀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친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12)

- 문화나 체험 중심 프로그램 확대

“ 그냥 그냥 문화 여가 생활이나 뭐 그런 거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는 연극 한번 보고 싶어요” (14)

- 맞춤형 학업・진로 및 자립지원 강화

저도 생활할 것도 고민되고요. 또 학업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부모님하고 조금 사이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지낼 곳이 조금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또 고등학교도 마땅하게 살 곳이 없고 그래서” (참여자 14)

- 전문인력 및 정서지원 체계 강화

“(연구자)기관 안에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아 좀 많이...” (12)

- 퇴소후 지속적 지원체계

“불량한 친구들이 몇 명 있으니까 걔네들이랑 놀다 보면 또다시 사고를 치지 않을까...” (하여 수저12)

3. 소결

본 절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경험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청소년복지시설 이용계기는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경찰에 신고되거나 법원의 행정법령, 복지기관・학교 등의 발견으로 의뢰되어 온 경우가 많았으며, 때로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오기도 하였다. 또한 가출생활 중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쉼터를 자발적으로 방문하거나, 가출하자마자 최후의 수단으로 쉼터를 찾아온 경우 등이 있었다. 유형별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일시청소년쉼터는 긴급지원을 통해 잠시 숨쉴 수 있게 도와주거나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도와주었으며, 단기청소년쉼터는 참여자들에게 지지체계가 되어 주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요람이나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하였고, 중장기청소년쉼터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좋은 부모같은 존재로서 참여자들을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참여자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도왔으며, 또한 실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관과 연계하였다. 마

지막으로 자립지원관은 생필품 지원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상담하였고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자립 정보 및 연계 지원, 다양한 모임 지원, 직업탐방 및 직업훈련 등 경제적 및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자립에 성공하였고, 자립을 통해 집단생활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과 자유를 얻는 경험을 하였다.

참여자들의 이용경험에 대한 만족감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규칙의 엄격함, 집단생활의 어려움, 의무교육의 비효율성, 고위기 청소년 이용자의 증가로 인한 생활 안정성 및 청소년기 사생활 보장의 문제, 시설의 열악함, 담당 선생님과의 갈등 등 다소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이용경험을 토대로 참여자들이 제안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일시쉼터에 대해서는, 위기응급상황시 상시・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과 쉼터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단기/중장기쉼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무교육에 대한 개선방안, 집단생활과 사생활의 균형,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규칙 운영방안, 라포형성과 이용자 중심의 관점 및 개입방안, 고위기 청소년 증가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분리된 개인공간 확보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 홍보 및 시설・지원 확대방안, 필요한 기능은 살리면서 통합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더불어 쉼터 선생님들의 업무과다와 이직률 문제를 거론하며, 쉼터의 행정업무 효율화 및 보상체계 강화방안 모색까지도 제안하였다.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해서는, 차별 없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 쉼터와 연계 운영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퇴소 이후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였다. 현재의 6개월 보호체계는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퇴소 이후 재비행 위험과 가족 갈등, 주거 및 학업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의 경우, 일반 자립지원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서적 지지와 관계 기반 지원이 지속되는 특화 자립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쉼터는 참여자들의 삶의 공간이자 거주공간이며, 쉼터에서 거주하고 자라는 기간 동안 좋은 부모와 같은 선생님과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존중받고 보살핌을 받으며, 민감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성장하

였다. 그리고 초기 성년기에 이르러서는 자립지원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스스로 자립과 사회복귀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쉼터와 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사회복귀를 돕는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고위기 청소년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개입체계와 지원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다양한 실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면서 시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역시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위기 청소년의 증가와 욕구의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적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의 실천적 요구를 반영한 운영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사례관리 체계 강화,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 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 각 시설을 기능별로 재구조화 및 사후지원체계 강화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청소년쉼터가 단순한 보호시설이라는 인식을 넘어, 가정 밖 청소년의 회복과 성장, 자립 및 가정·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의 핵심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현장전문가 FGI

1. 현장전문가 FGI 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현행 운영 구조의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모형을 탐색 및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 대상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방식으로 질적조사를 수행하였다. FGI를 통해 현행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과 실무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원자료(Raw data)는 개방코딩(Open Coding) 및 개념 명명화를 통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현장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선정은 청소년복지시설 현장에서 최소 10년 정도의 풍부한 임상 및 행정 경험을 갖춘 시설장 11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차수별 3~6인이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복지시설협회, 청소년회복지원시설협의회 등에서 추천하였다. 추천 명단 가운데 다양한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고정형), 단기청소년쉼터(남자, 여자), 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혼합형),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지역별 현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울산, 대전, 천안, 부산 등 각 지역과 시설을 대표하는 시설장을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Ⅴ-1>과 같다.

<표 Ⅴ-1> 현장전문가 FGI 연구 참여자 현황

대상	시설유형	직급	실무경력	성별	참석 차수
참여자 1	A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시설장	25년 9개월	남	1, 2차
참여자 2	B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시설장	18년	남	1, 2, 4차
참여자 3	C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설장	23년 5개월	여	1, 2, 4차
참여자 4	D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시설장	17년 5개월	여	1, 2, 4차
참여자 5	E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시설장	22년 1개월	남	1, 2차
참여자 6	F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시설장	28년 1개월	남	4차
참여자 7	G 청소년자립지원관(혼합형)	시설장	12년 8개월	남	4차
참여자 8	H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12년 5개월	남	4차
참여자 9	I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12년	남	3차
참여자 10	J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10년	남	3차
참여자 11	K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9년	여	3차

나.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26년 4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회당 약 120분~1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수행되었으며, 2명의 주/보조 연구진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다학제적 토론을 촉진하였다. 모든 FGI 과정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하에 음성 및 영상으로 녹화·녹음되었으며, 수집된 음성 자료는 텍스트 형태로 전사(Transcription) 처리되었다. 전사된 원자료(Raw Data)는 총 4개 회차, 약 180여쪽 분량의 전사 형태로 변환되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연구 윤리 보호조치를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 기대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 및 연구 동의서를 집행하였다. 수집된 모든 녹취 자료 및 개인정보는 익명화 처리되었으며, 연구보고서 작성시 실제 성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영상 및 전사 파일은 암호화된 파일로 보관되었으며, 연구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 종료 후 파기되도록 조치하였다.

- 1차 FGI : 2026년 4월 3일에 진행되었으며, 현행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한계(What)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시설 개선 모형의 전반적인 방향성(Where)을 탐색하기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

구 질문은 '청소년복지시설은 향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질문1 : 현재 청소년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한계 - 현재 운영방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질문2 : 인력/예산/프로그램 측면에서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질문3 : 현재의 쉼터 운영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자립, 치료, 예방 등)은 무엇인가?

- 2차 FGI : 2026년 4월 17일에 진행되었으며, 1차 FGI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체계 모형을 현장에 어떻게(How)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모형의 뼈대를 잡는 심층 질문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질문1 : 기능 중심 체계 및 구조 개편 구체화
한 시설 내에 '응급위기 안정, 집중회복, 자립전환' 트랙을 통합 운영할 시의 인력 및 공간 배분, 혼재된 연령층(저연령 및 후기 청소년)에 따른 차등적 규칙적용 및 분리보호 방식, 1인당 적정 면적 및 필수 분리 공간 구성 지침

질문2 : 드롭인 센터(Drop-in Center) 및 아웃리치 기능 구체화
입소 문턱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없애거나 완화해야 할 규칙(보호자 연락 등)과 시설 내 안전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규칙, 맞춤형 사례관리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초기 스크리닝 절차 및 기준

질문3 : 치료 연계형 구조 및 전문 의료 인력 보강
보강되어야 할 전문인력과 기존 사회복지사 간의 핵심 업무(R&R) 역할 분담 및 협업 시너지 창출 방안, 경계선 지능 등 복합 위기청소년을 위한 초기 조기 개입 진단 방식

질문4 : 실전 중심 자립전환 및 자립지원 제도 개선
실전 경험을 제공하는 자활 작업장의 운영 형태(자체 운영 vs 지자체 및

기업 연계 위탁모델), 실질적 자립 성과를 내기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적정 이용기간 연장 및 지원 가능한 상한 연령선

- 3차 FGI : 2026년 5월 7일에 진행되었으며, 1~2차 FGI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센터장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방안 및 운영모형의 대주제 아래 운영상의 문제점과 한계, 개선 모형 제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질문1 :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한계) 현재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문제점 및 한계- 지원 청소년, 시설 운영 구조, 인력 및 조직, 서비스, 자립 및 연계 운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강조되어야 할 기능

  질문2 : (개선 모형 제안) 효과적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구조- 서비스, 운영모델, 정책 목표와 성과, 제약 및 극복 요인, 기능 중심 체계 개편 의견

  질문3 : 발전적 제안 사항

- 4차 FGI : 2026년 7월 23일에 진행되었으며, 1~3차 FGI에서 도출된 모형(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를 비롯하여 트랙의 흐름, 공통기반 요소, 퇴소 후 통합안전망 구축 방안, 트랙의 대중적 명칭 등에 초점을 맞추어 유형 개편 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층 질문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질문1 : [모형 타당성] (가칭)뉴쉼터의 기능 중심 통합모형의 타당성 및 물리적 구조화

  1-1) 3단계 트랙(응급·위기안정, 집중회복, 자립전환)의 기능적 구분이 실제 복합 위기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궤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1-2) 현행 청소년복지시설의 물리적 인프라와 예산 현실을 고려할 때, ‘A모델‘과 ‘B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은 높은가? 두 모델 도입 시 예상되는 행정적, 물리적 장애물은 무엇인가?

  질문2 : [트랙의 흐름] 트랙 전환 및 외부 보호체계와의 유기적 흐름

  2-1)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이 본인 의사에 따라 뉴쉼터의 트랙2나 트랙3으로 전환될 때, 병목 현상이나 단절 문제의 원인

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공조 방안은 무엇인가?

2-2) 트랙1 → 트랙2 → 트랙3으로 전환 시, 청소년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적합한 트랙으로 배정하기 위해 어떤 객관적인 판별 기준이 필요한가?

질문3 : [공통기반] 공통 기반 요소의 현장 적용성

3-1) 각 트랙별 필수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3-2) 공간 재구조화는 과밀집을 해소하고, '1인 또는 소규모실(1~2인실)', '주거공간과 생활 공간의 완전 분리'를 실현하기 위해, 각 트랙별 물리적 공간 기준(예: 1인당 순생활 면적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3-3) 연령별/위기 수준별 차등 규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가?

3-4) 보호기간을 폐지하고 '보호기간 유연화(개별목표 성취 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대상자의 '목표 성취'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3-5) 경계선 지능 등 독립적인 사회진출이 지연되는 대상자에게 사후관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기존 '만 24세'로 제한된 연령 상한선이나 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가?

질문4 : [사후관리] 퇴소 후 통합안전망 구축 방안

4-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실효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어떤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4-2) 사후관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며, 적정한 수행인력은 얼마나 필요한가?

질문5 : [트랙 명칭] 트랙의 대중적 명칭

5-1) 청소년과 보호자가 낙인감(Stigma)이나 거부감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각 트랙의 명칭을 친근한 브랜드 명칭으로 전환한다면 어떤 용어가 적절한가?

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1~4차 현장전문가 FGI 전사 자료는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방법에 따라 '개방코딩(Open Coding)' 및 '개념 명명화'를 거쳐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텍스트 데이터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유의미한 패턴을

도출하고, 이를 개념화하여 일관된 범주로 묶어내는 분석 기법으로, 구체적인 내용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사된 원자료(Raw data)를 반복적으로 숙독하며 현장 전문가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맥락을 깊이 있게 파악하였다. 둘째, 원자료를 해체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유의미한 단위와 개념을 도출하는 개방코딩을 하였다. 셋째, 도출된 개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속성이 유사한 '하위범주(개념)'로 개념화하였다. 넷째, 이러한 하위범주들을 다시 현상의 맥락과 인과적 구조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범주(대주제)'로 통합하여 체계화하였다.

2. 현장전문가 FGI 분석 결과

본 연구는 1~4차 청소년복지시설 현장전문가 FGI(초점집단면접) 전사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원자료(Raw data)를 해체하여 의미 있는 단위를 도출하는 개방코딩을 거친 후, 유사한 속성들을 그룹화하여 하위범주(개념)와 상위범주로 명명화하였다.

각 차수별 FGI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차 FGI(2026.4.3.)는 현행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개선 모형이 가져야 할 구조와 시설 유형의 새로운 구분 기준 등 이상적인 발전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2차 FGI(2026.4.17.)에서는 기능 중심 체계(응급위기안정, 집중회복, 자립전환)의 구체화를 위해 한 시설 내 통합 서비스 제공 방안, 공간 재구조화, 시설 생활규칙 완화, 다학제적 전문인력 보강, 그리고 실전 중심의 자활 작업장 등 새로운 모형의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3차 FGI(2026.5.7.)는 1~2차 FGI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센터장 대상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한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주요 기능과 운영모형 제안, 기능 중심 운영모형의 의견,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4차 FGI(2026.7.23.)에서는 도출된 시설유형 통합모형(A모델/B모델)의 전반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트랙 간 유기적 전환 및 사법 체계와의 흐름, 필수 인력 구성, 연령 및 위기 수준별 차등 규칙, 목표 성취에 따른 보호기간 유연화 등 공통 기반 요소의 현실적인 실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장전문가 FGI 전사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분석 과정을 통해 총 15개의 하위범주와 이를 포괄하는 5개의 상위범주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명명된 5

개의 핵심 상위범주는 ① 현행 청소년쉼터의 구조적 한계, ② 쉼터 운영 패러다임의 기능 중심적 재구조화, ③ 다학제적 개입 및 특성별 맞춤형 생활지도의 다변화, ④ 다차원적 자립 인프라 확충 및 제도적 지원망 강화, ⑤ 시설유형 통합모형의 타당성 및 구체성으로 구성되었다.

가. 현장전문가 FGI 핵심 분석 요약

총 4차례의 현장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된 5개의 상위범주와 15개의 하위범주(개념) 및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청소년쉼터의 구조적 한계이다. 쉼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보호자 연락의 부담[3] 등 과도한 입소 조건으로 인한 진입 장벽 및 시설 기피 현상을 진단하였다. 또한 학대, 경계선 지능,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지닌 복합 고위기 청소년의 증가와 좁은 공간(44평 15명 거주 등) 내 수면·생활 공간 미분리, 종사자의 다중 과업 수행에 따른 만성적 직무 소진 문제를 도출하였다.

둘째, 시설 운영 패러다임의 기능 중심적 재구조화이다. 기존의 보호기간 중심(일시·단기·중장기) 체계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의 위기 수준과 개입 목적에 맞춘 '응급위기안정 - 집중회복 - 자립전환'의 3개 기능별 트랙 및 단일 시설 내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용 문턱을 낮춘 '응급위기안정' 기능에서는 기본 돌봄(식사·세탁·샤워)을 보장하고 초기 스크리닝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다학제적 개입 및 특성별 맞춤형 생활지도의 다변화이다.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의료적 전문 지원 및 연계와 사회복지 개입의 역할(R&R) 분담 및 공통 업무 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저연령과 후기 청소년 간 생활패턴 불일치 및 복합 외상 발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면 공간의 물리적 분리를 강조하였으며, 안전 관련 절대 규칙(폭력·마약·자해 금지)의 무관용 일괄 적용과 일상 규칙의 연

3)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입소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시설의 정확한 위치, 시설명의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 거부시 24시간 내외로 긴급보호하면서 위기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 또한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친족에 의한 성폭력 포함)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의 보호자 연락은 최근 완화되고 있음. 하지만 보호자들이 청소년의 시설 거주에 반대할 경우 시설과의 마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설은 여전히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임.

령·위기 수준별 차등 적용 체계를 구체화하였다.

넷째, 다차원적 자립 인프라 확충 및 제도적 지원망 강화이다. 대인관계 및 사회성 훈련을 위한 체험형 '자활 작업장(카페, 편의점 등)'과 쉐어하우스 형태의 자립 빌드업 공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현행 2년의 이용기간 및 만 24세 연령 제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 기간은 입소 시점 기준 최소 2년의 사례관리 기간을 확보하고, 상한 연령은 자립능력에 따라 만 25~30세까지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전담 인력 배치를 제안하였으며, 청소년자립지원관 공백 지역에 대한 광역 거점형 시설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섯째, 시설유형 통합모형의 타당성 및 구체성이다. 3단계 기능 트랙의 타당성과 백슬라이딩(재위기)을 고려한 양방향 유연한 순환 구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지역 인프라 편차를 고려하여 한 건물 내 통합형(A모델)과 근거리 분리형(B모델)의 병행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표준의뢰서 도입, 다학제 사례판정회의 운영, '집중회복' 기능 내의 특화시설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재포지셔닝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1인 1실(7~10㎡) 공간 기준, 트랙별 보호기간 유연화(목표 달성 시점 기준), 사후관리 연령은 퇴소 후 5년까지 보장하며, 외부 자원 연계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현장전문가 FGI(1차~4차)를 통해 최종 도출된 개방코딩 현황 및 세부 구조는 다음의 <표 Ⅴ-2>에 제시하였다.

<표 Ⅴ-2 > 현장전문가 FGI 개방코딩 현황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주요 내용
1) 현행 청소년 쉼터의 구조적 한계	① 쉼터 진입 장벽과 시설 기피 현상의 고착화	· 부정적 인식 및 혐오 시설 이미지 · 보호자 연락 부담으로 인한 진입 차단 · 통제적 생활 규칙 요구 · 시설 밖(거리) 청소년 양산
	② 보호 대상의 복합 고위기화 및 물리적·인력적 과밀화에 따른 소진	· 만성 가출 및 가정 복귀 불가 · 학대/경계선 지능/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 위기 청소년 증가 · 좁은 공간(44평 15명 거주) 내 수면/생활 공간 미분리 · 종사자의 다중 과업(상담/행정/생활지도) 수행
2) 쉼터 운영 패러다임의 기능 중심적 재구조화	① 기간 중심 체계 탈피 및 통합형 기능 트랙(응급-회복-자립) 도입	· 일시/단기/중장기 구분 폐지 · 기능·대상·개입 수준에 따른 모형 재설계 · 응급 위기 안정형/집중회복형/자립 전환형 트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주요 내용
		랙 분리 · 단일 시설 내 층/팀 분리를 통한 통합적(One-stop) 서비스 제공.
	② 이용 문턱을 낮춘 아웃리치(초기 발굴) 거점으로서의 '드롭인 센터'화	· 묻지마 쉼터 도입 · 기초 생존권(식사/세탁/샤워) 보장 · 보호자 연락 지침 폐지 · 까다로운 입소 서류 및 심사 축소 · 잠재적 위기청소년 초기 스크리닝 허브화
3) 다학제적 개입 및 특성별 맞춤형 생활지도의 다변화	① 전문 치료 인력(의료·심리) 도입 및 종사자 간 고유 역할(R&R)의 명확화	· 간호사 및 임상심리사 등 전문 정신건강 관련 인력 투입 · 의료적 개입(증상 및 약물 관리)과 사회복지 개입(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의 분리 · 상호 보완적 공통 업무 체계 구축
	② 대상자의 연령별 생활패턴이나 위기 수준에 따른 생활공간 분리	· 저연령과 후기 청소년 간 생활패턴(아르바이트 등 심야 귀가) 불일치로 인한 수면 방해 · 복합 외상(악몽, 발작 등) 발현으로 인한 타 청소년의 안전 위협 및 부정적 전이(다이나믹) 발생 · 수면 공간의 필수적 물리적 분리 · 생활/활동 공간의 조건부 통합 및 부분 분리
	③ 대상자의 연령대 및 안전을 고려한 생활규칙의 차등 설계	· 전기 청소년(아동/중고생) 대상 보호 중심의 통제 적용 · 후기 청소년(성인) 대상 자율 및 책임 기반의 규칙 전환 · 일상적 규칙(휴대폰 사용, 야간 외출, 용돈 관리 등)의 연령별 차등화 · 생존 및 안전과 직결된 절대 규칙(폭력, 마약, 자해, 기물 파손 금지)의 무관용 일괄 적용 · 기관의 보호 책임과 연계된 법적 기반의 표준화된 생활 매뉴얼 구축 필요성
4) 다차원적 자립 인프라 확충 및 제도적 지원망 강화	① 실전 중심의 체험형 '자활 작업장(빌드업 공간)' 운용	· 대인관계 및 사회성 훈련 · 자체 운영형 자활 작업장(카페, 편의점) · 외부 위탁 및 지자체 연계형 혼합 모델 · 자립 빌드업 공간(쉐어하우스 모델) 필요성
	② 자립지원의 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전담 체계의 제도화	· 현행 이용 기간 2년의 한계 · 연령 제한(만 24세)으로 인한 자립 실패 지속 · 이용 기간 최소 3~5년 확대 요구 · 지원 상한 연령 만 27세 상향 · 사후관리 전담 인력의 부재
	③ 청소년자립지원관	· 광역 및 도 단위 청소년자립지원관 미설치 지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주요 내용
	의 공백지역에 시설 확대 설치	역(예: 경상남·북도 등) 존재 · 인프라 부재로 인한 기능의 변질(일시·단기 쉼터 및 상담복지센터가 자립 사후관리 역할을 떠안음) · 시설 간 연계 단절 및 사각지대 발생 · 광역 단위의 거점형 청소년자립지원관 확대 요구
5) 시설유형 통합모형의 타당성 및 구체성	① 3단계 트랙 구분의 타당성	· 전반적 긍정 평가 : 증가 추세인 복합 위기청소년 특성 고려시 기능 중심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임, 3단계 트랙 구분 필요 · 순환형 전환 : 백슬라이딩 고려, 일방향 보다는 양방향 순환 구조 필요
	② 모델의 현장 적용성 및 장애물	· 적합성 : 한 건물 내 통합시설(A모델)이 사례관리의 연속성 유지와 동기부여를 위해 이상적이나, 지역 인프라의 편차 고려시 근거리 분리형(B모델)이 현실적이므로, 지역 여건 고려 두 모델의 병행 필요 · 정보 공유 : 시설 간 표준화된 통합 사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③ 트랙 전환시 판별기준 및 사법체계 연계	· 2차 피해 방지 : 트랙 전환시 반복 진술로 인한 거부감 완화를 위해 공통 서식 '표준의뢰서' 사용 · 사례판정 : 다학제적 통합사례판정 및 사례관리 전체 조정자 도입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재포지셔닝 : '집중회복' 특화시설로 전환(1호처분 신병인수 및 보호의무 이행)
	④ 공통 기반 요소의 현장 맞춤형 재구조화	· 트랙별 인력 : 트랙1은 3교대팀 및 위기사정 전담인력, 트랙2는 임상심리사 및 상담치료사, 트랙3은 사후관리 요원 및 자활작업장 관리자 신설 · 물리적 공간 : 1인 1실(7~10m^2) 및 방음, 휴게공간 확충 필요 · 규칙 : 폭력·약물 등의 절대 안전 규칙은 일괄 적용, 자율성(외출, 휴대폰 등)은 개별화, 형평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적용
	⑤ 보호기간 유연화 및 사후관리 지원체계	· 트랙별 보호기간 : 응급위기안정(트랙1)은 1주일, 집중회복(트랙2)과 자립전환(트랙3)은 개별 목표 달성 시점으로 유연화 · 사후관리 연령 : 경계선 지능이나 군복무 등 고려시 아동복지법 수준의 연령대로 상향(만 25~30세) 필요. 단, 기존 연령을 유지하되 성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주요 내용
		인기 진입시 지역자활센터 등 외부 자원 연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음 · 사후관리 권한 : LH주거지원 우선 추천권, 권리기반 사후관리(5년)
	⑥ 시설명칭의 브랜드화	· 낙인감을 주는 단어 배제 · 예) '청소년첫숨센터(응급)', '청소년이음센터/새힘센터(회복)', '청소년성장동행센터/도약센터(자립)' 제안 · '~터'보다 전문기관 느낌을 주는 '~센터' 선호 · 랩어라운드(Wrap-around)를 뉴쉼터 전체 통합 사례관리 모델로 정립

나. 현장전문가 FGI 세부 분석결과

1) 현행 청소년쉼터의 구조적 한계

가) 쉼터 진입 장벽과 시설 기피 현상의 고착화

현재 청소년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혐오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직면해 있으며, 까다로운 입소 조건으로 인해 대상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이 지적되었다. 특히 입소 과정에서 보호자 연락 부담, 엄격한 내부 규칙 준수 요구, 입소생 간 갈등 방지 등의 통제적 기준이 전제되면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쉼터 입소를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시설 밖 청소년'이 다수 양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는 그런 쉼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간판도 없고 지역에서도 혐오 시설로서 좀 인정 인식되는..." (참여자 1)

"없애거나 완화해야 될 부분은 보호자 연락. 왜냐하면 연락 가능해도 위험한 경우 가 있고, 초기 접촉단계에서 신뢰 형성을 방해하고..." (참여자 3)

"자살이나 자해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또 입소를 안 받는다든지...(중략)...과거에 생활시설에서의 강제퇴소 경험이 있으면 아이를 받지 않는 경우들도 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쉼터에 입소하기를 되게 꺼리는..." (참여자 3)

나) 보호 대상의 복합 고위기화 및 물리적·인력적 과밀화에 따른 소진

단순 일탈(가출 등)이나 비행보다 학대 피해, 폭력 피해, 경계선 지능, 트라우마 등 복합적인 상처, 우울, 조울, 분노 조절 증세 등을 지닌 고위기 청소년의 유입 비율이 급증하여 만성적 보호 형태를 띠고 있다. 반면, 협소한 물리적 공간 내에서 수면 공간과 활동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채 밀집 생활을 하며 내부 갈등이 유발되고, 종사자는 단일 인력으로 다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심각한 직무 소진(Burnout)을 겪고 있다.

"단순 가출청소년도 있지만 학대나 방임 청소년들도 많아지고, 특히 가족 갈등이 깊은 청소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어려운 청소년들이 오고, 또 다문화 가정,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국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현재 단기청소년쉼터나 일시청소년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쉼터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쉼터가 터미널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참여자 2)

"다수의 내담자와 다수의 종사자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구조로 물리적인 공간의 밀집이나 관계의 밀집이나 감정의 밀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복합적이고 다양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긴장과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가 청소년만이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정서적인 부담이나 소진을 유발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참여자 3)

"저희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44평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5명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공간도 부족하고 휴식공간도 부족하고 생활시설을 살아가는 어떤 그 자체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6인실, 4인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의 안정이나 회복을 지원하려고 만들었는데 사실 이 트라우마를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 밀집돼서 생활한다. 이건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아무리 전문가가 잘 개입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부정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참여자 3)

"의사 소견이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10명 중에 거의 한 8명 정도는 약을 먹고 있고, 지금 검사 단계에 있는 아이도 있고, 약물을 복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물이 가정에서 관리가 안돼서 어릴 때 먹고 미루어졌던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참여자 9)

"사실 이 아이들이 가해자지만은 이 아이들 또한 피해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또 사실 이렇게 좀 더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다 아동학대라든지 학교 폭력 피해자라든지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참여자 11)

2) 쉼터 운영 패러다임의 기능 중심적 재구조화

가) 기간 중심 체계 탈피 및 통합형 기능 트랙(응급-회복-자립) 도입

기존의 일시・단기・중장기라는 체류 기간 중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의 획일적 적용이라는 법적 구분을 폐지하고, '응급위기 안정-집중회복-자립전환'이라는 대상자의 발달 단계 및 위기 개입 수준 중심의 기능적 모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한 센터 건물 내에서 층별 또는 구역별로 공간을 분리하여 유기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저는 다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형은 사실 기능과 대상과 개입수준에 따라서 작동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능이 뭐냐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건 이제 위기가 안정될 수 있는 '응급보호'같은 역할을 하든, 자유롭게 사용하는 역할을 하든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좀 '회복'이나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립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대상은 '긴급 위기', 반복 위기의 '회복이 필요한 청소년', '자립준비 청소년' 이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고요" (참여자 3)

"아이들은 6개월 동안 비행으로부터 차단이 돼 있으면 조금 개선의 여지는 보입니다. 애들이 확 달라지진 않거든요. 6개월이 사실은 적응하는 데 3개월 걸리고 이제 조금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3개월 지나면 집에 가야 되니까...(중략) 저희가 1호하고 6호하고 소년원을 비교해 보면 6개월 처분받아서 6호나 다른 데는 조기 퇴소를 하거든요. 저희는 조기 퇴소가 없습니다. 무조건 6개월 무조건 꽉 채우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거든요. 아이들이 조금 나가서 뭔가 좀 필요에 따라 이렇게 연계돼서 아이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심적인 어떤 역할들이 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참여자 10)

"저희 쉼터가 이렇게 층을 나누어서, 물론 일시청소년쉼터가 있기 때문에 일시, 응급 위기 안정을 빼고 집중회복이랑 자립전환으로 해서, 지금 두 개 층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층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층이 이렇게 통으로 하나 연결되어 있든, 아니면 이렇게 호수별로 나뉘어져 있든 간에 그 층별로 정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서비스 인력들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응급 위기 안정 같은 경우에는 일시청소년쉼터처럼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인원 수가 조금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설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마련해주는 구조로 본다면, '응급 위기 안정'은 호수별로 나뉘어져 있는 형태로 가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층으로 가야될 거고, '집중회복'은 지금 청소년쉼터와 같은 형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립전환'은 방문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호수가 나뉘어져 있는 형태로 해서 자립을

정말 준비할 수 있도록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간은 정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최소 인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의 쉼터(시설) 안에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동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상담복지센터 안에 여러 팀들이 있듯이,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대신 공간에 대한 분리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층이라든지.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담 인력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는 형태로 그렇게 저는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중략)... 일시청소년쉼터에서 아이들을 보고 스크리닝을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완벽한 스크리닝이 잘 안되는 거예요. 관계 맺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일시청소년쉼터는 한 3일 정도로 아웃리치센터가 가고, 그 이후 한 달 정도 보호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긴급위기형'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4)

"층이 구분이 돼서 가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게 충분히 인력 배치가 안 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같은 층이 아니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과 지원이 되는 선에서는 층 구분이 되면 좋겠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실별로 2인 1실, 1인 1실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립전환도 지금 중장기 애들 보면 2인 1실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혼자 놔두는 것보다는 불안정해서 같이 있어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가지고, '자립전환형'에서도 2인 1실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진짜 개별적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경우 그거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회복집중형'이라고 하면 관리하고 뭔가 지원한다 그러면 자립전환에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훈련도 필요할 것 같고,...(중략)...기본적인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실에서 바리스타나 제과제빵이나 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여자 5)

나) 이용 문턱을 낮춘 아웃리치 거점으로서의 '드롭인 센터(Drop-in Center)'화

쉼터를 기피하는 거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유입을 권장하기 위해, 보호자 연락 통보 등의 규정을 없애고, 아이들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드롭인 센터(Drop-in Center)' 형태를 확충해야 한다. 이는 통제와 관리가 아닌 자유로운 쉼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후속 트랙(집중회복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초기 스크리닝 허브로 작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 '응급'이라고 하면 당연히 보호자 연락은 폐지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사업이나 전문적 결정을 통해서 좀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 문턱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입소절차, 만약에 고정형(일시청소년쉼터)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맞고요. 드롭인 센터라면 이게 틀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서류 중심 규정이 뭐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이용 종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출 외박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규칙이라고 말하기보다 비합리적인 운영사례 현장의 문제점일 수 있는데요. 벌점제를 너무 남용하거나, 고정형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규율을 너무 강조하거나, 개인 공간이 부족한 상 태로 계속 그 다이나믹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생활 규칙이 강화되는 것은 관계형성이 안 되니까 이

거는 좀 완화해야 되는게 아닌가?" (참여자 3)

" 입소 심사라는 스크리닝보다는...(중략)... 현재 위험도나 개입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트랙 연결, 그러니까 팀과 팀으로 연결하기 위한 어떤 분류 절차로 좀 설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process를 생각한다면, 만약에 현재 주거서비스의 필요 상황, 향후 홈리스가 될 수 있는 지속 위험 파악, 뭐 이런 표준화된 도구를 좀 만든다면, 이게 그 단계적인 심화평가까지도 그 센터 안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만약에 아이가 이용한다면 스크 리닝지가 당장 위험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오늘 잘 곳은 있는지, 혹시 지금 폭력이나, 누구한테 추적을 당하거나, 착취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자해나 자살이나 타살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약물이나 음주 중독이 있는지, 아니면 약간의 정신 증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즉시 보호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좀 판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는 그냥 평소에 좀 생각해 놨던 거는 응급상황, 그다음에 불완전 상황, 저위기 정보욕구 상황, 이렇게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응급상황을 '레드'로 본다면, 이 아이는 자살의 위험성도 있고, 나가면 성착취 위험성도 있고, 정신증으로 애가 좀 나가서도 노숙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러면 응급보호, 그다음에 뭐 좀 불안정한 상태다. 그러면 '주황색'정도로 생각을 하고, 당장 응급은 아니지만 뭐 반복 위기에 노출될 것 같다, 또는 학대가 좀 의심된다, 아니면 보호 공백이 좀 생길 것 같다. 그럼 이제 스크리닝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약간 '초록불'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정보 욕구도 있고, 니즈가 있어서 이 친구가 그래도 좀 저위기 상태야 그런 아이들도 간혹 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잠깐 데리고 있으면서 쉼을 제공하고, 관계형성을 한 다음에 드롭인센터를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유지하게 하거나, 장기 팔로우십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떨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참여자 3)

"만약에 이런 것들이 판별지라기보다는, 트랙을 배정하기 위해서...(중략)...저희가 '응급', '회복', '자립'이라는 센터로 얘기를 한다면, 트랙을 배정하기 위한 기능 평가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전, 주거, 정서, 기능관계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안전한지, 주거는 괜찮은 건지, 정서행동은 설명할 필요 없고, 기능은 학교나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경계선 지능인지, 왜냐하면 경계선 지능은 아웃풋(output)을 낼 수가 없으니까요...(중략)...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다 보면, 트랙으로 좀 배정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13살 아이가 들어왔는데 애가 지금 노숙하고 있어. 근데 학대를 피해서 나왔어. 근데 응급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만약에 18살인데 정신건강적으로 약간 우울과 불안은 있고, 반복 가출로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처럼 집도 갔다 나왔다를 반복해, 뭐 이러면 아 요거는 회복팀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뭘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19살, 24살이 응급 들어왔다. 근데 애는 집이 필요하다. 그럼 자립으로 바로 전환훈련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참여자 3)

3) 다학제적 개입 및 특성별 맞춤형 생활지도의 다변화

가) 전문 치료 인력(의료·심리) 도입 및 종사자 간 고유 역할(R&R)의 명확화

고위기 청소년의 안정화를 위해 시설 내에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다학제적 치료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종사자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 간호사는 투약지도 및 신체 건강을 돕고, 기존 사회복지사는 자원 연계 및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등 고유의 핵심 업무(R&R)를 명확히 구획하되, 위기 상황 시 보완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업무 조율 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치료연계형'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치료형 쉼터라고 하니까 이전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주지 않고 사회복지사와 상담사의 구조 안에서 치료까지 해내라고 하니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라서, 치료연계형은 의료인력의 최소한 간호사라도 그리고 임상심리사라도 이렇게 들어간 형태의 구조팀 안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참여자 3)

"저는 요거 딱 봤을 때 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모델을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분의 교집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업무들은 사례관리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초기상담이라든지, 위기 자살 위험평가나,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 상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할은 교집합으로 하시되, 그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료서비스 역할로 한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간호사는 의학이나 건강을 통한 그 내담자의 결국 치료연계형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증상관리 라든지, 약물복용 지도, 신체건강 점검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청소년들의 생활이나 환경 영역, 그리고 사례관리나 자원연계, 자립지원 관련된 그런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조금 구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임상심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험군 평가 사업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런 영역과 좀 유사하게 심리나 치료평가 영역에서 심리평가나 상담이나 치료 효과, 즉 외상평가나 상담치료와 관련된 역할로 조금 나눠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여자 1)

나) 연령별 생활패턴이나 위기 수준별 차이를 고려한 생활공간 분리

9세 아동부터 24세 후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위기 수준을 지닌 집단이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혼재되어 생활함에 따라 심각한 구조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후기 청소년의 심야 아르바이트 귀가 등 이질적인 생활패턴이 저연령 청소년의 수면 환경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중증 트라우마를 지닌 고위기 청소년의 악몽이나 돌발 행동이 타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미노 현상과 같은 부정적 집단 역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쉼터 내 공동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면 공간'을 대상자의 연령 및 위기 특성에 맞추어 물리적으로 명확히 분리해야 하며, 식사나 프로그램 등 일상 '생활 공간'은 대상자의 갈등 수준과 보호 목적에 따라 선별적 통합 또는 부분 분리하는 등 유연하고 체계적인 공간 구조화가 요구된다.

"지금 아홉 살 아동부터 스물두 살까지 열다섯 명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문제는 실제로 계속 충돌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연령 같은 경우는 통제가 좀 필요한 규칙이 필요하고, 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사실 자율이나 책임 기반으로 아이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 둘이 동일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이나믹이 일어나고, 그 일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 처리도 해야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중략)...답은 조건부 혼합이나 기능별 분리 운영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거죠. 생활공간은 부분적으로 분리하는 거죠...(중략)...부분 분리라고 하는 것은 수면 공간은 분리된 거죠...(중략)...이유는 사실 야간에 위험할 수도 있고, 생활패턴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스물두 살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0시 50분쯤 도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잠을 자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이 같다보면 씻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너무 시끄러워서 잠자던 아이들이 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단 말이죠" (참여자 3)

"또한 안전의 문제, 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제일 어려웠던 사례는 잠을 잘 때 침대에서 악몽을 꾸면서 몸부림을 치는 친구를 6개월을 데리고 있었는데, 4인실이었거든요. 근데 침대가 철제인데 이 친구가 만약에 한번 뭐 누가 나를 칼로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한다는 꿈을 꾸면, 이 친구는 침대에서 천장도 치고, 이층에서 살았으니까요. 막 떨어질까봐 선생님이 달려가야 되는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전의 문제가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이 차이는 잘은 모르겠지만, 수면공간과 생활공간에 약간의 어떤 분리들을 통해서 이건 좀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 (참여자 3)

다) 대상자 연령대 및 안전을 고려한 생활규칙의 차등 설계

발달 단계가 상이한 집단에게 단일한 통제적 규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설 내 민원 발생과 종사자 소진을 가중시키는 근본적 한계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전기 청소년에게는 보호 중심의 빡빡한 생활지도를 수행하되, 후기 청소년에게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 사용, 야간 외출, 용돈 관리 등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차등적 규칙' 도입이 필수적이다. 한편, 이러한 자율성의 확대와는 별개로 시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폭력 행사, 약물 및 음주, 극단적 자해, 기물파손 등 타인의 생존과 공동체 유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령을 막론하고 타협 불가능한 무관용의 '절대 안전 규칙'으로 통일하여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이중적 규칙 구조가

제시되었다. 나아가 현장 실무자가 겪는 과도한 책임 전가 부담을 경감하고 인권 보호 조치와 생활지도 간의 균형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령별 규칙의 한계선을 명시한 '표준화된 국가 단위 매뉴얼'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 하나는 차등 규칙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중략)...예를 들면 휴대폰이다 그러면 저연령은 분명하게 제한관리를 해야되고, 후기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자율책임으로 둬야 되죠. 9살에 계속 그 언니들하고 똑같이 11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요. 외출은 아동은 통제중심으로 이렇게 부분 관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참여자 3)

" 안전규칙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되, 연령대 전기 청소년이라든가 후기 청소년들은 좀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것,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휴대폰 사용, 외출 시간, 용돈 관리, 야간 외출 이런 부분인데, 후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전기 청소년들 경우는 약간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범죄라든가 비행에 노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생활규칙이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2)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안전'인 것 같아요. 자유는 보장하되,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이런 걸 늘 얘기하거든요. 폭력금지, 그게 선생님이 됐던 아이가 됐던, 신체나 언어나 성적으로 폭력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물이나 음주 금지. 지금은 마약이 없지만 약물을 털어놓는 아이들도 있고, 술을 몰래 들고 들어와서 소주를 먹는 아이들도 있고, 공간 내에서 계속 흡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은 화재로도 이어진 경험이 안양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유를 보장할 수 있지만 안전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제한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자해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 도미노 현상으로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하면 그 방 아이들이 모두 다 자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 다음에 기물을 계속 갖다 팔거나 당근에, 물건을 부수는 아이들, 그리고 위협행동을 해서 가위나 뾰족한 걸 들고 선생님을 찌르게 한다든가, 옆에 아이를 찌른다든가 이런 고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즉시 분리해 야지 안될 것 같다....(중략)...그래서 없애야 될 건 통제 중심 규칙이나 입소장벽 규칙을 좀 낮추는 거, 지켜야 할 것은 안전 중심이나 최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참여자 3)

4) 실전적 자립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한계 극복

가) 실전 중심의 체험형 '자활 작업장(빌드업 공간)' 운용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경계선 지능을 보유한 청소년이 일반 외부 기업의 인턴십에 즉각 배치될 경우, 실패율이 현저히 높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쉼터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자체적으로 또는 연계해서 운영하는 '체험형 자활 작업장(카페, 편의점 등)'

을 구축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 경험과 경제관념, 대인관계 훈련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버텨주는(holding) 공간이 요구된다. 더불어 퇴소 직전 요리 및 공과금 납부 등 일상의 자립 기술을 독립된 주거 환경(쉐어하우스 모델)에서 훈련할 수 있는 혼합형 자립 빌드업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체 운영모형은 성장일터라 해서 작년부터 I지역 작업장하고, 몇 개 작업장들을 성평등가족부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로 했을 때, 외부의 자원을 충분히 받지 않고 하느냐 이렇게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평등가족부에서 SK랑 인턴십 사업 같은 것들도 전국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KT 쪽 노동 지부랑 해가지고 아이들 취업시키는 거, 경비도 있고, 마케터도 있고, 전화 받는 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직종으로 진입하는 채용까지 간다 그래서 시도도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해보는데, 그 아이를 버텨주고 참아주면서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좀 끌고 가주는 게, 외부 기업에 연계했을 때 실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높고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중략)...작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연계하는 형태로 해서 인턴십 사업이라던가 일경험 같은 것들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지금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체 운영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외부 연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대인관계가 어렵거나, 경제적인 그런 감각이 없거나, 아니면 훈련해가지고 카페 메뉴가 열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메뉴를 시간 안에 만드는 것도 품이 들고, 견뎌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훈련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 과정을 거쳐서 그동안 어디가면 탈락하고 어디가면 탈락하고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못 하는 친구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는 훈련이 된다. 그러면 훈련된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매장이나 다른 곳으로 연계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면,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권에도 카페를 자체적으로 병행해 가지고 운영하는 쉼터도 있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도 와플대학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제적인 훈련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응대하는 훈련도 하기도 하고, 돈을 계산하고 뭔가 훈련도 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중략)...이런 거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연계형으로 말씀해주신 위탁모델은 제가 봤을 때는 협업모델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 (참여자 5)

나) 자립지원의 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전담 체계의 제도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현행 이용 기간(2년)과 연령 제한(만 24세)은 후기 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구조이다. 따라서 자립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용 기간을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상한 연령을 만 27세까지 상향 조정해야 하며,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할 '사후관리 전담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자립지원관은 지금 2년입니다. 후기 청소년들이 2년 안에 뭔가 자립성과를 내고 스스로 자립으로 나가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청소년들 요구사항으로는 자립준비 청년처럼 퇴소 후에 5년 하듯이,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 연령이 현재 청소년쉼터에서도 23살, 24살에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한데, 만 24살까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딱 그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쉼터 퇴소 후에 청소년자립지원관 6개월 이내로 받고 끝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상 만 24세를 넘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중략)...2년이라는 기간이 성인기에 들어온 만 19, 20세에 들어온다고 해도 2년이 너무 짧다. 그래서 물론 예외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다가 6개월 이내 사후관리하다가 개입을 해서 6개월, 6개월 연장해서 3년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2년 개입한 경우랑 3년 개입한 경우에 자립성과라던지 성취 수준이라던지 적응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훨씬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중략)...실질적으로 필요한 아이들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걸 열어 놓는다고 하면, 만 27세 정도까지, 아까 3년 마감 얘기 많이 나왔고, 그 정도까지로 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참여자 5)

"실제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좋은 어른 역할로 관계맺기를 했는데, 2년이 끝나고 그 친구들을 이렇게 끊어낼 수는 없어요. 결국은 좋은 어른하고 관계맺기가 된 그 선생님들이 좋은 관계에서 그 친구들을 계속 사후관리 개념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과중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래서 모든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사후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증원해 주시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게 현장에서 조금 어려움이고" (참여자 5)

V

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공백 지역에 시설 확대 설치

현행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의 핵심적인 구조적 한계 중 하나는 지역 간 인프라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다. 일부 광역 단위에 청소년자립지원관 미설치 지역이 존재하며, 이러한 인프라 공백으로 인해, 쉼터 보호를 마친 후기 청소년들이 마땅히 연계될 곳을 찾지 못하며, 결국 일시·단기 쉼터나 지역 상담복지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초과하여 자립 사후관리까지 떠안게 되는 역할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 단위'를 거점으로 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의 우선적 확대가 요구된다.

"수도권하고 아마 광역 단위나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아예 없는데, 지금 그런 도 단위로 설치가 안 된 데도 있고, 광역시도에 설치가 된 곳도 있고 한데, 실제로 저희 경기 남부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 지원하는 그 비율 자체가 거의 정원에 전체 32명 연 50 케이스 중에서 70%, 80%는 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방으로 갔을 때는 그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50% 이하까지도 떨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참여자 5)

"우리 보호 소년들에 대해 아이들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된 자립관이 있다면은 정말 저는 거기서 많은 꿈도 있고, 이 아이들이 분명히 누군가가 어떤 길을

터주면은 충분한 자질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범죄에서 어떤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저히 낮아질 수도 있을 거고, 이 아이들의 어떤 제 사회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정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민원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를 가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모든 전반적인 교육적인 부분이 사실 자립관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참여자 9)

"유형별 뭐 연계 체계가 실제로 일시, 단기, 중장기로 가는 부분이 생활권이나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예 광역 단위로 설치가 안 된 자립 지원관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라든지 LH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보니 자립관으로 가지 못하고, 없기 때문에 일시청소년쉼터 다른 쉼터, 아니면 상담복지센터로 그 역할들이 가게 되어서요. 그 기능들을 충분히 하게 하려면 광역 단위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둬야" (참여자 5)

5) 시설유형 통합모형의 타당성 및 구체성

가) 3단계 트랙 구분의 타당성

연구참여자들은 기존 일시・단기・중장기의 기계적 기간 구분을 탈피하고, 복합 위기 청소년의 상태에 맞춘 [트랙 1 : 응급・위기안정], [트랙 2 : 집중회복], [트랙 3 : 자립전환]으로의 기능 개편에 전적으로 공감하였다. 다만, 청소년의 회복은 유동적이므로, 자립준비 중 정신건강 악화 등의 '백슬라이딩(Backsliding)' 현상을 반영하여 일방향 트랙이 아닌 양방향 순환형 궤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단계 트랙으로 기능을 구분한 건 최근 증가되고 있는 복합 위기 청소년 특성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중략)...현장에서는 청소년의 회복 과정이 단계적으로만 진행되기보다, 위기 상황과 회복 수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립을 준비하던 청소년이 정신건강 악화나 가족 갈등으로 다시 위기 상황에 놓이거나, 집중회복 단계에서 응급 개입이 다시 필요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참여자 3)

"분명히 자립 준비를 해서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연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아지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그럴 경우 사실 자립 전환을 하는데 집중회복 단계로 다시 또는 응급 개입 단계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되는 사례도 있을 거라고... 3개의 트랙을 지금 화살표가 일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A든 B든 저는 이거를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환적인 전달체계로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좀 일단 들었고요." (참여자 3)

나) 모델의 현장 적용성 및 장애물

실무자들은 한 건물 내 통합분리 형태인 A모델이 청소년들의 이동 거부감을 줄이고, 자립한 선배들의 모델링을 통한 긍정적 자극을 유도하며, 사례관리 연속성을 담보하는 데 최적이지만, 현행 청소년쉼터의 물리적 구조가 낙후된 단독주택 임차 형태이거나 지역별 공간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어, 실제 단일 건물 내 3개 트랙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통합분리형인 A모델이 이상적이지만, 지리적 편차와 지역별 시설 자원의 불균형을 고려해 근거리 분리형인 B모델이 현실적이므로, 지역 여건에 따라 두 개의 모델을 병행 운영하는 로드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A 모델이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정말 자립, 그러니까 집중회복을 거쳐서 자립을 원한다면, 그 모델을 보면서 그 선배들의 모델을 보면서도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2)

"물리적 인프라와 예산을 고려할 때, B모델은 여전히 근거리에 위치하기에 지역적 한계와 신규시설 개소에 따른 비용 발생하므로 A모델이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A모델 역시도 통합시설 내 분리하기 위해 분리된 공간 마련, 분리된 공간에서의 인력 배치, 분리 운영에 따른 매뉴얼 필요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대 피해의 경우 계속 이용이 가능하므로 정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참여자 4)

"대부분 청소년쉼터는 기존 건물을 임차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간 구조를 기능별로 분리하기 어렵습니다...별도의 회복 공간이나 자립준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공간 재구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중략)...수도권과 달리 일부 지역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없어 B모델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중략)...A모델은 사례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용이한 이상적 모형이지만 공간 구조 분리가 어렵고, B모델은 단계적 확대가 가능하나 사례관리 단절 방지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규 시설이나 시설 이전 시에는 A모델을 우선 검토하고, 기존 시설은 B모델을 통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참여자 3)

다) 트랙 전환시 판별기준 및 사법체계 연계

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의뢰서' 마련

위기청소년이 하나의 트랙에서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기관으로 양도될 때, 각기 다른 서식과 이질적인 행정 절차로 인해 상당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기관을 바꿀 때마다 피해 경험과 폭력 이력 등을 새로운 사례관리자에게 매번 반복해서 털어놓아야 하므로 심리적 마모와 2차 외상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

적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쉼터와 복지시설이 공용으로 전산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연계 의뢰서와 사례기록 공유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보호 종료 시점마다 기관이 바뀌면서 사례관리 주체가 변경되고, 청소년이 새로운 기관에서 다시 초기 상담과 욕구 조사를 반복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심리적 피로감을 느끼고, 신뢰 관계를 다시 형성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자립 과정에서 이탈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퇴소 공문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례 평가 결과, 위험도, 치료 경과, 자립 준비 수준 등을 포함한 표준 연계 서식을 마련하여 기관 간 동일한 기준으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자 3)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저 가정에서 이랬어요. 아니면은 학교 폭력을 어떻게 당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각 기관에 갈 때마다 사례관리자에게 말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보 기입하는 거를 표준화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행정적으로 간소화되고, 또 그 긴급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더 빠르게 돼서 아이들 조금 거부감 없이 바로바로..." (참여자 7)

② 다학제적 통합사례판정 및 사례관리 전체 조정자 도입

단순한 기간 산정이 아닌 객관적 지표와 발달 성숙도에 근거하여 트랙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이전 예정 트랙의 전담 실무자뿐만 아니라 상담치료사, 의료인 등 다학제적 전문가가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판정 협의체가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전담 코디네이터인 '사례관리 총괄자'의 실무적 직무를 규정하고, 기능 전환 과정에서의 유기적인 소통과 유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통합 사례 판정회의를 구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뭐 현재 사례관리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트랙 안에 있는, 아니면 예정된 트랙에 사례관리자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다학제 간 사례 판정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학문적이지 않을까... 전체 기능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트랙 간 그 과정 안에서 역할을 담당하면 이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특히 사례관리 총괄자는 개별 시설이 아니라 전체 기능체계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여 트랙 간 이동 과정에서 사례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원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자 3)

③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집중회복(트랙2) 내 교정특화형으로 재포지셔닝

청소년복지시설 중에서 별도의 외부 인프라로 섬처럼 떠 있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집중회복(트랙2) 내부의 '법원 연계형(감호위탁 특화)'혹은 '교정특화형' 시설로 편입

시켜, 인력・예산・프로그램의 소외를 극복하고 통합 케어를 달성한다는 핵심 제안에 대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비롯한 소속 연구참여자들의 긍정적 수용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편입 당위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 사이드 배치에 따른 소외 방지 : 트랙 외부에 위치할 경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제도적·재정적 취약성 지속될 우려가 있음
- 대상자 특성의 유사성 : 법원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과거 학대 피해, 방임, 가정 해체, 정신건강 위기 등 복합 위기를 겪은 점에서 일반 쉼터의 고위기 청소년과 배경 스펙트럼이 거의 일치함
- 집중회복(트랙2) 내부 편입을 통한 인력・예산의 형평성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집중회복(트랙2) 내부의 '법원 연계형'특화시설, 혹은 '교정특화형' 시설로 흡수할 경우, 열악했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집중회복 트랙에 준하는 전문 치료 인력(임상심리사, 상담치료사 등)과 예산을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명분 마련
- 긍정적 집단 역동 및 교정 기능의 결합 : 감호위탁 청소년들만 격리・집단화할 때 나타나는 음성적 문화(부정적 집단 역동)를 방지하고, 일반 고위기 청소년들과의 자연스러운 통합 케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과의 소통, 신병 인수, 성행개선 및 교정 프로그램은 특화시설 기능으로 별도 수행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집중회복(트랙2)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특수한 상황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신병 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시설장이 위촉을 받아야 처분이 이루어지고 가능한 부분이라, 이 안에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능적인 요소 속에서는 교정이라 하는 게 더 들어가겠죠. 성행 개선에 대한 부분들, 범죄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회복 기능의 하나로 본다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회복 트랙 안에서 조금 구분되어 진다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여자 8)

"저희 단기・중장기 쉼터 같은 경우 위탁보호기관으로 해서 신병인수를 받는데, 집중회복에 그런 역할들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비슷한 집단끼리만 모여 있으면 더 어려운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지만, 이렇게 섞여 있으면 서로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집중회복에 이렇게 위탁보호 청소년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참여자 2)

라) 공통 기반 요소의 현장 맞춤형 재구조화

① 트랙별 전문인력 보강 및 순환근무제 도입

시설이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트랙별 고유 직무가 명시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트랙1은 실시간 입소 접수와 정확한 초기 사정을 전담하기 위해 3교대 순환근무제 도입을 통해 초기 판별 기능이 필요하며, 트랙2는 중증 트라우마와 경계선 지능의 심리 안정을 위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배치가 필요하고, 트랙3은 사회 정착과 취업을 보조할 사후관리 전담요원 및 노동 근로 기회를 제공할 위기 작업장 전담 관리자의 신설을 필수 요건으로 도출하였다.

"공통 배치 인력으로 소장 1명, 조리원 1명, 행정원 1명,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간호사 주야 각 1명씩 배치가 필요합니다. 트랙1(응급)은 1인 1실 2개실 기준 주간 3명/야간 3명, 트랙2(집중회복)는 5개실 기준 주간 5명(임상심리사 1명, 상담사 1명 포함)/야간 3명, 트랙3(자립전환)은 6개실 기준 주간 4명/야간 2명의 최소 인력이 상시 근무를 위해 확보되어야 합니다." (참여자 4)

"팀별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를 나눠서 뭐 3개 조로 나눠서 그거를 순환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야간 상담원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이 공유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고" (참여자 2)

"뉴쉼터는 치료시설이 아니라 생활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시설이므로 사회복지사와 보호상담원이 기본 인력이 되어야 하며, 임상심리사·정신건강전문요원은 평가, 자문, 치료연계 및 고위기 개입을 보완하는 다학제 팀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보호상담원 초기 사정이나 위기개입을 전담으로 하는 저는 상담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초기 스크리닝을 하는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계세요." (참여자 3)

"전국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로드맵의 옆에 나와 있는 사후관리 요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인력으로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인제 하기에도 좀 많이 벅찬 상황입니다." (참여자 7)

"저희 청소년 쪽은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노동 경험할 수 있는 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름하여 위기 작업장 관리자 이렇게 좀 추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 6)

② 사생활 보장 및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물리적 공간 확충

과밀 주거 환경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1인실(최소 7~10㎡ 이상) 확

보가 필요하며, 세면, 방음시설 등의 대대적인 주거 인프라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특히 집중회복 공간의 경우 방음시설과 넉넉한 상담실(정원 대비 다수 배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기준을 행정 지침이나 법규상에 경직적으로 고정해 의무화할 경우, 기존 낙후된 시설들의 인력적·예산적 한계로 수용정원 자체를 강제 감축해야 하거나 외곽으로 강제 이전해야 하므로, 반드시 지역적 인프라 수용성에 부합하도록 '권고사항'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이들의 안전이나 사생활이나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보장이 안 되는 시설도 생각보다 많아서 저희 시설이 그렇습니다. 한 방에 6명, 4명이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머리와 다리가 맞대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을 줄일까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침실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가 긴장도 낮추고 사생활도 회복되고 이래야 되는데 최소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저는 한 1인실이 만약에 침실 면적이라고 한다면, 최소 7, 7m² 나 아님 8에서 10m² 는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것도 작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참여자 3)*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방음이 안 되는 거, 시설마다 이제 그 시 설 설치 비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감각 조절이나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휴게공간이 필요한데, 시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담실도 최소한 아이들 인원수에 맞춰서 뭐 4, 5명이면 2개 이상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15명 정원인데 어느 날은 12명 정도 있다가 3~4명이 하루에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들어올 때는 공간이 없어서 남의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거나, 동시 공간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만약에 정원율이 높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것도 조금 더 확보하는 고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참여자 3)*

"이거는 조금 광역별로 지역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C지역 같은 경우에는...(중략)...생활관, 생활할 때 어떤 훈련할 수 있는 독립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을 구조화를 갖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립전환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지방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간 재구조화에 대해서...(중략)...명확하게 규정해버리면 대상자들이 많은 곳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는 필요하지만 그거를 조금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 지역이나 맞게끔 어쨌거나 저희는 더 많은 대상자들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지 어떻게 특별하게 잘하는 친구들만 지원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 재구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역별 특성에 맞게 좀 권고사항으로 해주시면..." *(참여자 7)*

③ 절대 안전규칙과 자율적 규칙의 이원화

규칙의 목적은 통제나 처벌이 아닌 자율성과 통제력 회복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폭력, 음주・약물, 절도, 자해 등은 무관용 '공통 안전규칙'으로 일괄 제재하고, 휴대전화, 외출・외박, 귀가시간, 알바 등은 연령별 및 위기 수준별 '개별 생활계획'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공통 안전규칙(폭력, 약물, 자해, 기물파손 금지)과 연령・위기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생활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위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휴대전화 압수, 외출 전면 금지 등 모든 권리를 일괄 제한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 최소 범위와 기간을 정해 재평가해야 합니다." (참여자 3)

"최소한의 선을 두고 그 선 안에서 쉼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줘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는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여자 2)

"공동 안전 규칙이다 그럼 폭력, 성폭력, 음주, 약물반입, 타인의 물품 절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물 소지 금지 이런 건 사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반면, 휴대전화 사용이라든가 외출이라든가 외박이라든가 귀가 시간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든가 이런 거는 전 연령과 기능 수준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야 된다" (참여자 3)"

마) 보호기간 유연화 및 사후관리 지원체계

① 개별 목표 성취도 중심의 보호기간 유연화

보호기간을 청소년의 개별 회복 상태와 목표 달성도(PIE, 자립척도 등)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유지하는 구조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적극 공감하였다. 다만 트랙1(응급·위기안정)의 경우, 기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시설 내 장기 방임이나 병목 현상이 일어날 위험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보호기간을 최대 일주일(7일)로 유지하는 것이 다음 트랙으로의 신속한 이행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목표를 기준으로 보호를 결정하는 제도가 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회복 수준 정도를 어떤 걸 쓰느냐는 모르겠어요. 자립준비 정도, 사회적 지지체계 정도, 생활기능 정도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일정 기준 이상을 트랙별로 충족할 경우, 그게 전환이나 보호 종료를 결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참여자 3)

"응급 위기는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응급 위기가 있으면...일주일이든 3일이든 4일이든 해서 다음 트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좀 줘야지 만약에 이러한 장치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들이 일시청소년쉼터에서 고

정형 일시청소년쉼터에서 위기청소년들을 1년씩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경우도..." (참여자 2)

② 지원 연령 상한선 재설계

후기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 정착을 담보하기 위한 지원 상한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실무자 간 의견이 엇갈렸다. 남자 청소년의 군 복무 중단 공백,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현저히 더딘 사회화 수준 등을 고려해 자립지원 연령 제한(만 24세)을 아동복지법(제16조의3) 수준인 만 25세로 확대하고, 경계선 지능, 정신건강, 주거 불안정 시 필요도 평가를 거쳐 만 29~30세까지 지원을 추가 연장하거나 입소 시점 기준 최소 2년의 사례관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청소년 복지전달체계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성인 진입 시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의 사회보장체계로 신속히 이관하는 것이 실무자 소진을 방지하는 상생책이라는 현실론도 일부 제기되었다.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립 전환으로 했었을 때 중간에 군대라는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어떤 재개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이 연령에 대한 제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중략)...자립지원관 대상자는 만 23~24세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 24세로 종료하면 1년도 채 못 받습니다. 시작점이 다르므로 입소 시점 기준 최소 2년 이상의 사례 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참여자 7)

"아동복지법에서 이런 자립전담요원들을 더 배치해서, 이런 친구들은 정말 종료 후에 20세 많이 있어요. 5년동안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참여자 2)

"현행 연령기준을 일률 적용하면 주거 상실, 실직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의 보호연장 기준과 연계하여 기본 지원기간을 만 25세로 설정하고, 경계선 지능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이 있는 경우 기능평가에 따라 만 29세~30세까지 필요도 기반 추가지원 제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참여자 3)

"청소년쉼터 안에서 위기청소년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고 가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전국에 246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저희도 권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커버가 가능한데, 굳이 왜 쉼터 안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수하는 것은 너무 힘이 빠진다. 너무 힘들다." (참여자 6)

③ LH 주거지원 우선 추천권 및 권리 기반 5년 사후관리

현행 LH 청년전세임대가 시설 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2025.9.20.부터) 가능해졌

지만 여전히 쉼터 퇴소 청소년의 미입소 현실을 지적하며 'LH 공공주택 우선지원 추천권' 제도 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했으며,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간에 맞춰 5년간 권리 기반 사후관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현재 2년 이상 이용자를 1순위로 인정하고 있으나, 쉼터 퇴소자의 2년 이상 이용 비율은 8.6%에 불과해 시설장이 'LH 공공주택 우선지원 추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중략)...자립지원수당이 최대 5년 동안 지급되는데 사례관리가 먼저 종료되면 안 됩니다. 수당 지급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일치시키고, 퇴소 청소년을 관리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사후관리 전담팀(최소 5명, 1인당 8~15명 전담)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참여자 2)

바) 시설명칭의 브랜드화

본 연구에서 트랙의 개념을 함축해 사용한 용어는 낙인감을 줄 수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중적으로 친근하게 불려지는 브랜드 명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트랙별 명칭의 예로서 '~터'로 통일성을 갖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과 '~터'는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아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감을 주는 '~센터'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또한 다학제적 사례관리를 뜻하는 개념으로서 '랩어라운드(Wrap-around)'라는 용어를 청소년복지시설의 모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례관리 브랜드로 표방할 것을 제언하였다. 보충의견서를 통해 나온 트랙별 명칭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응급·위기안정 (트랙1) : 첫숨터(혹은 첫숨센터), 웰컴스테이, 디딤터
- 집중회복 (트랙2) : 새힘터(혹은 새힘센터), 이음센터, 채움터
- 자립전환 (트랙3) : 도약터(혹은 도약센터), 성장동행센터, 자람터

" '~터'는 전문기관의 느낌이 아닌 개별 호실의 느낌이므로,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첫숨센터(응급위기안정)', '청소년 이음센터(집중회복)', '청소년 성장동행센터(자립전환)'와 같이 '센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여자 4)

"랩어라운드는 트랙 명칭보다는 뉴쉼터 전체의 사례관리 모델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뉴쉼터는 랩어라운드(Wrap-around) 기반 통합사례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학술적·실천적으로 매우 적절합니다." (참여자 3)

3. 소결

네 차례의 현장전문가 FGI 질적 내용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위한 모형안 구성의 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보호기간 중심에서 기능 중심의 유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기존의 일시·단기·중장기라는'보호기간'중심의 쉼터 유형 구분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복합적인 위기상태에 연속적으로 대응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위기 수준과 개입목표에 부합하는 기능 중심 트랙으로 패러다임을 전면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응급·위기안정(트랙 1) - 집중회복(트랙 2) - 자립전환(트랙 3)'의 3단계 기능 중심 트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 Ⅴ-3> 기능 중심 트랙

구분	내용
트랙1	응급·위기안정 (Drop-in Center & Emergency Hub)
	· 대상: 가출 초기 청소년 및 거리의 잠재적 위기군, 노숙 청소년 · 기능: 드롭인(Drop-in) 센터 기능으로서, 이용 문턱을 낮추어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아웃리치, 전환 연계 등 긴급 돌봄의 허브 역할 · 주요 서비스: 식사·샤워·휴식 등의 기본 돌봄, 초기 스크리닝 및 위기판별, 안전보호, 보호자 연락 등
트랙2	집중회복 (Intensive Recovery & Healing)
	· 대상: 정신건강 위기, 학대 피해, 복합위기, 지속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기능: 집중적인 심리적·정서적 치유 회복, 의료 및 다학제적 치료연계 · 주요 서비스: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심리치료 연계, 가족개입(원가족 복귀 지원)
트랙3	자립전환 (Independence Buildup & Transition)
	· 대상: 자립준비군 · 기능: 실전적 자립생활훈련 및 사회적 정착 지원 · 주요서비스 : 주거연계(쉐어하우스 등), 일상생활기술, 금전관리, 학업·진로지원, 취업지원, 체험형 자활작업장 실습, 정착 후 사후관리

둘째, 물리적 시설 구조는 지역별 여유 시설 자산의 보유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3개의 트랙이 근거리에 위치하는 근거리 연계형(B모델)이 현실적이다. 다만, 시설 여건이 가능하다면, 대상자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3개의 트랙이 한 건

물 내 분리 공존하는 통합분리형(A모델)이 이상적일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델은 행정구역별 지역 인프라의 격차와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 순차적인 시범 설치를 거쳐 중장기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예컨대, 인프라가 풍부하고 법인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 광역 지자체는 B모델을, 인프라가 미비하고 시설 간 단절 위험이 높은 시군구 중소도시 지자체는 A모델을 우선 검토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이원화 정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A모델 : 한 건물 내에서 층별 혹은 구역별(팀별) 구획을 분리하되, 원스톱 통합형 서비스 플랫폼으로 공존하는 형태이다. 이는 청소년의 시설 이동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사례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자립한 선배 청소년과의 긍정적 모델링을 유도하는 이상적 모형으로 실무진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쉼터의 낙후된 임차 건물 구조상 단일 건물 확보에 예산과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안정된 청소년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의 보호의 이득을 고민해야 한다.
- B모델 : 기존의 일시, 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근거리에서 밀착형 네트워킹으로 연결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현실적 대안이다. 다만 시설 간 이전에 따른 사례 단절을 막기 위해 사례 이력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서식 체계 및 정보망 관리가 필수적이다.

셋째, 유기적인 트랙 전환체계 및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회복 과정은 일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환경 변화나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하위 트랙으로 후퇴하는 백슬라이딩(Backsliding)이 빈번할 것이다. 따라서 트랙 전환은 양방향 순환 구조(Circular System)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 표준 연계서식(대상자 의뢰서) 공용 : 트랙 전환 시 매번 학대 피해나 가출 이력을 반복 증언하면서 겪는 2차 외상과 심리적 피로감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청소년 복지시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국 공용 표준 의뢰서' 및 서비스 히스토리가 관리 가능한 정보망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객관적 성취평가도구 마련 : 담당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위기 수준, 정서 회복 정도, 일상 생활기능, 자립준비도, 사회적 지지체계 등을 종합 평가하는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여, 전환 및 퇴소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학제 사례판정회의 및 총괄 코디네이터 : 트랙 전환 결정은 트랙별 사례관리자 외에도 외부 전문가(정신건강의 등) 참여의 다학제 판정회의를 거치되, 청소년 본인의 동의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트랙 간의 사례를 조정하는 '통합사례관리 총괄자'를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재포지셔닝으로, 그동안 청소년복지 체계 외부에 별도 인프라처럼 여겨지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집중회복(트랙2) 기능 내의 교정특화형(법원연계형) 시설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편입 당위성은 감호위탁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과거 학대 피해, 가정 해체, 중증 정서 위기 등의 배경이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트랙2 내로 흡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인력과 예산을 집중회복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될 수 있다. 아울러 감호위탁 청소년들만 격리될 때 생기는 음성적 또래 동조를 방지하고, 일반 고위기 청소년과의 자연스러운 통합 케어를 통해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타 집중회복 시설장도 법원으로부터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도 일반 집중회복 시설 기능을 확장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자립전환 기능 강화를 위한 실천 중심의 자립지원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대인관계 기피 및 경계선 지능을 지닌 청소년이 일반 업체의 인턴십에 곧장 투입될 경우, 잦은 실패와 좌절을 방지하고 실패를 완충해 주는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연계형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체험형 자활작업장 같은 실패가 용납되는 환경에서, 대인관계, 손님 응대, 금전 계산 등을 반복 훈련하는 작업장을 시설 자체 직영이나 지자체/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독립 주거 훈련을 위한 자립 빌드업 공간으로서, 퇴소 직전 요리, 공과금 납부, 청소 등 일상생활기술을 직접 실습해 보는 셰어하우스형 '자립체험주택'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광역 거점별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도 시급하다. 광주전남, 경남·북, 울산, 제주 등 청소년자립지원관 공백 지역으로 인해 기존 일시·단기 쉼터가 자립전환 기능까지 무리하게 떠안는 역할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공백지역에 광역 거점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섯째, 정신건강 전문인력 및 필수인력 구조의 보강이 전제되어야 한다. 쉼터 입소자의 70~80% 정도가 경계선 지능 수준이거나 심각한 복합 트라우마, 우울·자해 증상

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집중회복과 치유를 위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인력(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을 필수 보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약 점검 및 증상관리, 치료 연계 네트워크 구축 영역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담당하며, 심리 평가 및 상담치료 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분담하는 R&R(핵심 직무) 구획화가 필요하다. 인력구성은, 공통 필수인력으로 시설장, 통합사례관리 조정자, 보호·상담원, 행정원, 조리원, 야간전담인력이 필요하며, 트랙별 전담인력으로 트랙1에는 24시간 즉각 대응을 위한 3교대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초기 스크리닝 및 위기 수준 판별이 가능한 전담 상담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트랙2에는 중증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필요하다. 트랙3에는 주거 및 고용 연계를 위한 자립전담요원, 자활작업장 관리인력, 사후관리 전담요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보호기간의 유연화 및 지원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 트랙1은 시설 내 정체 및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과 같이 최대 1주일(7일) 이내의 제한을 두어 상위 트랙으로 신속 이행시키고, 트랙2와 트랙3은 획일적인 보호기간을 폐지하고 '개별 사례 목표 성취 시점'까지 유연하게 보호할 것을 제안한다. 보호연령은, 현행 만 24세까지는 자립준비가 미흡한 청소년을 길거리로 내몰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제16조의3)과 유사하게 기본 지원대상을 만 25세로 상향하고, 경계선 지능 등 자립능력 부족 시 만 26~30세까지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아울러 상한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립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입소 시점 기준 최소 2년의 사례관리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기간(5년)을 고려해 퇴소 후 최장 5년의 기간을 보장한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기존의 보호연령을 유지하되, 지역자활센터 등 기존 사회보장체계로 의뢰하여 청소년 연령대에 서비스를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대안이 필요하다.

여덟째, 연령별·위기 수준별 차등규칙과 공통규칙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9세 아동부터 24세의 후기청소년까지 한 공간에 혼재되는 시설 환경에서 동일한 생활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입소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입소 장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폭력, 음주·약물, 자해, 기물파손 등 자신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안전규칙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외출/외박, 휴대전화 사용, 귀가시간, 아르바이트 등은 연령대와 위기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시설 공간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협소한 물리적 공간에서 초래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수면공간(침실)과 학습, 식사, 상담, 프로그램 등의 활동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사무실 및 복도 등을 제외한 실거주 '순생활 면적' 기준도 신설하여, 1인실 공간(최소 7 ㎡ 이상)을 확보하고 침실 면적과 개인 침대, 책상, 잠금 수납장을 개별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트랙별 공간도 트랙1은 소규모 분리 안정실, 트랙2는 4~6명 규모의 소규모 유닛(가정형) 및 방음 상담실, 트랙3은 미니 주방을 갖춘 반독립형 주거 환경을 구획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공간의 재구조화는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신규 개소나 이전 시설은 엄격한 기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시설은 3~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상 권고사항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시설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친화적인 시설 명칭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트랙별 기능을 표현한 개념으로서 응급·위기안정, 집중회복, 자립전환 용어는 낙인 효과와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수요자 친화적인 시설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예시 1) 비타봄센터 (안심형 - 회복형 - 자립형)
- 예시 2) 아람자람센터 (첫숨형 - 이음형 - 도약형)
- 예시 3) 온길(ON-Gil)센터 (바로형 - 안심형 - 디딤형)

<표 Ⅴ-4> 시설 명칭 기능별 브랜드 제안

구분	브랜드명	뜻
트랙 전체 명칭	비타봄센터	● 어원 : 라틴어 'Vita'(활력, 생명, 삶) + 순우리말 '봄'(따뜻한 계절의 봄, 서로 바라봄) ● 의미 : 무기력과 상처로 얼어붙은 삶에 따뜻한 생기를 불어넣고, 서로를 보살피며 삶의 새로운 봄날을 맞춰가는 공간
	아람자람센터	● 어원 : 순우리말 '아람'(밤이나 도토리 등이 잘 익어 저절로 벌어진 결실) + '자람'(성장) ● 의미 :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스스로 단단하게 자라나, 주체적인 삶과 자립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곳
	온길(ON-Gil)센터	● 어원 : 溫(따뜻할 온), 순우리말 온 따뜻함의 순 우리말 어근+길(진로, 방법) ● 의미 : 응급의 어두운 길에서 따뜻한 길(溫, 온 ON-Gil)로 안내하기 위해 스위치를 켜고 있는(ON) 곳-> 자립까지 이어지는 따뜻한 길

구분	브랜드명	뜻
트랙 1-2-3 명칭	안심형-회복형-자립형	행정・임상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유형이 구분됨
	첫숨형-이음형-도약형	숨을 고르고(첫숨), 마음을 잇고(이음), 세상으로 나아가는(도약) 감성적 의미 강조
	바로형-안심형-디딤형	바로 지원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에서 회복하며 디딤의 발판이 되는 의미 강조

아울러,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개편 모형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 패러다임으로 '랩어라운드(Wrap-around) 모델[4]'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자 한다. 랩어라운드 모델은 다학제적 전문가와 비공식적 자원(가족, 이웃, 친척 등)이 가출, 비행, 정신건강, 가정해체 등 복합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둥글게 둘러싸고', 이들의 개별 욕구에 대해 맞춤형・입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중적 팀 기반 통합사례관리 실천 모형이다(VanDenBerg & Grealish, 1996). 이는 '응급・위기안정(트랙 1) - 집중회복(트랙 2) - 자립전환(트랙 3)'의 3단계 서비스 궤적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다학제적으로 지원하는 본 연구 모형과 부합한다. 이러한 랩어라운드 모델의 관점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단순한 수동적 보호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가 든든히 감싸안는 성장 동반자'로 재정의하고, 각 트랙 간 연계와 사후관리를 잇는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 안전망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랩어라운드(Wraparound) 모델 : 8가지 임상 철학적 요소는 지역사회 기반(Community-based), 철저한 개별화(Individualized), 문화적 유능성(Culturally competent), 부모의 주체적 참여(Parents included), 유연한 자금 확보(Flexible, non-categorized funding), 다기관 간의 협력 및 공동체 소유(Inter-agency & Community ownership), 무조건적인 보살핌(Unconditional care), 성과 측정(Outcomes measured)임

Ⅵ.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전환 의견조사

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전환 의견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제시에 앞서 청소년복지시설 현장에서는 운영모형 전환 관련하여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개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실제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간단히 현황 조사를 병행하였다. 청소년 정신건강 이슈 관련은 연구 설계 단계에서 조사 방향이나 내용이 포함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연구 기간의 제약 상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조사 기한의 한계로 인해 웹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시기는 운영모형(안)이 준비된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시설당 1회, 1명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문항은 <표 Ⅵ-1>과 같이 시설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 현황, 기능 중심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전환에 대한 인식 영역의 3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청소년 현황은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응답하고 일시청소년쉼터의 경우 7월 한달 동안의 평균 청소년 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의 첫 번째 영역은 시설의 일반적 특성으로 조사 응답 시설 유형, 응답자 직위와 경력, 시설이 속한 지역 규모 및 권역 구분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청소년 현황으로 시설의 청소년 정원과 현원(2026년 7월 기준), 약 복용과 관계없이 정신적·발달적 어려움(자살위기, 자해, 우울, 불안, ADHD,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등)을 겪는 청소년 실인원수와 세부 인원수, 정신적·발달적 어려움(자살위기, 자해, 우울, ADHD 등)을 겪어 약을 복용하는 청소년 실인원수, 법적 공적 제재(법률, 행정 규정 위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실인원수를 조사하였다. 마지막 영역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재편 필요 정도와 이유, 유형 재편시 기대되는 효과, 유형 재편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 유형 재편 시, 기존 시설의 적절한 유형 매칭, 소속 시설의 기능 중심 유형으로의 전환 용이 정도, 소속 시설의 기능 중심의 전환 준비 수

준, 기능 중심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기능 중심의 전환(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Ⅵ-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관련 의견 조사 문항

구분	내용
시설의 일반적 특성	시설 유형 응답자 직위 응답자 경력 시설이 속한 지역 규모 및 권역
청소년 현황	정원(2026년 7월 기준) 현원(2026년 7월 기준) 약 복용과 관계없이 정신적·발달적 어려움(자살위기, 자해, 우울, 불안, ADHD,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등)을 겪는 청소년 실인원수 - 자살 시도 경험 청소년 수 - 자해 시도 경험 청소년 수 - 우울, 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는 청소년 수 - ADHD 청소년 수 - 경계선 지능 청소년(느린학습자) 수 - 지적장애 청소년 수 정신적·발달적 어려움(자살위기, 자해, 우울, ADHD 등)을 겪어 약을 복용하는 청소년 실인원수 법적 공적 제재(법률, 행정 규정 위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실인원수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 실인원수
기능 중심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전환에 대한 인식	재편 필요 정도 재편 필요 정도 응답 이유(서술형) 유형 재편시 기대되는 효과(3개까지 복수응답) 유형 재편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1, 2, 3순위) 유형 재편 시, 기존 시설의 적절한 유형 매칭 소속 시설의 기능 중심 유형으로의 전환 용이 정도 소속 시설의 기능 중심의 전환 준비 수준 기능 중심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1, 2, 3순위) 기능 중심의 전환(안)에 대한 추가 의견(서술형)

2. 조사대상자 및 소속 기관의 일반적 특성

가.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 143명 중의 일반적 특성 중 직위를 살펴보면 시설장과 중간관리자가 각각 60명(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일선종사자는 23명(16.1%)으로 나타났다. 시설장과 중간관리자가 전체 응답자의 84.0%를 차지하여 본 조사에는 기관 운영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관리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6년 이상 9년 미만이 30명(2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9년 이상 12년 미만 27명(18.9%), 3년 이상 6년 미만 26명(18.2%), 15년 이상 24명(16.8%), 3년 미만 21명(14.7%), 12년 이상 15년 미만 15명(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근무경력은 9.21년(SD=5.91)으로 비교적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종사자들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Ⅵ-2>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분		n	%
직위	시설장	60	42.0
	중간관리자	60	42.0
	일선종사자	23	16.1
경력	3년 미만	21	14.7
	3년 이상 6년 미만	26	18.2
	6년 이상 9년 미만	30	21.0
	9년 이상 12년 미만	27	18.9
	12년 이상 15년 미만	15	10.5
	15년 이상	24	16.8
	m=9.21, SD=5.91		

나. 연구대상자 소속 시설 특성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시설의 특성 중 시설 유형을 살펴보면, 단기청소년쉼터가 58명(40.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중장기청소년쉼터 32명(22.4%),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16명(11.2%),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각각 13명(9.1%), 청소년자립지원관 11명(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Ⅵ-3> 연구대상자 소속 시설 특성

구분		n	%
시설 유형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13	9.1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16	11.2
	단기청소년쉼터	58	40.6
	중장기청소년쉼터	32	22.4
	청소년자립지원관	11	7.7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3	9.1
지역 규모	대도시	65	45.5
	중소도시	69	48.3
	농어산촌	8	5.6
	기타	1	.7
권역	수도권	55	38.5
	충청권	25	17.5
	호남권, 제주권	20	14.0
	영남권	34	23.8
	강원권	8	5.6
	기타	1	.7

지역 규모에서는 중소도시가 69명(4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는 65명(45.5%)으로 두 집단이 전체 응답자의 93.8%를 차지하였다. 반면 농어산촌은 8명(5.6%), 기타 지역은 1명(0.7%)으로 나타나 응답자는 주로 도시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근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이 위치한 권역 분포는 수도권이 55명(38.5%)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남권 34명(23.8%), 충청권 25명(17.5%), 호남권・제주권 20명(14.0%), 강원권 8명(5.6%) 순으로 나타났다.

다. 조사 시설 청소년 특성

조사대상자 소속 시설 청소년 특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은 시설 운영의 특성상 정원과 현원 등의 개념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중 다른 기관에 비해 극단치를 보이는 데이터는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소속 시설 청소년 특성 중 먼저 정원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이 평균 34.00명(SD=5.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기청소년쉼터 12.45명(SD=3.79),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10.87명(SD=2.39), 청소년회복지원시설 8.92명(SD=1.61), 중장기청소년쉼터 8.00명(SD=1.22) 순으로 나타났다. 현원 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평균 26.09명(SD=3.39)으로 가장 높았으며, 단기청소년쉼터 9.71명(SD=4.86),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9.00명(SD=15.7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7.15명(SD=2.73), 중장기청소년쉼터 6.78명(SD=2.0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용 청소년 중 정신적・발달적 어려움으로 복약 중인 청소년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이 평균 8.27명(SD=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7.27명(SD=6.34), 단기청소년쉼터 5.38명(SD=8.6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38명(SD=3.01), 중장기청소년쉼터 2.56명(SD=1.72)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적・발달적 어려움으로 복약 중인 청소년의 평균 인원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이 8.27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는 시설 규모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시설 규모를 고려하기 위해 평균 현원 대비 비율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가 약 80.8%로 가장 높았으며, 단기청소년쉼터 5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47.3%, 중장기청소년쉼터 37.8%, 청소년자립지원관 3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 인원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가장 많지만, 시설 수용 규모를 고려하면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와 단기청소년쉼터에서 정신적・발달적 어려움으로 복약 중인 청소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법적 공적제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평균 6.23명(SD=3.37)으

로 다른 시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기청소년쉼터 2.88명(SD=9.74),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2.27명(SD=3.65), 청소년자립지원관 1.91명(SD=1.58), 중장기청소년쉼터 .84명(SD=1.22) 순이었다. 시설 규모를 고려하기 위해 평균 현원 대비 비율을 산출한 결과에서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약 87.1%로 다른 시설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단기청소년쉼터는 29.7%,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는 25.2%, 중장기청소년쉼터는 12.4%, 청소년자립지원관은 7.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의 대부분이 법적 공적제재 경험을 가진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해당 시설이 법적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전문시설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Ⅵ-4> 연구대상자 소속 시설의 청소년 특성 1

단위: 명(SD)

구분	정원	현원	정신적·발달적 어려움으로 복약 청소년	법적 공적제재 청소년	원가족복귀 곤란 청소년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10.87 (2.39)	9.00 (15.78)	7.27 (6.34)	2.27 (3.65)	5.40 (4.26)
단기청소년쉼터	12.45 (3.79)	9.71 (4.86)	5.38 (8.63)	2.88 (9.74)	7.29 (13.23)
중장기청소년쉼터	8.00 (1.22)	6.78 (2.03)	2.56 (1.72)	.84 (1.22)	4.63 (2.67)
청소년자립지원관	34.00 (5.44)	26.09 (3.39)	8.27 (3.58)	1.91 (1.58)	23.55 (5.3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8.92 (1.61)	7.15 (2.73)	3.38 (3.01)	6.23 (3.37)	1.54 (2.26)

주)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은 정원과 현원 등의 개념 적용이 어렵기에 제외함.

원가족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이 평균 23.55명(SD=5.34)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단기청소년쉼터 7.29명(SD=13.23),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5.40명(SD=4.26), 중장기청소년쉼터 4.63명(SD=2.67),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54명(SD=2.26) 순으로 조사되었다. 원가족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평균 인원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이 23.5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설 규모를 고려하기 위해 평균 현원 대비

비율을 산출한 결과에서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은 90.3%가 원가족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으로 나타나 다른 시설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단기청소년쉼터(75.1%), 중장기청소년쉼터(68.3%),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6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1.5%로 가장 낮았다. 이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원가족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자립 준비와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신적·발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이 평균 12.36명(SD=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10.33명(SD=11.08), 단기청소년쉼터 8.29명(SD=15.17), 중장기청소년쉼터 4.06명(SD=2.11),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46명(SD=3.60)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규모를 고려하기 위해 평균 현원 대비 비율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가 114.8%로 가장 높았으며, 단기청소년쉼터(85.4%), 중장기청소년쉼터(59.9%), 청소년회복지원시설(48.4%), 청소년자립지원관(47.4%)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시 및 단기청소년쉼터에서 정신적·발달적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초기 위기 개입 기능이 강조되는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이 평균 4.36명(SD=2.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3.73명(SD=4.08), 단기청소년쉼터 1.78명(SD=3.56),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08명(SD=1.38), 중장기청소년쉼터 0.53명(SD=0.7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현원 대비 비율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가 41.4%로 가장 높았으며, 단기청소년쉼터(18.3%), 청소년자립지원관(16.7%), 청소년회복지원시설(15.1%), 중장기청소년쉼터(7.8%) 순으로 나타났다.

자해 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가 평균 4.53명(SD=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자립지원관 4.18명(SD=2.27), 단기청소년쉼터 3.10명(SD=4.77),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77명(SD=2.20), 중장기청소년쉼터 1.69명(SD=1.65)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현원 대비 비율을 산출한 결과에서도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가 50.3%로 가장 높았으며, 단기청소년쉼터(31.9%), 청소년회복지원시설(24.8%), 중장기청소년쉼터(24.9%), 청소년자립지원관(16.0%)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불안을 경험한 청소년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이 평균 9.55명(SD=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7.13명(SD=7.19), 단기청소년쉼터 6.36명(SD=11.28),

중장기청소년쉼터 3.25명(SD=1.95),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54명(SD=2.2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현원 대비 비율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가 79.2%로 가장 높았으며, 단기청소년쉼터(65.5%), 중장기청소년쉼터(47.9%), 청소년자립지원관(36.6%), 청소년회복지원시설(35.5%) 순으로 나타났다.

ADHD 청소년은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가 평균 4.40명(SD=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자립지원관 4.00명(SD=4.2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77명(SD=3.37), 단기청소년쉼터 3.12명(SD=4.55), 중장기청소년쉼터 1.63명(SD=1.21)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현원 대비 비율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48.9%), 단기청소년쉼터(32.1%), 중장기청소년쉼터(24.0%), 청소년자립지원관(1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Ⅵ-5> 조사대상자 소속 시설의 청소년 특성 2

단위: 명(SD)

구분	정신적·발달적 어려움 청소년	자살시도 경험 청소년	자해시도 경험 청소년	우울불안 경험 청소년	ADHD 청소년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적장애 청소년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10.33 (11.08)	3.73 (4.08)	4.53 (3.72)	7.13 (7.19)	4.40 (4.53)	2.53 (3.02)	1.00 (1.41)
단기청소년쉼터	8.29 (15.17)	1.78 (3.56)	3.10 (4.77)	6.36 (11.28)	3.12 (4.55)	2.66 (2.72)	.50 (1.29)
중장기청소년쉼터	4.06 (2.11)	.53 (.72)	1.69 (1.65)	3.25 (1.95)	1.63 (1.21)	1.78 (1.56)	.41 (.56)
청소년자립지원관	12.36 (4.48)	4.36 (2.20)	4.18 (2.27)	9.55 (4.20)	4.00 (4.20)	2.64 (2.46)	.64 (.81)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46 (3.60)	1.08 (1.38)	1.77 (2.20)	2.54 (2.22)	3.77 (3.37)	1.92 (1.80)	.15 (.55)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단기청소년쉼터가 평균 2.66명(SD=2.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자립지원관 2.64명(SD=2.46),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2.53명(SD=3.02), 청소년회

복지원시설 1.92명(SD=1.80), 중장기청소년쉼터 1.78명(SD=1.56)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현원 대비 비율은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가 28.1%로 가장 높았으며, 단기청소년쉼터(27.4%), 청소년회복지원시설(26.9%), 중장기청소년쉼터(26.3%), 청소년자립지원관(10.1%)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청소년은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가 평균 1.00명(SD=1.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자립지원관 .64명(SD=.81), 단기청소년쉼터 .50명(SD=1.29), 중장기청소년쉼터 .41명(SD=.56),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5명(SD=.55)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현원 대비 비율을 산출한 결과에서도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가 11.1%로 가장 높았으며, 중장기청소년쉼터(6.0%), 단기청소년쉼터(5.1%), 청소년자립지원관(2.5%), 청소년회복지원시설(2.1%) 순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전환 인식

가.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전환 필요

1)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전환 필요성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 중심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7명(39.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필요하다 46명(32.2%), 필요하지 않다 33명(23.1%), 전혀 필요하지 않다 7명(4.9%)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 중심 전환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명(72.1%)으로 필요하지 않다(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약 2.6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 중심 전환 필요성에 대한 평균은 3.07점(SD=.91)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 중심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6>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전환 필요성

구분		n	%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전환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7	4.9
	필요하지 않다	33	23.1
	필요하다	46	32.2
	매우 필요하다	57	39.9
	m=3.07, SD=.91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복지시설 72.1%가 기능 중심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시설 유형별로 응답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응답 결과를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표 Ⅵ-7>과 같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기능 중심 전환을 100% 찬성하고 있으며,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 92.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76.9%,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와 중장기청소년쉼터 75.0%, 단기청소년쉼터는 58.6% 찬성으로 나타났다.

<표 Ⅵ-7>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기능 중심 전환 필요 여부

구분	시설유형	응답 개수	필요하지 않다 응답	필요하다 응답	필요하다 응답 %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전환 필요성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13	1	12	92.3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16	4	12	75.0
	단기청소년쉼터	58	24	34	58.6
	중장기청소년쉼터	32	8	24	75.0
	청소년자립지원관	11	0	11	100.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3	3	10	76.9
	계	143	40	103	72.1

2)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전환 필요성 응답 이유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전환 필요성 응답에 긍정적 응답 이유를 기술한 103개 시설의

서술형 응답을 분석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에서는 기간을 중심으로 한 시설 구분의 한계(청소년 연계 한계), 기존 전문 인력 운영의 한계로 기능에 맞춘 인력 전문성 강화와 업무 수행, 시설의 운영 효율성 향상, 청소년쉼터의 지역별 편중, 시설 기능에 맞지 않는 쉼터 운영을 기능전환의 필요성으로 언급하였다.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는 고위기(위험) 청소년 증가, 인력전문성의 한계, 표적집단에 맞는 종사자 역량강화, 현 청소년쉼터 유형 모형 기능적 한계, 각 시설의 역할 재정립, 현장의 지원기준의 명확화, 기간으로 인한 반복 입소 청소년 증가, 맞춤형 지원 가능을 언급하였다. 단기청소년쉼터는 기간 중심의 비효율성(장기체류),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치료의 필요성, 전문화된 개입과정으로 청소년 안정화 기대, 입소기간의 부족, 기간만료 퇴소자의 정서적 불안감 증가, 가정 학대 등으로 장기 보호 청소년 증가와 지역 내 시설 부족으로 시설 연계의 한계, 퇴소 및 재입소의 반복으로 행정 낭비, 서비스의 연속성 강화, 이미 모든 기능을 담당, 단기와 중장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기능, 역할 중복(기능 혼재)으로 차별성 없음, 청소년 상태 변화에 따라 연속적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 중요를 기능 전환의 필요성 이유로 답변하였다. 중장기청소년쉼터의 경우 기관별 중복 역할, 시설 연계의 한계, 맞춤형 지원, 지역별 시설 설치 편차로 모든 유형의 청소년 보호로 인한 공간 부족, 전문적 케어가 필요한 청소년 증가, 전문적 쉼터 필요, 기간만료로 시설 연계로 인한 적절한 개입의 지연, 사례관리의 연속성 확보, 단기와 중장기 구분 무의미, 자립준비 자원 부족을 언급하였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 트라우마 전문 치료, 보호기간 중심 한계, 전국적 동질한 서비스, 지역 시설 불균형 설치로 시설 유형별 차별성 모호, 전문성 집중, 중복 업무 감소, 기간 보호로 인한 임시적, 일시적 조치로 제한을 기능 전환 찬성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증가, 인력 부족, 원가정 변화의 어려움, 지역별 편차 등을 언급하였다.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전환 필요성 응답에 부정적 응답 이유를 기술한 40개 시설의 서술형 응답을 분석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정형 일시청소년쉼터는 기간 설정의 필요성, 공간 확보에 대한 지자체 지원 한계, 지자체의 시설 추가 확충의 한계, 이미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기능 중심 전환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동형 일시청소년쉼터에서는 기능 중심 전환 이후 지역불균형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답변하였다. 기능 중심 전환의 필요성에 가장 회의적 답변 비율이 높은 단기청소년쉼터에서

는 가정 밖 청소년의 중복 기능 필요 청소년이 많아 복합적이고 통합적 지원의 한계 이유가 가장 많았고, 이미 시행중인 기능, 인력확충과 재정지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 부족(특히 정신건강 전문인력), 청소년 연령과 다양한 특성 미고려, 기존 입소 청소년 지원 공백, 기능 중심보다는 치료시설의 설치 필요, 자립지원시설 유형 전환 요청 거절 경험 등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각 시·군·구별 쉼터가 설치되지 않으면 중복 기능을 담당하여 기존 쉼터 역할 재반복, 더 힘든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의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 고위험군(자해 등), 지적장애청소년 대상 특화쉼터 필요, 현재도 유형별 특성에 맞게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인력 및 시설의 부족, 기존 분절된 서비스, 사각지대로 변화에 대한 기대감 상실, 법적 제재를 받은 청소년과 입퇴소가 비교적 자유로운 청소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개편의 기대 및 우려사항

1)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개편의 기대 효과(다중응답)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 중심 개편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중 가장 높은 응답은 입소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로 106건(케이스 기준 74.1%)이 응답하여 기능 중심 개편의 가장 중요한 기대 효과로 인식되었다. 다음으로 쉼터 기능의 명확화 67건(46.9%),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 62건(43.4%)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시설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용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변화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운영 효율성 제고 38건(26.6%), 대책 없는 퇴소 예방(일명 '쉼터돌이' 문제 해소) 35건(24.5%), 종사자 역할의 명확화가 34건(23.8%)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 중심 개편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시설 간 반복적인 입・퇴소를 예방하여 청소년의 지속적인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Ⅵ-8>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개편의 기대효과

구분	n	%	케이스 기준 %
입소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	106	29.4	74.1
쉼터 기능의 명확화	67	18.6	46.9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	62	17.2	43.4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11	3.0	7.7
종사자 역할의 명확화	34	9.4	23.8
운영 효율성 제고	38	10.5	26.6
대책 없는 퇴소 예방 (일명 “쉼터돌이” 문제 해소)	35	9.7	24.5
기타	8	2.2	5.6

2)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개편의 우려 사항(다중응답)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 중심 개편에 따른 우려 사항을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중 전체 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설 공간 재구성의 어려움과 기능 전환 기준의 모호성이 각각 68건(16.0%)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인력 기준 미비 65건(15.3%), 예산 부족 54건(12.7%), 종사자 업무 증가 42건(9.9%)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에서는 인력 기준 미비가 35명(24.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기능 전환 기준의 모호성 27명(18.9%), 예산 부족 20명(14.0%), 종사자 업무 증가 19명(13.3%), 시설 공간 재구성의 어려움 16명(11.2%)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에서는 시설 공간 재구성의 어려움이 36명(2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력 기준 미비 19명(13.3%), 기능 전환 기준의 모호성 18명(12.6%), 예산 부족 15명(10.5%), 종사자 업무 증가 14명(9.8%) 순이었다. 3순위 응답에서는 기능 전환 기준의 모호성이 23명(16.1%)으로 가장 높았으며, 예산 부족 19명(13.3%), 퇴소 기준 모호 18명(12.6%), 시설 공간 재구성의 어려움 16명(11.2%), 지역 내 역할 중복 또는 혼선과 평가·행정 부담 증가가 각각 14명(9.8%)으로 나타났다.

<표 Ⅵ-9>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개편의 우려 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m	%	m	%	m	%	m	%
인력 기준 미비	35	24.5	19	13.3	11	7.7	65	15.3
종사자 업무 증가	19	13.3	14	9.8	9	6.3	42	9.9
예산 부족	20	14.0	15	10.5	19	13.3	54	12.7
시설 공간 재구성의 어려움	16	11.2	36	25.2	16	11.2	68	16.0
기존 입소청소년 지원 공백 우려	4	2.8	8	5.6	8	5.6	20	4.7
지역 내 역할 중복 또는 혼선	10	7.0	11	7.7	14	9.8	35	8.2
기능 전환 기준의 모호성	27	18.9	18	12.6	23	16.1	68	16.0
평가·행정 부담 증가	1	.7	11	7.7	14	9.8	26	6.1
시설 입소 대기인원 증가	4	2.8	5	3.5	8	5.6	17	4.0
퇴소 기준 모호	7	4.9	5	3.5	18	12.6	30	7.1

다.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시설 유형 전환 용이성

1) 기능 중심 시설유형 재편에 따른 기존 시설의 기능적 유형 인식

기능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을 응급·위기안정, 집중회복, 자립전환 유형으로 재편할 경우 기존 시설이 어떤 기능적 유형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결과 중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140명(97.9%)이 응급·위기안정형으로 인식하였으며, 집중회복형 1명(.7%), 자립전환형 2명(1.4%)으로 나타났다.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역시 136명(95.1%)이 응급·위기안정형으로 응답하여 일시청소년쉼터는 기능 중심 재편 시 응급상황 대응과 초기 보호를 담당하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Ⅵ-10> 기능 중심 시설유형 재편에 따른 기존 시설의 기능적 유형 인식

구분	응급·위기안정		집중회복		자립전환	
	n	%	n	%	n	%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140	97.9	1	.7	2	1.4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136	95.1	5	3.5	2	1.4
단기청소년쉼터	32	22.4	104	72.7	7	4.9
중장기청소년쉼터	3	2.1	53	37.1	87	60.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2	8.4	118	82.5	13	9.1
청소년자립지원관	1	.7	1	.7	141	98.6

단기청소년쉼터는 집중회복형이라는 응답이 104명(72.7%)으로 가장 높았으며, 응급·위기안정형 32명(22.4%), 자립전환형 7명(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청소년쉼터가 단순 보호 기능을 넘어 심리·정서 회복과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한 회복지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자립전환형이라는 응답이 87명(60.8%)으로 가장 높았으며, 집중회복형 53명(37.1%), 응급·위기안정형 3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집중회복형이라는 응답이 118명(82.5%)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립전환형 13명(9.1%), 응급·위기안정형 12명(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핵심 기능을 보호처분 청소년의 심리·정서 회복과 행동 변화, 사회복귀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41명(98.6%)이 자립전환형으로 응답하였으며, 응급·위기안정형과 집중회복형은 각각 1명(.7%)에 불과하였다. 이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이 보호 종료 이후 자립 준비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전문시설이라는 기능적 정체성이 현장에서 매우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기능 중심 시설유형 전환 용이성 및 준비 수준

기능 중심 시설유형으로의 전환 용이성과 준비 수준에 대한 인식 중 기능 중심 시설유형으로의 전환 용이성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56명(39.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5명(24.5%),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17명(11.9%)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전환이 용이하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63.7%(91명)로 용이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응답 52명(36.4%)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환 용이성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2.76점(SD=.96)으로 연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기능 중심 시설유형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능 중심 시설유형 전환을 위한 현재의 준비 수준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43명(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 41명(28.7%),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37명(25.9%),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 22명(1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다(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80명(55.9%)로 준비되어 있다(준비되어 있다+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 63명(44.1%)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능 중심 시설유형 전환을 위한 현재의 준비 수준에 대한 평균도 2.34점(SD=1.03)으로 현장의 준비 수준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표 Ⅵ-11> 기능 중심 시설유형 전환 용이성 및 준비 수준

구분		n	%
전환 용이성	전혀 그렇지 않다	17	11.9
	그렇지 않다	35	24.5
	그렇다	56	39.2
	매우 그렇다	35	24.5
	m=2.76, SD=.96		
준비 수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37	25.9
	준비되어 있지 않다	43	30.1
	준비되어 있다	41	28.7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22	15.4
	m=2.34, SD=1.03		

3)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한 필요 지원(다중응답)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 중심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중 전체 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명확한 유형 전환 기준 제시 106건(24.7%)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예산 지원 확대 82건(19.1%), 인력기준 개선 73건(17.0%), 단계적 전환 추진 49건(11.4%), 시설 기준 정비 45건(10.5%)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에서는 명확한 유형 전환 기준 제시 70명(49.0%)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예산 지원 확대 26명(18.2%), 인력기준 개선 18명(12.6%), 단계적 전환 추진 9명(6.3%)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에서는 예산 지원 확대가 38명(2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력기준 개선 32명(22.4%), 시설 기준 정비 20명(14.0%), 단계적 전환 추진 17명(11.9%), 종사자 교육체계 마련 16명(11.2%) 순으로 조사되었다. 3순위 응답에서는 명확한 유형 전환 기준 제시 26명(1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기준 개선과 단계적 전환 추진이 각각 23명(16.1%), 시설 기준 정비 21명(14.7%), 예산 지원 확대 18명(1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Ⅵ-12>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한 필요 지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m	%	m	%	m	%	m	%
명확한 유형 전환 기준 제시	70	49.0	10	7.0	26	18.2	106	24.7
예산 지원 확대	26	18.2	38	26.6	18	12.6	82	19.1
인력기준 개선	18	12.6	32	22.4	23	16.1	73	17.0
종사자 교육체계 마련	3	2.1	16	11.2	7	4.9	26	6.1
시설 기준 정비	4	2.8	20	14.0	21	14.7	45	10.5
평가체계 개선	4	2.8	6	4.2	13	9.1	23	5.4
단계적 전환 추진	9	6.3	17	11.9	23	16.1	49	11.4
입·퇴소 평가 기준 마련	6	4.2	4	2.8	10	7.0	20	4.7
기타	3	2.1	-	-	2	1.4	5	1.2

4)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전환에 대한 추가 의견

위에서 제시한 기능전환의 필요성 정도 응답 이유 기술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 이용 청소년 관련하여, 입소 중이거나 기능 중심 개편시 입소청소년의 거

취 문제 마련, 정원 초과시 대기 청소년의 위기 대응 문제, 시설 미입소 가정 밖 청소년(가출팸, 독립주거 등) 등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 집중회복과 자립전환이 동시에 필요한 청소년 고려, 고위기청소년 능동적 발굴을 추가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기능 중심 유형 전환 관련하여 기존 쉼터 전환 의향 의견조사, 청소년복지시설 고위험성 문제 조사, 현장 토론회 및 공청회 필요를 응답하였다. 또한 운영모형 전환이 장기적 플랜을 수립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단계별 전환기준 및 시행, 운영지침 마련, 기능 변경에 따른 시설 명칭 변경, 평가체계 기준 마련, 권역별 필수 설치 개수 및 규모 제시, 국가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입퇴소 평가기준 마련, 자립지원체계 마련(청소년안전망 개편 및 활용), 시설간 연계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인력 관련해서는 청소년복지시설 정신건강 전문인력 추가 배치, 고위기 청소년 담당자의 처우 개선, 야간생활지도사 확대를 제안하였다.

운영 관련해서는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초기 사정틀 개발, 동일 지역 내 타시설과 기능 조율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긴급임시보호권 법제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처럼 국가가 적극적 개입하여 '강제 분리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 부여, 미성년자 입소 및 보호의 법적 장치 마련과 지자체별로 국가 차원의 청소년정신병원 설치,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이용형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권장(청소년의 독립주거와 자립 지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전문시설 별도 분리를 제안하였다.

4. 소결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 중심 유형 전환에 대한 현장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의 시설 유형을 보호기간이나 운영방식 중심으로 구분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이용 청소년의 욕구와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는 시설장과 중간관리자가 각각 42.0%로 전체 응답자의 84.0%를 차지하였고 평균 근무경력도 9.21년으로 나타나, 기관 운영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기능 중심 개편에 대한 현장의 정책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설별 이용 청소년의 특성을 통해서도 현행 시설 유형 간에 주요 이용 청소

년의 욕구와 지원 필요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능에 따른 시설체계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와 단기청소년쉼터는 정신적·발달적 어려움, 복약, 자살·자해 경험, 우울·불안 등의 위기 특성을 가진 청소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평균 현원 대비 정신적·발달적 어려움으로 복약 중인 청소년의 비율은,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80.8%, 단기청소년쉼터 55.4%로 나타났다. 정신적·발달적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역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와 단기청소년쉼터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자살·자해 경험과 우울·불안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와 단기청소년쉼터가 단순한 일시보호나 숙식 제공을 넘어,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초기 사정과 안정화, 정신건강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기능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시설의 고유한 기능적 특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법적 공적 제재 경험 청소년이 평균 현원의 약 87.1%로 다른 시설보다 현저히 높아, 보호처분 청소년의 회복과 행동 변화,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능이 뚜렷하였다. ADHD 청소년의 비율 역시 평균 현원 대비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문적인 심리·정서 및 행동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원가족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비율이 평균 현원의 90.3%로 나타나, 원가족 복귀보다는 독립생활 준비와 지역사회 정착을 중심으로 한 자립지원 기능이 핵심적인 시설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시설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실제 이용 청소년의 특성과 지원 욕구에 따라 시설별 핵심 기능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능 중심 전환 자체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도 비교적 높았다. 기능 중심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비율은 72.1%였으며, 평균도 3.07점으로 나타났다. 기능 중심 개편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입소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에 대한 기대가 74.1%로 가장 높았고, 쉼터 기능의 명확화 46.9%,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 43.4%가 뒤를 이었다. 즉 현장에서는 기능 중심 개편을 단순한 시설 명칭이나 행정적 유형 변경보다는, 청소년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별 역할과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응급·위기안정-집중회복-자립전환의 3개 기능체계에 대한 기존 시설의 기능적 배치도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다.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97.9%, 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95.1%가 응급·위기안정형으로 인식되었으며, 단기청소년쉼터는 72.7%, 청소년회복지원시설 82.5%가 집중회복형으로 응답하였다. 청소년자립지원관 98.6%, 중장기청소년쉼터 60.8%가 '자립전환형'으로 인식되어, 기능적 정체성에 대한 합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향후 개편 과정에서 일시청소년쉼터는 응급·위기안정, 단기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집중회복,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중장기청소년쉼터는 자립전환을 중심으로 기능 설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능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우려와 관련해,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시설 공간 재구성의 어려움과 기능 전환 기준의 모호성이 각각 16.0%로 가장 높았고, 인력 기준 미비 15.3%, 예산 부족 12.7%, 종사자 업무 증가 9.9% 등이 주요 문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1순위에서 인력 기준 미비가 24.5%로 가장 높았으며, 기능 전환 기준의 모호성도 18.9%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시설 유형만 변경하고 기존 인력과 예산, 공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능 중심 개편이 실질적인 서비스 변화보다는 종사자의 업무 부담 증가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능 중심 개편은 명확한 전환 기준 마련과 충분한 자원 지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필요로 하는 지원을 조사한 결과에서, 명확한 유형 전환 기준 제시가 전체 응답의 24.7%로 가장 높았고, 예산 지원 확대 19.1%, 인력기준 개선 17.0%, 단계적 전환 추진 11.4%, 시설 기준 정비 1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순위 응답에서 명확한 유형 전환 기준 제시가 49.0%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기능 중심 개편에 앞서 각 유형의 대상 청소년, 핵심 기능, 입·퇴소 기준, 서비스 내용, 사례관리 범위와 시설 간 연계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표준화된 기능모형과 전환 지침이 우선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전환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청소년복지시설을 응급·위기안정-집중회복-자립전환의 기능적 연속체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에 대한 현장의 수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명칭과 유형을 재분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 청소년의 위기 수준과 회복·자립 욕구를 기준으로 시설의 핵심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문인력, 예산, 공간 및 시설 기준, 사례관리체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 특히 시설별 기능을 완전히 분절하기보다는, 청소년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응급·위기안정에서 집중회복을 거쳐 자립전환으로 연속 이동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와 시설 간 의뢰·연

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존 시설의 여건과 지역별 자원 격차를 고려하여 시범운영과 단계적 전환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기능별 인력·예산·시설 기준과 입·퇴소 및 평가 기준 구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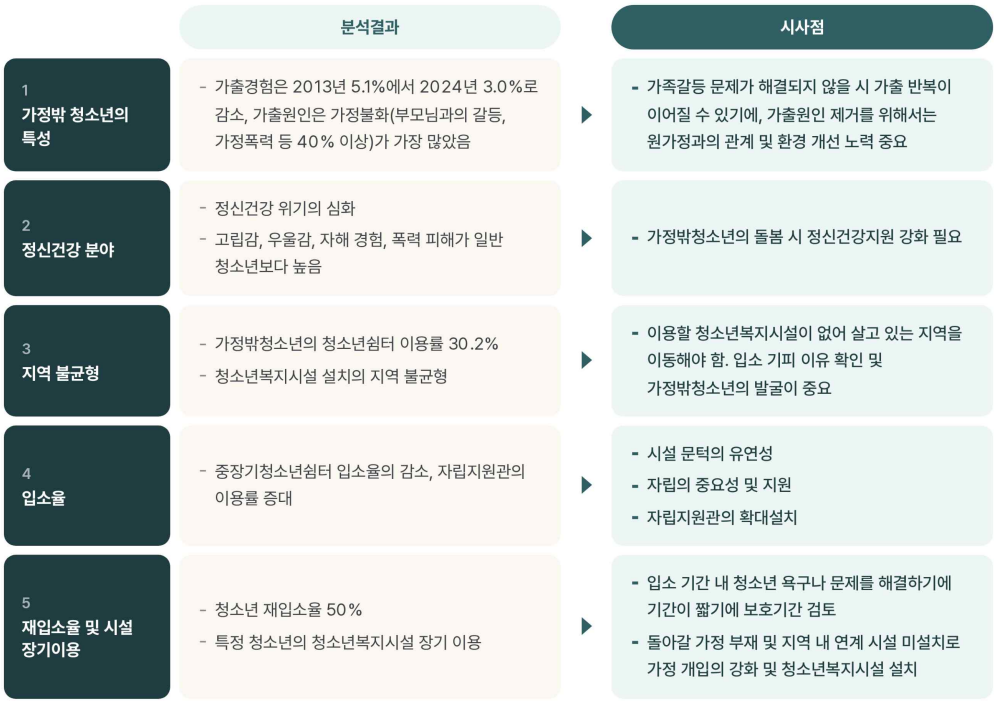
Ⅶ.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편(안)

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편(안) 마련 과정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특성의 변화와 청소년복지시설 현황분석,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해외사례 조사, 청소년 면접조사, 현장전문가 FGI,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전환 의견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가. 가정 밖 청소년 특성의 변화와 청소년복지시설 현황분석

가정 밖 청소년 특성의 변화와 청소년복지시설 현황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이 있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이용경험률이 낮기에, 시설 입소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적극적 발굴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지역 내 청소년복지시설이 부재할 수 있기에, 발견 시 빠른 시설 연계, 추가 설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영역에서는 가족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가출 반복이 이어질 수 있기에, 가출원인 제거를 위해서는 원가정과의 관계, 가정 개입의 강화 등의 가정 환경 개선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 돌봄 영역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에 돌봄 시 정신건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자립의 욕구가 높기에 자립지원관의 확대설치가 필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재입소율이 높고 시설의 장기 이용 청소년이 있기에, 시설 이용 기간 설정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Ⅶ-1] 가정 밖 청소년 특성의 변화와 청소년복지시설 현황분석 결과 시사점

나.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해외 사례조사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기능별 시설유형 전환 및 시설 간 연계체계, 가정형의 소규모 돌봄 또는 독립주거 지원, 자립역량 향상지원 확대, 청소년의 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 및 자기결정권 보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 및 강도 확대, Housing First 원칙의 적용, 심리적 안전기지로서의 시설 기능 강화, 어디서나 즉시 개입 가능한 접점 구축, 위기스크리닝,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이 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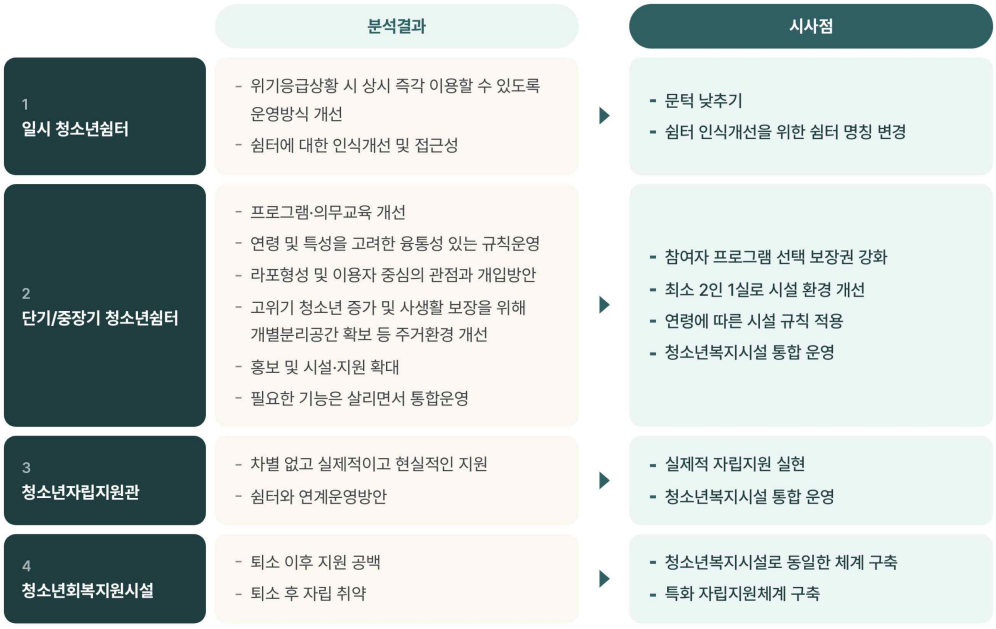


[그림 Ⅶ-2]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해외 사례조사 결과 시사점

다. 청소년 면접조사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면접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설이 기간으로 나뉘어져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 후 시설을 전전하지 않게 청소년쉼터의 추가 설치 및 통합 운영이 중요하며, 인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쉼터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최소 침실은 2인 1실로 개선하고 연령에 따른 시설규칙, 자립지원체계의 강화 등의 주요 시사점이 확인되었

다.



[그림 Ⅶ-3]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시사점

라. 현장전문가 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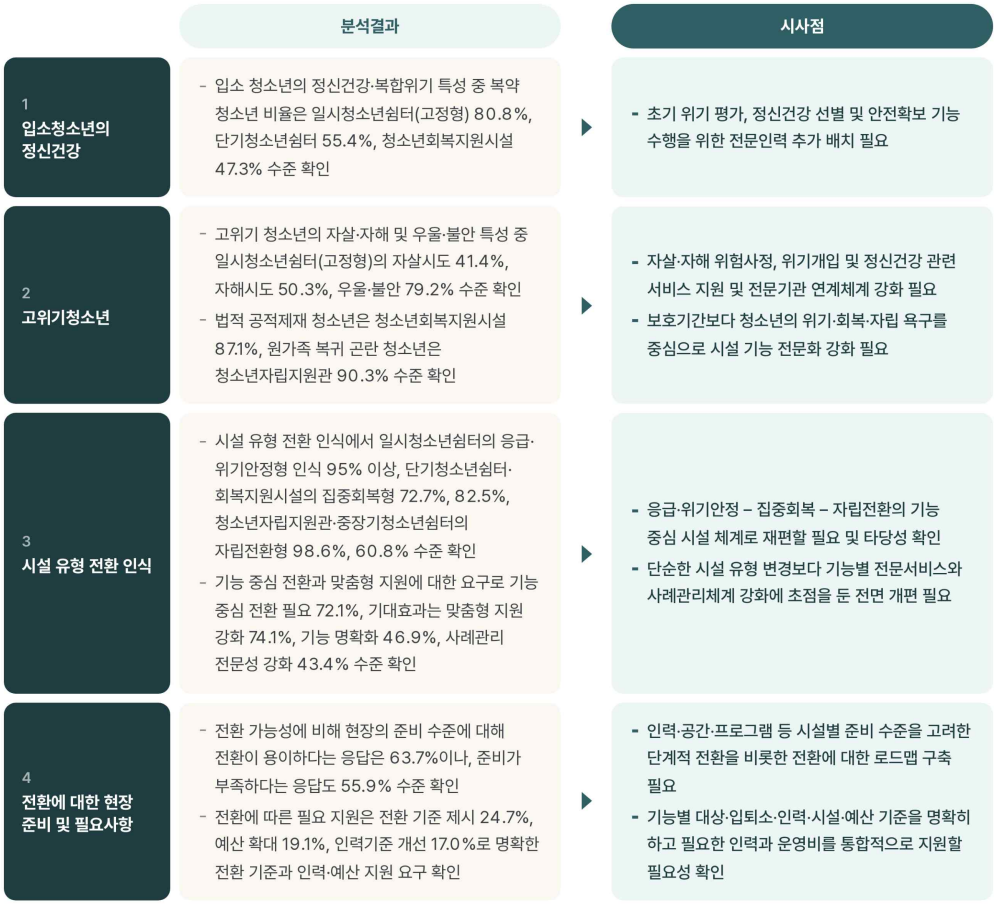
현장전문가 FGI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간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전국 공용 '표준의뢰서' 및 다학제 통합 사례판정회의(조정자) 도입, 보호기간의 유연화, 정신건강전문요원 추가 배치, 1인실 및 2인실 중심의 공간 재구조화, 연령대와 자립수준에 맞는 차등적 규칙 적용, 지원 상한연령 확대(25~30세), 입소시점 기준 최소 2년 보장, 주거 공간 확충 방안 마련, 퇴소 후 5년간 장기 모니터링, 수요자 친화적 시설 브랜드화(명칭 변경), '랩어라운드' 모델의 가치와 철학 공유 등을 향후 개선과제로 도출하였다.



[그림 Ⅶ-4] 현장전문가 FGI 결과 시사점

마.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전환 의견조사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전환 의견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문인력 추가 배치, 전문기관 연계체계 강화, 보호기간보다 청소년의 위기·회복·자립 욕구를 중심으로 시설 기능 전문화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능 중심 시설체계로의 재편, 단계적 전환을 비롯한 전환에 대한 로드맵 구축, 기능별 대상·입퇴소·인력·시설·예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그림 Ⅶ-5]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전환 의견조사 결과 시사점

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안)

이를 종합하여 기능 중심의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지향하는 새로운 청소년복지시설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Ⅶ-6>과 같다.

이번 연구에서 청소년복지지설 운영모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기존의 기간으로 구분된 청소년복지시설을 대상별, 위기수준별 맞춤형 접근을 강화한 기능 중심 통합지원(One-stop)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총 3가지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트랙 1은 응급·위기안정(Drop-in Center & Emergency Hub), 트랙 2는 집중회복(Intensive Recovery & Healing), 트랙 3은 자립전환(Independent Buildup & Transition)이다. 특히 트랙1의 경우 드롭인(Drop-in) 센터 기능으로서 단순히 머물다 나가는데 그치지 않고, 간이 스크리닝을 통해 트랙2(집중회복)나 트랙3(자립전환)으로 신속히 연계하는 게이트웨이(Gateway) 허브 역할을 전담한다.



[그림 Ⅶ-6] 청소년복지시설 통합지원 운영모형(안)

운영모델은 2가지를 제안하였다. 그림의 붉은 계열 점선 테두리로 묶인 A모델은, 지역별 시설 불균형으로 인한 서비스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한 건물 내에서 모든 트랙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림의 초록 계열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B모델은, 각 트랙이 동일 지역 또는 근접 지역에 위치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가정 밖 청소년의

트랙 간 연계는 트랙 순서(트랙 1→트랙 2→트랙 3)대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개별상황 및 위기 수준과 욕구에 따라 트랙 간 이동은 자유로운 구조로 구성하였다. 분명한 점은 새로운 기능 중심 개편은 트랙 간 이동을 강제하거나 엄격하게 구분 짓기 위함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체계라는 점이다.

기존 청소년복지시설과 개편될 청소년복지시설을 비교하면 <표 Ⅶ-1>과 같다.

<표 Ⅶ-1>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개편 신/구 비교

구분	현재 기간 중심		개편 기능 중심
시설유형	- 일시·단기·중장기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 처분)	→	트랙 1 응급·위기안정 *Drop-in Center & Emergency Hub* 트랙 2 집중회복 *Intensive Recovery & Healing* 트랙 3 자립전환 *Independent Buildup & Transition*
기간구분	- 1~7일 / 3~9개월 / 3+1년 / 1+1년 - ※ 회복지원시설(6개월+6개월)	→	- 일시청소년쉼터만 이용 기간을 숙박 제공의 경우 1주일 내로 설정하고 그 외 시설은 기간 구분 없음(개별 개입 목표 성취 시) - ※ 회복지원시설: 집중회복 유형 내 편입하여 '교정특화형' 또는 '법원연계형' 특화 시설로 재포지셔닝
인력구조	- 사회복지사, 상담사 중심	→	- 기존 + 정신건강 전문인력 추가배치
공간구성	- 유형별 시설 분리	→	- A모델) 통합시설 내 분리 공존(한 건물) - B모델) 분리시설 근거리 위치(근접 지역)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은 '가정 밖 청소년 위기·회복·자립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대전제 하에 '청소년 중심성', '기능 중심성', '연속성과 통합성', '선택성과 유연성', '현장 참여', '단계적 전환'이라는 6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청소년 중심성'은 청소년의 욕구, 의사, 권리 그리고 위험도(또는 안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능 중심성'은 보호기간이 아닌 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재구조화 하는 것이다. '연속성과 통합성'은 응급보호-회복-자립이 단절없이 연결되지만 이 단계가 반드시 순차적이지 않고 서비스가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선택성과 유연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급보호-회복-자립 트랙이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장 참여'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의 개편과 관련하여 시설과 종사자를 정책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전환의 공동설계자로 참여하여 현장 중심성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며 함께 수행하고 실

행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단계적 전환'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편에 따라 일괄적인 기존 시설 유형 폐지 후 전환이 아니라 시범-평가-보완-확대의 단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Ⅶ-7]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원칙

3.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델 시설(안)

앞서 살펴본 기존의 시설 기준 및 선행연구의 개선안 등을 토대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델 개편에 따른 시설 기준은 기존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의 변경과 관련하여 주요한 특징이 시설에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추가 시설을 구성하였다. 공통적으로 침실이 있는 시설은 최소 2인실로 변경하도록 한다. 기존 상담실(상담공간)은 트랙의 특수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기존 상담실 외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표 Ⅶ-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델 추가 시설

구분	내용
공통 변경	▪ 침실이 있는 시설은 최소 2인실로 변경 ▪ 기존 상담실 외 아래 시설별 공간 마련
응급·위기안정 트랙	▪ 초기상담·위기평가실 ▪ 안정휴식공간 ▪ 긴급보호실(개인 침실) 1인실 최소 1개
집중회복 트랙	▪ 안정휴식공간 ▪ 긴급보호실 1인실(개인 침실) 1인실 최소 1개 ▪ 가족상담실 ▪ 회복치유실
자립전환 트랙	▪ 자립 체험(훈련)실-자활작업장 ▪ 전환주거 연계공간(체험형 독립공간)

응급・위기안정 트랙은 응급대응 이슈에 따라 초기상담・위기평가실, 안정・휴식공간, 긴급보호실을 마련한다. 초기상담・위기평가실은 입소 초기 면접, 위기수준 평가 및 서비스 판정을 위한 독립 공간(기존 상담실 개편 또는 확충 검토)이다. 안정・휴식공간은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분리되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이용인의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실 설치 운영)이다. 긴급보호 공간은 야간 및 긴급 입소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1인 1실을 배치해야 할 수 있다. 집중회복트랙은 정신건강 관련 대응을 위한 인력 투입에 따른 활동 공간 확대, 가족개입을 위한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추가시설은 가족상담실, 회복치유실을 제안한다. 가족상담실은 가족상담 및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며, 회복치유실은 응급・위기안정 트랙에서 제안한 안정・휴식공간과 유사하지만 치유적 성격을 더 갖는 공간이다. 또한 응급・위기안정 트랙에서 제시한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호실도 마련한다. 자립전환 트랙은 자립역량 증진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자립 체험(훈련)실과 전환 주거 연계 공간(체험형 독립공간)을 제안한다. 자립체험실은 시설 내 간단한 자립 훈련실과 시설 외 작업장을 말한다. 전환 주거 연계 공간(체험형 독립공간)은 시설 외 취사・세탁・청소・생활관리 등을 청소년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 갖춘 곳이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델 개편에 따른 시설 추가 설치와 더불어, 시설 관리기준을

다음 <표 Ⅶ-3>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모든 시설은 최대한 청소년의 응급위기안정, 집중회복,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표 Ⅶ-3>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시설관리 기준(안)

기능	시설관리 기준
(트랙1) 응급 위기 안정	▪ 입소자 1인당 1개의 침실 제공(신규 설치시설 적용. 기존 시설 일정기한까지 전환). 단, 정원초과의 상황에서는 고위기 청소년을 제외한 대상자의 경우 2인 1실 이하 침실제공 가능 ▪ 시설의 구조와 설비가 이용자의 응급 위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 ▪ 이용자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 ▪ 정기적으로 시설의 청결관리 필수
(트랙2) 집중 회복	▪ 입소자 1인당 1개의 침실 제공(신규 설치시설 적용. 기존 시설 일정기한까지 전환). 단, 정원초과의 상황에서는 고위기 청소년을 제외한 대상자의 경우 2인 1실 이하 침실제공 가능 ▪ 시설의 구조와 설비가 이용자의 집중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 ▪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 ▪ 정기적으로 시설의 청결관리 필수
(트랙3) 자립 지원	▪ 입소자 1인당 1개의 침실을 제공(신규 설치시설 적용. 기존 시설 일정기한까지 전환). 단, 정원초과의 상황에서는 고위기 청소년을 제외한 대상자의 경우 2인 1실 이하 침실제공 가능 ▪ 시설의 구조와 설비가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최대한 개인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영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편에 따른 시설 기준의 적용과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한 침실 소규모화와 기능 공간 확충은 기존 시설의 구조·면적·정원에 따라 단순한 개보수를 넘어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시설별 현재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신규 설치 시설은 제안된 개선 시설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기존 시설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시설개선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은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해 온 기능보강사업과 시설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 등을 참고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애인・아동복지 생활시설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 개보수, 생활공간 개선, 안전설비 보강 등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러한 타 생활시설의 개선 사업에 대한 검토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침실 소규모화와 기능별 공간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생활시설은 주거・자립을 중심으로 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생활실 소규모화와 가정형 전면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은 복도식 구조와 3인 이상 다인실로 구성된 생활공간을, 1~2인실 개별 침실과 거실・주방 등이 포함된 공유공간을 갖춘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시설 개편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기반한 자립 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복지시설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학습과 또래와의 소통을 위한 전용공간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공모사업의 사례와 같이,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심리적 안정, 자율적 활동을 고려한 공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청소년복지시설 내 공간 재배치를 통해 안정 휴식 공간, 회복치유실, 자립체험실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되, 시설 여건에 따라서는 증축이나 이전, 유휴 공공시설 활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설평가와 연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A영역인 시설 및 환경 관련 지표를 참고하여 침실 소규모화, 개인생활공간 확보, 기능 공간 설치, 시설 안전성・쾌적성, 환경개선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개별 시설의 운영 노력뿐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적 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수준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초기에는 시설 기준 충족 여부만을 평가하기보다 환경개선계획의 수립・이행 노력과 단계별 개선 실적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더해, 평가 지표에 시설・환경 개선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것과 별개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시설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능보강사업 선정 우대, 리모델링 및 시설・설비 개선을 위한 추가 사업비 지원, 우수시설 평가 가점 및 포상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자체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을 청소년복지시설로 확대하고 개선 실적이 우수

한 시설에는 추가 재정지원이나 시설 개선 관련 제도의 우선 적용을 연계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정적 여력 부족으로 시설 개선이 지연된 시설이 평가나 지원사업 선정에서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초기에는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시설 환경개선으로 정원이 감소하거나 시설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시기별 청소년 보호 수요와 시설 공급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은 단순한 시설 기준 강화가 아니라 청소년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심리적 안정, 회복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환경의 질적 개선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시설 기준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보강사업·재정지원, 시설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이 연계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편을 현장에서 실행할 때 우려되는 핵심 사항은 두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기능보강사업 등을 지원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 지원은 임차 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 보고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쉼터의 소유 주체가 지자체인 시설은 28.4%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민간 또는 법인 소유이며, 전체 시설의 47.3%가 임대 시설이다. 따라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지자체가 시설을 매입해 무상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 시설이 아니게 되므로 기능보강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LH·SH의 매입임대주택을 청소년복지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공공임대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공공임대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로는 전북형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구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전북 14개 시군을 통합한 광역 거점기관으로서 노숙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원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이다. 근본적으로 임차 문제의 해법은 시설 이전이며, 지자체 공유재산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소년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방법, 폐교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 지자체가 신축·매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둘째, 리모델링 이후 입소 청소년 수가 줄어들면 정원에 연동해 산정되는 종사자 배치기준도 함께 감소할 수 있어, 기존 인력 조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 문제 역시 시설을 이전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만, 이전이 여의치 않은 시설의 종사

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인력배치 기준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개정을 통해 인력배치기준을 상향하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보강으로 정원을 감축한 시설에 대하여는 감축일로부터 5년간 종전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및 그 인건비 보조를 유지한다."

아울러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감축이 아니라 직무 전환·재배치를 검토한다. 청소년복지시설 배치기준에는 자립지원요원이라는 직종이 이미 존재하므로, 인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를 종합하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사자 배치기준 산정 시 정원과 연간 일평균 현원 중 많은 수를 적용한다.
- 정원이 감축되더라도 기존 시설장 1명 및 보호·상담원 4명(24시간 교대 최소 인원/ 개편시 추가 인력은 제외한 인원임)을 하한으로 배치한다.
- 기능보강으로 정원을 감축한 시설은 감축일로부터 5년간 종전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및 인건비 보조를 유지한다.
- 정원 감축 시 종사자를 감축하지 않고 사례관리·자립지원·원가정복귀 지원 등 전문 직무로 전환 배치하는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4.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델별 인력

A모델로 시설이 통합 운영될 경우의 인력 운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시설장 1인, 3개 트랙별로 팀장 1인이 필요하고, 각 트랙별로 6인의 상담원(10인 정원 기준), 정신건강 상담요원 1인, 자립지원요원 1인, 전문상담·연계요원 1인 등 총 25인이 필요하다. 24시간 보호를 위해 3교대 운영이 요구되며, 동시간에 상담원 최소 2인이 상주해야 한다. 전문심리상담요원은 1일 8시간 근무형태로 채용한다. 정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청소년 5인당 1인의 상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B모델 시설로 운영할 경우의 인력운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응급·위기안정 트랙은 시설장 1인, 6인의 상담원(10인 정원 기준), 전문사정·연계요원 1인이 요구된다. 집중회복 트랙은 시설장 1인, 6인의 상담원(10인 정원 기준), 정신건강상담요원 1인이 요구된다. 자립전환 트랙은 시설장 1인, 6인의 상담원(10인 정원 기준), 1인의 자립지원요원이 요구된다. B모델도 A모델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보호를 위해 3교대 운영이 요구되며, 동시간에 상담원 최소 2인이 상주해야 한다. 정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청소년 5인당 1인의 상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표 Ⅶ-4>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편모델별 인력구성(안)

직위	A모델	B모델		
		응급·위기안정	집중회복	자립전환
시설장	1명	1명	1명	1명
팀장	3명	6명 이상	6명 이상	6명 이상
상담원 (청소년 5명 당 1명)	18명 이상			
전문사정·연계요원	1명	1명	-	-
정신건강상담요원	1명	-	1명	-
자립지원요원	1명	-	-	1명
총	25명 이상	8명 이상	8명 이상	8명 이상

A모델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A모델의 시설장은 규모가 큰 시설의 장이어야 하므로 시설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관련 경험 7년 이상이라는 자격기준을 추가한다. 팀장의 자격요건은 기존 청소년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과 동일하고, 상담원 자격기준도 기존 청소년복지시설의 상담원 자격요건과 동일하다.

A모델과 B모델의 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1인의 전문 종사자 추가가 필요하다. 응급·위기안정의 전문사정·연계요원은, 빠르게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사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최근 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 아동학대 등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정 및 연계의 전문성을 가진 종사자가 요구된다. 전문사정·연계요원은 사회복지사로 사례관리 및 사정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여야 한다. 정신건강상담요원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학 또는 동등한 수준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및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가 발급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주요 전문 상담 학회에서 부여하는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집중회복 트랙의 정신건강상담요원의 투입은 청소년복지시설이 처음 투입하는 인력은 아니다. 이미 아동양육시설과 노숙인재활시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5]로써 정신건강에 취약한 청소년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다. 자립지원요원은 주거, 금융, 의식주 등의 자립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개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하다. 자립지원요원은 18~24세의 자립지원경험이 있거나, 주거복지사 등의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여야 한다.

<표 Ⅶ-5>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변경에 따른 추가 인력

구분	A모델	B모델		
		응급·위기안정	집중회복	자립전환
추가 인력	• 팀장 3인 • 전문사정·연계요원, 정신건강상담전문요원, 자립지원요원 각 1인씩 추가	• 전문사정·연계요원 1인 추가	• 정신건강상담전문요원 1인 추가	• 자립지원요원 1인 추가

5) 시설이용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타 사회복지시설들도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보호아동 30인 이상인 아동양육시설은 임상심리상담원을 1인 채용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별표 15에 따라 임상심리상담원은 전문대학,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노숙인재활시설은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1인 배치해야 한다.

5.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델별 서비스

기능 중심의 유형별 서비스는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성평등가족부) 지침과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매뉴얼(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2020 청소년쉼터 업무매뉴얼(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모델 개발 연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참조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서비스 내용을 기술하기에 앞서 기존 청소년쉼터의 기간별 보호서비스가 기능별 서비스로 전환함에 따라 청소년 입소기간의 유연화를 적용한다. 트랙1 응급·위기 안정형은 기존의 숙박시 보호기간 7일 이내를 유지하되, 트랙2 집중회복과 트랙 3자립전환형은 청소년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 이용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존 기간이 기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능(목표)이 기간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며, 퇴소 시점도 기간 종료가 아닌 기능(목표) 달성으로 판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입퇴소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사업안내 상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청소년이 계속 이용과 보호기간 연장, 청소년의 원치 않는 퇴소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입소 기준이 엄격하거나, 위원회의 입소심의 등을 거치는 등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경우, 청소년은 다시 거리로 돌아갈 수 있기에 접근성과 긴급성으로 신속한 입소가 될 수 있도록 입소자체는 개별 시설이 결정한다. 청소년의 입소 이후 청소년 상담 및 실태 등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보고한다. 퇴소는 시설 단독 결정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위원회에서 퇴소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1년 혹은 2년 단위로 중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3개의 트랙으로 구분되는 응급·위기안정(트랙1), 집중회복(트랙2), 자립전환(트랙3) 유형과 사후관리의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Ⅶ-6>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트랙별 서비스

구분	서비스 요소	세부 서비스
응급·위기안정 (트랙1)	보호 및 현장 지원 서비스 (Drop-in Center)	• 기초돌봄 • 개인위생 지원 • 의료 및 휴식 지원
	찾아가는 거리상담 서비스(구 이동형)	• 거리 발굴 및 접근 • 현장 지원 • 연합 아웃리치
	거리위험 대처 및 안전교육	• 인권교육 • 위기 대처법
	연계 지원 및 긴급위기개입	• 기관 연계 • 귀가 지원 • 위기 개입: 표준 위기 스크리닝*
집중회복 (트랙2)	안전 보호 및 일상생활 지원	• 주거 및 생계 • 초기적응 지원
	다학제적 심리·정서 케어 및 치료 연계*	• 상담/심리치료 지원* • 치료 지원 및 연계*
	가정복귀 및 관계회복 지원	• 부모 상담 • 부모 교육 • 가정방문 • 가족 관계 개선 • 안전한 귀가 준비 상담
	학업지속 및 진로·직업 기초지원	• 학교 출결지도 • 교사 협력 • 학습 멘토링 • 복학 지원 • 검정고시 및 꿈드림 연계 • 진로적성검사 • 자격증 학원 연계
자립전환 (트랙3)	독립주거 연계 및 주거 안정 지원	• 독립주거 연계 • 주거비용 지원 • 생활관 운영
	소득·생계·금융 및 경제관리 지원	• 생계 및 자산형성 지원 • 금융교육
	취업·훈련 및 직업 역량 강화	• 직업훈련 • 구직 및 직장적응 • 체험형 '자활작업장(성장일터)' 운영* ※ 자활작업장의 확대 설치와 자활작업장 관리인력 배치
	교육·진학 및 건강·일상생활 지원	• 검정고시 및 대학 진학 지원 • 가사관리 기술 지도
	개별 자립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	• 자립준비도 척도(IRLS)를 통한 개별자립계획 수립 • 자조모임 및 또래 네트워크 지원*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점

가. 응급·위기안정(트랙1) 서비스

먼저, 응급·위기안정 유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 ① '보호 및 현장 지원 서비스'(Drop-in Center) : 7일 이내(숙박의 경우)의 기초돌봄, 개인위생 지원, 의료 및 휴식 지원 등이 제공되며, ② '찾아가는 거리상담 서비스' : 거리 발굴 및 접근, 현장 지원, 연합 아웃리치가 제공된다. 연구 결과에서는 미국의 'SOP & Safe Place 모델'을 참조하여, 소방서나 편의점 등 민·관 거점을 확대하여 어디서나 즉시 개입 가능한 접점 구축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③ '거리위험 대처 및 안전교육' : 인권교육, 위기 대처법 등이 있다. ④ '연계 지원 및 긴급위기개입' : 기관 연계, 귀가 지원, 위기 개입 등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BCP와 일본의 일시보호소 모델을 참조하여 안전, 주거, 정서, 기능 영역으로 구성된 '표준위기 스크리닝'을 제안하였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청소년의 요청사항으로 친근한 서비스와 게이트웨이 보금자리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세부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 및 현장 지원 서비스 (Drop-in Center)
- 기초 돌봄 지원 : 7일 이내(숙박의 경우) 일시보호, 식사 및 간식 제공
- 개인위생 지원 : 샤워실 및 세탁기 이용, 위생용품(생리대, 속옷, 양말, 구강청결제, 렌즈용품 등) 지급
- 의료 및 휴식 지원 : 응급처치, 구급약품 제공, 건강검진 및 통원치료비 지원, 안락한 휴식 공간(보드게임, 도서, TV 등) 제공

② 찾아가는 거리상담 서비스
- 거리 발굴 및 접근 : 야간 및 심야 거리배회나 가정 밖 청소년 발견, 초기 관계형성, 현장 베이스캠프(차량/천막) 세팅
- 현장 지원 : 먹거리, 피복, 생필품 꾸러미 지급, 정서적지지 및 상담
- 연합 아웃리치 : 경찰, 지자체, 유관기관 합동 거리상담시 조기발견 및 긴급 도움이 가능한 민·관 안전지대 연계 확장

  ※ 해외 사례 : 소방서, 도서관, 편의점 등 민··관 거점을 확대하여, 어디서나 즉시 개입 가능한 접점 구축(미국 SOP & Safe Place 모델 참조)

③ 거리위험 대처 및 안전교육

- 인권교육, 성 건강교육(피임, 임신테스트기 및 콘돔 제공/상담), 성폭력·성매매 피해 예방교육, 위기 대처법 교육

④ 연계 지원 및 긴급위기개입

- 기관 연계 : 집중회복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전문의료기관, 법률기관, 연계 정보 제공 및 이송 연계

※ 표준 위기 스크리닝 강화 : 안전, 주거, 정서, 기능 영역의 표준 도구를 활용한 스크리닝(Red / Orange / Green)을 실시하여 집중회복(트랙2) 또는 자립전환(트랙3) 등 적합한 시설(기관)로 연계

※ 해외 사례 : 미국 BCP & 일본 일시보호소 모델 : 긴급 보호 과정에서 단순 수용을 넘어 초기 심리판정, 행동 관찰, 표준화된 위기 평가를 병행

- 귀가 지원 : 귀가 계획 수립, 보호자 연락, 교통비 지급 및 가정·학교 중재
- 위기 개입 : 폭력, 자해, 성폭력 등 긴급 위기 사건 접수, 현장 응급조치 및 신변보호

○ 청소년 요청 서비스

- 친근한 서비스 : 쉼터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무거운 조사 대신 가벼운 심리상담과 생필품 제공 중심의 친근한 서비스로 접근성 제고
- 게이트웨이(Gate-way) 보금자리 : 갈 곳이 없는 긴급 상황에서, 별도의 주거시설로 전환하기 전까지 안심하고 머물며 정보를 탐색하는 기초 연계 거점 기능 강화

나. 집중회복(트랙2) 서비스

두 번째로, 집중회복 유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6가지로 나눠진다. ① 안전보호 및 일상생활 지원 : 주거 및 생계, 초기적응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주거공간의 재구조화 및 생활규칙의 이원화를 추가 제안하였다. ② 다학제적 심리·정서 케어 및 치료 연계 : 상담/심리치료, 의료 지원 및 연계를 추가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추가 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③ 가정 복귀 및 관계회복 지원 : 원가정 복귀를 위해 부모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업지속 및 진로·직업 기초지원 : 학교 출결지도 등의 학업 진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⑤ 법률 지원 및 문화여가 지원 : 신분증 발급 지원이나 문화체

험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⑥ 교정특화형 또는 법원연계형 서비스 : 기존에 법원에서 의뢰된 감호위탁(제1호 처분)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외에도 집중회복형 시설로서의 기능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고, 반대로 일반 청소년복지시설에서도 법원의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위촉을 받아 교정특화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세부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 보호 및 일상생활 지원
- 주거 및 생계 : 안락한 침실·주거 환경 제공, 식사 및 간식 제공, 개인물품 관리, 일상생활 규율 지도
  - ※ 주거공간 재구조화 : 과밀 침실 해소를 위해 1인실(7~10㎡)이나 2인실 중심 배치, 수면 공간과 활동/상담 공간의 물리적 분리, 방음 및 냉난방, 휴게 공간 환경 개선 등
  - ※ 생활규칙 이원화 : 획일적 규칙 적용이 아니라, 폭력·약물 등의 절대 안전 규칙은 일괄 적용하되, 연령과 상황을 고려한 생활규칙(외출, 아르바이트, 휴대폰 등)은 차등적 규칙 적용
- 초기적응 : 입소 오리엔테이션, 시설 라운딩, 이용자 수칙 및 청소년 권리 고지, 동료 환영식

② 다학제적 심리·정서 케어 및 치료 연계
- 상담/심리치료 케어 :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입을 통해 심리검사(SCT, BPRS, 자살사고 척도 등), 개별/집단상담, 대인관계/분노조절/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 치료 연계 지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의 개입을 통해 정기 건강검진, 질병 관리, 정신과 외래 및 복약 지도, 자살위험 스크리닝 및 1:1 밀착 관찰

③ 가정복귀 및 관계회복 지원
- 부모 상담, 부모 교육, 가정방문, 가족 관계 개선 및 안전한 귀가 준비 상담

④ 학업지속 및 진로·직업 기초 지원
- 학교 출결 지도, 교사 협력, 학습 멘토링, 복학 지원, 검정고시 및 꿈드림 연계, 진로적성검사, 자격증 학원 연계

⑤ 법률 지원 및 문화여가 지원
- 신분증(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 지원, 수사/재판 과정 동석 및 법적 옹호, 문

화체험・스포츠・봉사활동

⑥ 교정특화형(법원연계형) 서비스

・제1호(감호위탁) 처분 청소년 대상 보호자 대리 숙식 및 신병 보호

※ 법원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제도 및 법원 소통 통고 제도를 양방향으로 공식화하여 일반 청소년과의 통합 활동을 통해 긍정적 교정 시너지 창출

・소규모 대안가정 형태의 생활지도 및 훈육, 성행 개선 및 재비행 예방 교육

다. 자립전환(트랙3) 서비스

세 번째로, 자립전환 유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5가지로 나눠진다. ① 독립주거 연계 및 주거안정 지원 : 독립주거 연계, 주거비용 지원, 생활관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② 소득・생계・금융 및 경제관리 지원 : 생계 및 자산형성 지원, 금융교육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③ 취업・훈련 및 직업 역량 강화 : 직업훈련, 구직 및 직장적응, 체험형 '자활작업장(성장일터)' 운영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자립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위한 자활작업장의 확대 설치와 자활작업장 관리인력 배치를 추가로 제안하였다. ④ 교육・진학 및 건강・일상생활 지원 : 검정고시 및 대학 진학 지원, 가사관리 기술 지도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⑤ 개별 자립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 :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IRLS)를 통한 개별자립계획 수립, 그리고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요청사항으로 제시된 자조모임 및 또래 네트워크 지원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세부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독립주거 연계 및 주거 안정 지원

・독립주거 연계 : LH・SH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입주 신청 대행 및 정보 제공

・주거 비용 지원 : 월세 및 임대보증금 지원, 주거급여 신청 연계, 부동산 계약 및 입주점검 지도, 주거지 안전점검

・생활관(공유주거/혼합형) 운영 : 독립생활이 당장 어려운 청소년 대상 소규모 생활관 숙식 제공 및 자립 준비 적응 훈련

② 소득・생계・금융 및 경제관리 지원

- 생계 및 자산형성 : 자립정착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신청, 자산형성 지원사업 매칭
- 금융 교육 : 합리적 소비 지출, 예적금 관리, 신용 관리, 대출 및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예방 교육

③ 취업·훈련 및 직업 역량 강화
- 직업 훈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리스타, 제과제빵, IT 기술 등의 전문 자격증 취득 및 직업탐방/인턴십 연계 지원
- 구직 및 직장적응 : 이력서/자소서 작성, 모의면접, 일자리 매칭, 근로기준법 및 직장예절 교육, 임금체불 등 근로권익 보호
- 체험형 '자활작업장(성장일터)' 운영 : 외부 민간 기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및 위기청소년을 위해, 실패가 완충되는 전담 일터(카페, 편의점 등)를 직영/위탁 운영

※ '위기작업장 관리자' 인력 배치

④ 교육·진학 및 건강·일상생활 지원
- 검정고시 및 대학 진학(장학금 연계), 건강검진 지원, 질병 치료 연계, 생필품 수시 지원, 취사/청소/가사관리 기술 지도

⑤ 개별 자립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
-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ILRS) 진단 기반 1:1 맞춤형 개별자립계획 수립 및 정기 모니터링
- 자조모임 및 또래 네트워크 지원 : 자립준비 청소년 간의 외로움 해소와 정보 공유를 위한 자조모임, 또래 여행모임, 소모임 운영 지원

라. 사후관리 서비스

1) 서비스 대상/기간/인력

사후관리 서비스 대상 유형은 자립전환 트랙을 퇴소한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중 가정 및 지역사회 복귀 청소년이다. 이 중 자립전환 트랙을 퇴소한 청소년은 본격적인 홀로서기의 과정이 시작된다. 기존 6개월의 사후관리 기간으로는 적응과 부적응의 자립 과정을 반복할 수 있는 복합 위기청소년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자립 적응을 위해서는 퇴소 후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① 서비스 대상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② 서비스 기간

· 자립전환 유형 종결(퇴소) 청소년 : 퇴소 후 5년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간과 동일한 5년간의 장기 모니터링 사후관리로 기간 확대

· 이 외: 기존 6개월 유지

2) 사후관리 서비스 내용

① 사후관리 유형별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는 대상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기본형은 퇴소 후 분기 1회 이상 일반적인 사회적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집중형은 퇴소 후 월 1회 이상의 집중 모니터링 및 밀착케어가 요구된다. 연락두절 또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잠재형은 SNS나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자립정보와 안부를 전할 수 있다. 기본형과 집중형의 경우, 퇴소 직후 1개월간은 매주 1회 이상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Ⅶ-7> 사후관리 유형

유형	대상자 정의	서비스 내용	모니터링 주기
기본형	서비스 목표가 달성되었고, 의식주 해결 및 사회적응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청소년	일반 사회적응 모니터링 : 안부인사, 정서적 격려·지지, 정보 제공	분기 1회 이상 (퇴소 직후 1개월간 매주 1회)
집중형	목표 달성이 미흡하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퇴소했고, 의식주는 가능하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청소년	집중 모니터링 및 밀착케어 : 애로사항 파악, 자원연계, 주거·일터 방문상담 ※ 필요시 사례관리 재등록	월 1회 이상 (퇴소 직후 1개월간 매주 1회)
잠재형	연락두절 또는 서비스 거부 청소년	일방향 정보 제공 : SNS, 이메일 ※ 연락 재개 시 기본형 또는 집중형으로 전환	수시(필요시)

* 참조 : 정경은 외(2023).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지원 모델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② 사후관리 단계별 지원내용 및 방법

사후관리 단계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퇴소 1개월 전, 퇴소 전 욕구사정을 통해 퇴소 준비 상태를 점검한다. 2단계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욕구를 분류하여 사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후관리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청소년 비상연락망과 정보활용 동의서를 확보한다. 3단계에서는 퇴소 직후 1년간은 주거 및 소득 안정을 위해 사후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고, 이후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사회적응을 위한 간헐적인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사후관리 종결 1개월 전에 자립적응 수준을 평가 후, 사후관리 종결보고서를 작성한다. 세부적인 사후관리 단계별 지원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Ⅶ-8> 사후관리 단계별 지원내용 및 방법

단계	지원내용	방법
퇴소 전 욕구사정 (1단계)	• 퇴소 최소 1개월 전부터 청소년의 퇴소 후 생활 계획, 기대, 문제해결 대처 역량을 사정함 • 9개 '퇴소 욕구조사표' 작성 ※ 노동, 교육, 경제, 주거, 건강, 가족·사회관계, 안전, 법률·권익, 시설과의 관계	퇴소 1개월 전, 욕구사정
계획 및 동의 (2단계)	• 청소년 스스로 대처 가능한 욕구와 실무자 지원이 필요한 욕구를 분류 • '사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청소년의 자발적 동의(사후관리 동의서) 집행	청소년 개인 안전망(비상연락망), 주소·연락처 변경 시 정보 활용 동의 확보
지원 및 모니터링 (3단계)	• 계획된 우선순위에 따라 6대 영역의 서비스 및 정기 모니터링 수행 ※ 6대 영역 : 관계적 안전망, 안전 및 건강 지원, 갈등관리 지원, 경제 및 주거지원, 교육지원, 법적 지원	퇴소 직후 1년까지 주거·소득 안정을 위해 집중 개입
종결 (4단계)	• 종결 1개월 전 종결 준비 개시, • 종결 이후 예측되는 9개 생활상태 점검 ※ 노동, 교육, 경제, 주거, 건강, 가족·사회관계, 안전, 법률·권익, 자존감 및 자립 대처역량	실질적 자립적응 수준 평가 후, 사후관리 종결보고서 작성

* 참조 : 정경은 외(2023).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지원 모델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③ 전담 인력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전문 사후관리 요원 배치와 사후관리 전담팀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전문 사후관리 요원 배치 : 업무 분담 효율화와 종사자 소진(Burnout) 예방을 위해, 기존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혼재해 수행하던 체계를 보완하여 사후관리를 전담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전담요원' 배치
- 사후관리 전담팀 구성 :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조정자 1명 + 사례관리자 4명), 사례관리자 1인당 적정 사례 관리 유지
  ※ 집중사례 8명 이하, 일반사례 15명 이하, 유지사례 25~30명 이하

6.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델별 예산

가. 2026년 예산 규모(추정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예산은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라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즉,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50%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위탁(수탁)하여 수행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시설 운영예산에 적용된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0조(예산의 보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2026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예산을 추정한 결과와 관련하여, 전국 169개소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총예산은 60,612,213천원(약 606.1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쉼터가 138개소로 가장 많은 시설 수를 차지하였으며, 총예산은 53,038,293천원(약 530.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7.5%를 차지하였다.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예산이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예산은 4,417,998천원(약 44.2억 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이용형이 7개소(2,286,018천원), 혼합형이 6개소(2,131,980천원)로 운영되고 있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예산은 3,155,922천원(약 3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쉼터의 세부 유형별 예산을 살펴보면, 중장기청소년쉼터가 12,568,728천원으

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단기청소년쉼터(10~15인 미만) 10,034,870천원, 단기청소년쉼터(15~20인 미만) 9,861,725천원,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9,803,278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기청소년쉼터(20인 이상)는 시설 수가 4개소에 불과하여 총예산도 2,278,232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Ⅶ-9> 2026년 청소년복지시설 예산(추정치)

구분		지원인원	기관수	기관당 총예산 (천원)	총예산 (천원)
청소년쉼터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보호5+거리3	14	393,904	5,514,656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보호5+거리3+야간2	19	515,962	9,803,278
	단기청소년쉼터(10인 미만)	보호4+거리1+야간1	9	330,756	2,976,804
	단기청소년쉼터(10-15인 미만)	보호5+야간1	29	346,030	10,034,870
	단기청소년쉼터(15-20인 미만)	보호5+야간2	25	394,469	9,861,725
	단기청소년쉼터(20인 이상)	보호9+야간1	4	569,558	2,278,232
	중장기청소년쉼터	보호5+야간1	38	330,756	12,568,728
	소계		138	-	**53,038,293**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6	7	326,574	2,286,018
	청소년자립지원관(혼합형)	6	6	355,330	2,131,980
	소계		**13**	-	**4,417,99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	18	175,329	3,155,922
소계			**18**	-	**3,155,922**
합계			**169**	-	**60,612,213**

기준: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 참조

나.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개편에 따른 예산(추정치)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개편에 따른 예산 추정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2026년 기존 청소년복지시설 예산을 기초로 기존 시설의 기능 전환, 최소 인력기준 충족을 위

한 인력 보강, 기능별 전문인력 추가 배치, 지역별 기능 공백에 따른 신규시설 확충, 집중회복형 및 자립전환형의 프로그램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영하였다. 다만 신규시설의 건물 신축·매입, 임차보증금, 기존 시설의 1인 또는 소규모 생활실 조성, 상담·치료공간 확충 등 공간 재구조화 비용과 기능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전환비용은 본 추정에서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현행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의 매칭 구조를 유지할 경우, 기능 중심 개편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간 운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지원과 표준 운영기준 마련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능 중심 운영모형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 청소년복지시설을 기능에 따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운영모형에서 제시한 트랙을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 인구 대비 권역별 시설 수만을 고려했을 때, <표 Ⅶ-10>에서와 같이 청소년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수는 32개, 청소년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수는 13개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쉼터가 어느 트랙을 선택할지에 따라 달라지며, 운영모형 개편의 원칙에 따라 현장과 함께 트랙 변경을 논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 예산을 추정할 때의 기준점이 있어야 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일시청소년쉼터를 응급·위기안정 트랙, 단기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집중회복 트랙, 중장기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자립전환 트랙으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하였다. 또한 보호프레임이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청소년이 살던 지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CIP(Caring in Place) 관점에서 전국의 시설배치를 추계하였다. 전국을 5개 시·군·구 내외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46개 권역으로 임의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응급·위기안정, 집중회복, 자립전환의 세 기능이 각각 최소 1개소 이상 확보되는 것을 기준으로 기존 시설의 분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169개 시설 외에 응급·위기안정형 24개소, 집중회복형 13개소, 자립전환형 17개소 등 총 54개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이 산정은 기준보다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시설 감축이나 권역 간 이전·재배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기능 재조정 및 재배치를 병행할 경우 신규 설치 규모는 감소할 수 있다. 강원·경북접경(삼척시, 태백시, 인제군), 전북서남부권역(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 전북동부권역(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서남부권역(나주시,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

군), 전남 남부・중부(장흥군, 강진군, 보성군,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경북 동북부・도서(영암군, 영덕군, 울진군, 봉화군, 울릉군), 부산원도심・서부(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경남지리산 권역(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은 청소년복지시설이 0개소인 권역이므로 이 지역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선적인 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54개소의 신규 시설 수는 5개 시군구당 3개 시설(시설 유형당 1개씩)이 확보되도록 추계한 것으로 최소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수요-공급을 고려한 청소년시설유형 배치를 위해서는 청소년 인구 수 기준(예, 인구 5만명 당 1개소)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청소년 시설 중 청소년 인구 수를 고려한 설치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복지시설 공급 추계에 필요한 시군구별 위기청소년 수는 지역별 낙인 심화 등을 이유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복지시설 이용자 수는 위기청소년 수를 정확히 대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청소년 수에 따른 추계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6년 8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추정치의 청소년 인구 수와 권역별 최소 시설 수를 모두 고려하여 5개 시군구로 구성된 1개 권역에 청소년 인구 5만당 1개씩 시설이 분포하면서 시설 유형당 최소 1개씩 시설이 배치되도록 추계한 결과, 69개의 신규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별 위기청소년 수, 권역구분 기준(지리적 접근성, 시군구 수), 시설유형별 수요 등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공급 추계를 실시하고, 지역 격차 없는 청소년복지시설 배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표 Ⅶ-10> 46개 권역으로 구분한 추가 필요 시설 개수

권역명	9~24세 인구(명)	트랙 고려 최소기준 (3개)	인구고려 추가필요 (5만기준)	인구고려 추가필요 (10만기준)	인구 수와 최소 시설 수 고려
1. 서울 강남권역	368,732	1	4	1	4
2. 서울 도심·동북권역	167,412	2	0	0	2
3. 서울 동북권역	217,826	0	1	0	1
4. 서울 서북·서남권역	255,916	1	2	0	2
5. 서울 남부권역	240,258	1	0	0	1
6. 인천 A권역	96,542	2	1	0	2
7. 인천 B권역	340,399	0	0	0	0
8. 경기 북부 권역	374,301	0	4	1	4
9. 경기 동북부 권역	230,517	0	0	0	0

권역명	9~24세 인구(명)	트랙 고려 최소기준 (3개)	인구고려 추가필요 (5만기준)	인구고려 추가필요 (10만기준)	인구 수와 최소 시설 수 고려
10. 경기 동남부 권역	171,207	1	1	0	1
11. 경기 남부 권역 A	600,532	0	0	0	0
12. 경기 남부 권역 B	317,369	0	0	0	0
13. 경기 서남부 권역	388,891	2	6	2	6
14. 강원 영서북부·접경	61,737	0	0	0	0
15. 강원 영동 권역	53,017	2	0	0	2
16. 강원 남부·폐광	69,618	1	0	0	1
17. 강원·경북 접경	16,151	3	1	1	3
18. 충북 북부 권역	70,908	1	0	0	1
19. 충북 남부 권역	151,696	0	0	0	0
20. 대전·세종 권역	305,078	0	0	0	0
21. 충남 북부 권역	226,795	1	0	0	1
22. 충남 서해안·내륙	41,249	2	0	0	2
23. 충남 남부 권역	49,141	1	0	0	1
24. 전북 중북부 권역	204,160	0	0	0	0
25. 전북 서남부 권역	27,689	3	1	1	3
26. 전북 동부 권역	15,822	3	1	1	3
27. 광주 권역	228,202	0	0	0	0
28. 전남 서북부 권역	60,663	1	0	0	1
29. 전남 서남부 권역	35,288	3	1	1	3
30. 전남 남부·중부	23,991	3	1	1	3
31. 전남 동부 권역	114,483	2	0	0	2
32. 대구 도심·동부	152,563	0	0	0	0
33. 대구 서남·경북	231,033	0	2	0	2
34. 경북 남부 권역	109,849	1	0	0	1
35. 경북 서부 권역	118,860	2	0	0	2
36. 경북 북부 권역	45,172	2	0	0	2
37. 경북 동북부·도서	11,648	3	1	1	3
38. 부산 원도심·서부	70,532	3	1	1	3
39. 부산 중부·남부	171,635	2	2	1	2
40. 부산 북서부 권역	138,662	0	0	0	0
41. 부산 동부·울산	182,730	0	0	0	0
42. 울산·경남 동부	188,370	1	1	0	1
43. 경남 중부 권역	173,958	0	0	0	0
44. 경남 서부 권역	114,877	1	0	0	1
45. 경남 지리산 권역	16,551	3	1	1	3
46. 제주권	104,401	0	0	0	0
합계	7,356,431	54	32	13	69

예산 추정은, A모델과 B모델 가운데 현행 시설체계와 유사한 단위로 운영되는 B모델을 기준으로 하였다. A모델은 시설 규모와 인력구성 및 운영방식이 현행 시설과 상당히 달라서, 기존 예산을 토대로 전환 비용을 직접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 시설 단위를 유지하면서 응급·위기안정(시설장1명, 상담원 6명 이상, 전문사정연계요원 1명), 집중회복(시설장1명, 상담원 6명 이상, 정신건강상담요원 1명), 자립전환(시설장1명, 상담원 6명 이상, 자립지원요원 1명)의 기능을 전문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예산과의 비교 및 추가 재정소요의 산정이 가능한 B모델을 기준으로 시설 전환에 따른 예산을 추정하였다.

기존시설의 인력은 현재 실제 종사자 수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B모델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수준과 기능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보강하였다. 기존 169개 시설의 실제 종사자는 총 1,321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시설별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응급·위기안정 트랙 5명, 집중회복 트랙 106명, 자립전환 트랙 60명 등 총 171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에 기능 중심 전환에 따라 기존 169개소 각각에 기능별 전문인력 1명을 추가하여, 응급·위기안정 트랙에는 전문사정·연계요원 33명, 집중회복 트랙에는 정신건강상담요원 85명, 자립전환 트랙에는 자립지원요원 51명 등 총 169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시설의 기능 전환에 필요한 추가인력은 총 340명이며, 2026년 기준 종사자 1인당 연간 인건비 기준 중 쉼터의 인건비 기준인 39,787천원을 적용할 경우 추가 인건비는 총 13,527,580천원으로 추정된다.

<표 Ⅶ-11> 기능전환에 따른 2026년 인력 추계

구분	연 인건비/ 1인	기존 인력수	최소인력 충족 추가인력	기능전문 인력	추가인력 합계	추가 인건비 합계 (천원)
응급위기안정	39,787	307	5	33	38	1,511,906
집중회복	39,787	657	106	85	191	7,599,317
자립전환	39,787	357	60	51	111	4,416,357
합계	-	1,321	171	169	340	13,527,580

이를 반영하면, 기존 169개 시설의 2026년 운영예산은 60,612,213천원에서 74,139,793천원으로 증가한다. 기능별로는 응급·위기안정 트랙이 기존 15,317,934천원에서

16,829,840천원으로 증가하고, 집중회복 트랙은 28,307,553천원에서 35,906,870천원으로, 자립전환 트랙은 16,986,726천원에서 21,403,083천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라, 기능 전환에 필요한 최소 운영인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각 시설이 새로운 역할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Ⅶ-12> 기능 전환에 따른 2026년 예산 추계

(단위: 천원, 명)

구분	기관 수	기존예산 총액	추가 인력	추가인력 인건비	2026년 총예산 (추정치)
응급위기안정	33	15,317,934	38	1,511,906	16,829,840
집중회복	85	28,307,553	191	7,599,317	35,906,870
자립전환	51	16,986,726	111	4,416,357	21,403,083
합계	169	60,612,213	340	13,527,580	74,139,793

신규시설의 운영예산은 단순히 신규인력의 인건비만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시설의 2026년 예산에 최소 인력 보강 및 기능전환 전문인력의 추가 인건비를 반영하여 산출한 기능별 기관당 평균 운영예산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환 후 기관당 평균예산은 응급·위기안정 트랙 약 509,995천원, 집중회복 트랙 약 422,434천원, 자립전환 트랙 약 419,668천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를 신규시설에 적용하면, 응급·위기안정 트랙 24개소에 12,239,880천원, 집중회복 트랙 13개소에 5,491,642천원, 자립전환 트랙 17개소에 7,134,356천원 등 총 24,865,878천원의 연간 운영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Ⅶ-13> 신규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추계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신규시설 예산(기관당)	신규시설 수	신규시설 예산 합계
응급위기안정	509,995	24	12,239,880
집중회복	422,434	13	5,491,642
자립전환	419,668	17	7,134,356
합계		54	24,865,878

기능별 프로그램 예산은 집중회복 트랙과 자립전환 트랙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추가하였다. 집중회복 트랙은 정신건강 문제, 심리·정서적 위기, 자해·자살 위험, 가족관계 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 회복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및 신규시설 98개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의 대표적인 지원 단위인 50,000천원을 추가하여 총 4,900,000천원을 편성하였다. 자립전환형 트랙은 주거 컨설팅을 포함하여 진로·취업, 경제생활, 생활기술,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정착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기존 및 신규시설 68개소에 기관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의 대표적인 지원 단위인 50,000천원을 추가하여 총 3,400,000천원을 편성하였다. 응급·위기안정 트랙은 초기 위기상황의 신속한 사정과 안정화, 적정 서비스 연계를 핵심 기능으로 설정함에 따라 별도의 프로그램 강화예산은 추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능 중심 운영모형의 총 운영예산은 기존 60,612,213천원(약 606.1억 원)에서 107,305,671천원(약 1,073.1억 원)으로 증가하며, 총 46,693,458천원(약 466.9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존 운영예산 대비 약 77.0% 증가한 규모이다. 추가 예산 가운데 기존시설 최소 인력 보강에 약 68.0억 원, 기능전환 전문인력 추가에 약 67.2억 원, 신규시설 54개소의 연간 설치·운영에 약 248.7억 원, 집중회복 및 자립전환 프로그램 강화에 약 83.0억 원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표 Ⅶ-14> 기능 중심 운영모형 적용 세부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6년 기존 예산	추가 소요예산					총계
		최소인력보강 인건비	기능전환 인건비	신규시설 설치 운영비	프로그램 강화	합계	
응급 위기 안정	15,317,934	198,935	1,312,971	12,239,880	-	13,751,786	29,069,720
집중 회복	28,307,553	4,217,422	3,381,895	5,491,642	4,900,000	17,990,959	46,298,512
자립 전환	16,986,726	2,387,220	2,029,137	7,134,356	3,400,000	14,950,713	31,937,439
합계	60,612,213	6,803,577	6,724,003	24,865,878	8,300,000	46,693,458	107,305,671

기능별로 살펴보면, 응급·위기안정 트랙의 총예산은 기존 15,317,934천원에서 29,069,720천원으로 증가하여 약 13,751,786천원이 추가되고, 집중회복 트랙은 기존 28,307,553천원에서 46,298,512천원으로 증가하여 약 17,990,959천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립전환 트랙은 기존 16,986,726천원에서 31,937,439천원으로 증가하여 약 14,950,713천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특히 집중회복 트랙의 증가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기존시설의 최소 인력 보강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정신건강상담요원 추가 배치와 전문 회복프로그램 운영비가 동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기존 시설의 명칭이나 유형을 단순히 변경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응급·위기안정-집중회복-자립전환으로 이어지는 기능 중심 서비스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구조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 가족기능 약화, 반복적인 시설 이용, 퇴소 이후의 지원 공백, 자립 준비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기능에 적합한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본 예산 추정치는 권역별 기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기준 이상으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감축, 통폐합 또는 타 권역으로의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정책화 단계에서는 기존 시설의 기능전환 가능성과 권역 간 재배치를 우선 검토하고, 그 이후에도 기능 공백이 남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신규시설의 신축·매입, 임차보증금, 리모델링 및 기존 시설의 공간 재구조화 등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연간 운영예산과 초기 시설투자예산을 구분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청소년복지시설 예산 추정에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현재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조건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능 중심 개편으로 인한 약 77% 수준의 예산 증액을 기존 매칭구조만으로 일괄 부담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설 전환과 서비스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국비·지방비 매칭구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기능 중심 전환에 따른 추가 전문인력, 신규 기능 도입, 집중회복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개편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증액분에 대해서는 한시적 또는 별도의 국비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능 중심 운영모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

<표 Ⅶ-15>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중심 개편에 따른 예산(추정치)

구분		기관수/인원수	총예산 (천원)	예산 증감 (천원)
(트랙1) 응급 위기 안정	기존 시설 예산(2026년 기준)	33개소	15,317,934	-
	기존 시설 최소 인력 보강	5명	198,935	198,935
	기능 전환 전문 인력 추가	33명	1,312,971	1,312,971
	신규 시설 설치	24개소	12,239,880	12,239,880
	소계	57개소	29,069,720	13,751,786
(트랙2) 집중 회복	기존 시설 예산(2026년 기준)	85개소	28,307,553	-
	기존 시설 최소 인력 보강	106명	4,217,422	4,217,422
	기능 전환 전문 인력 추가	85명	3,381,895	3,381,895
	신규 시설 설치	13개소	5,491,642	5,491,642
	지원 프로그램 예산 강화	98개소	4,900,000	4,900,000
	소계	98개소	46,298,512	17,990,959
(트랙3) 자립 전환	기존 시설 예산(2026년 기준)	51개소	16,986,726	-
	기존 시설 최소 인력 보강	60명	2,387,220	2,387,220
	기능 전환 전문 인력 추가	51명	2,029,137	2,029,137
	신규 시설 설치	17개소	7,134,356	7,134,356
	지원 프로그램 예산 강화	68개소	3,400,000	3,400,000
	소계	68개소	31,937,439	14,950,713
합계		223개소	107,305,671	46,693,458

7.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편 추진 로드맵

본 연구는 2026년 단기 정책과제로 진행되었다. 올해 진행된 다양한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통해 제안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이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추진과제별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단기: 공동설계 및 전환기반 구축

첫 번째 단계 '공동설계 및 전환기반 구축'에서는,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시설, 전문가, 청소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운영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복지시설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환 기준 제시와 기능 전환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신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각 시설별로 기능 전환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청소년 특성, 종사자 전문성, 지역 자원, 시설 규모 등의 현황을 기반으로 좀 더 세밀하게 기관의 주요 기능과 장점을 파악한다. 2026년 진행한 운영모형 연구는 운영모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에 구체적인 추가 운영모형 연구가 필요하다.

나. 중기: 시범전환 및 검증

두 번째 단계 '시범전환 및 검증'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광역권의 권역 및 지역을 고려하여 시범 운영 기관(시설)을 선정한다. 시범 기관(시설)은 각 트랙별(응급·위기 안정, 집중회복, 자립 전환) 3~5개, 통합형 모델 3~5개를 시범 운영한다. 트랙별 운영의 경우 권역별로 시범 실시하되, 권역별 기관(시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시설)을 선정하여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로 시범 운영하기 적절한 곳은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이 잘 축적되어 있고, 광역 단위 연계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역 선정은 운영협의체를 통해 시범 권역 선정 기준을 설정한 이후 선정할 수 있다. 시범 운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권역은 서울권, 경기남부권, 부산권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서울권은 가정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한 모든 기능이 도시권 내 존재하고, 경기남부권은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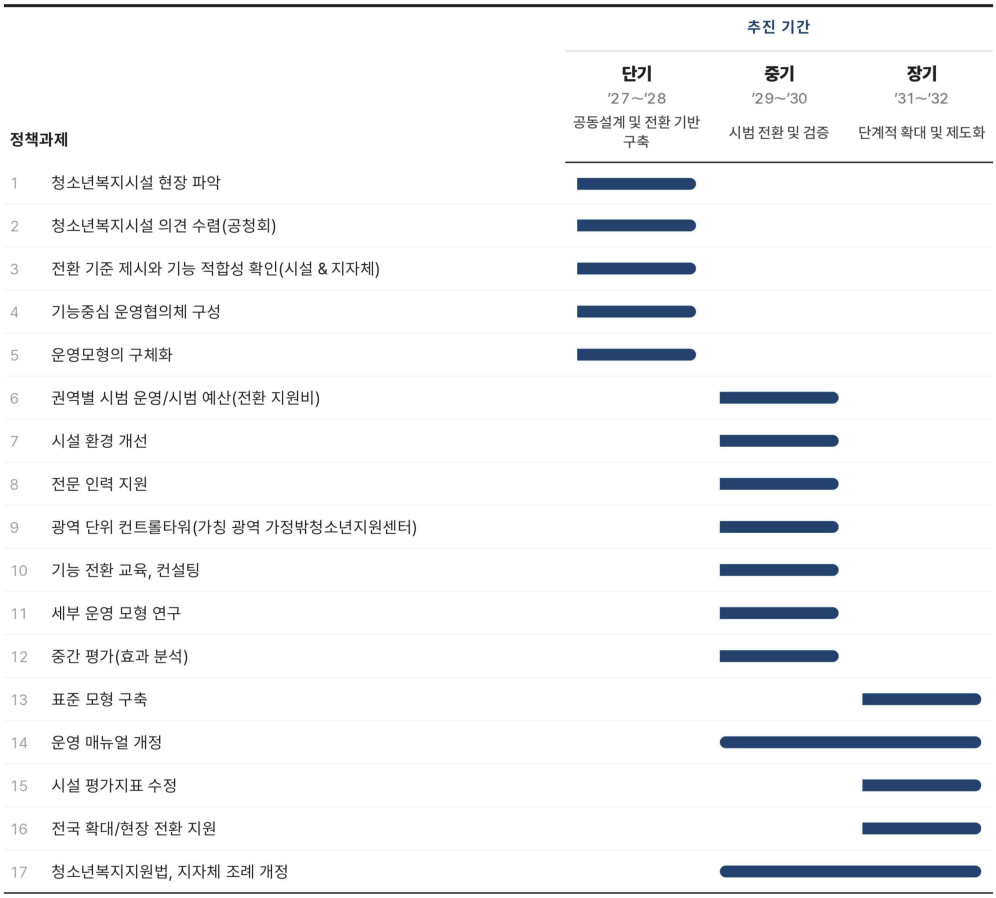
기초지자체가 연결된 광역 생활권의 특징, 부산권역은 서울권역과 경기권역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청소년복지시설 기능이 가능한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어 광역도시형 시범권역으로 실시 가능한 곳이다. 경기북부권을 포함한다면 분산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넓은 권역 적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권역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시범 운영 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4개의 청소년복지시설을 기능 중심 3개 트랙(응급・위기안정, 집중회복, 자립전환)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부터 보완한다. 시범운영 후 그 운영 결과에 대해 효과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청소년과 기관(시설), 정책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만들고 효과를 분석한다. 청소년 측면 지표는 위기 안정 정도, 심리정서 변화(정신건강 회복도), 서비스 이용 지속성, 학업, 취업 변화, 가족관계 변화, 자립 역량 및 자립 연계 유지율, 주거 및 직업 안정성, 재입소율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관(시설) 측면에서는 종사자 업무량,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 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연계, 운영비, 인력 등을 평가한다. 정책 측면은 서비스 중복, 서비스 공백, 지역 간 격차,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시범운영 기관은 시설 환경 개선과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시범 예산을 지원한다. 운영 기간 중 컨설팅을 시행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운영모형의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한다.

다. 장기: 단계적 확대 및 제도화

세 번째 단계인 '단계적 확대 및 제도화'는 전 단계의 시범운영 노하우를 반영하여 운영 전환의 제도화를 정착시킨다. 세부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 표준 운영모형을 완성하고, 운영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며, 시설 평가 지표를 수정한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내용을 최종 개정하고, 지자체 조례를 개정한다. 현장에 시설 전환 관련하여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 개편을 확대 정착시킨다.



<그림 Ⅶ-8>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편 정책과제(안) 로드맵

8. 정책 제언

이 연구의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정책 제언 1] 기능 중심 체계로의 전환 및 지원 연령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법적 측면에서 기능 중심 체계로의 전환 및 지원 연령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기간 중심(일시, 단기, 중장기)으로 구분된 법적 시설 유형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의 위기 수준과 개입 목적에 부합된 기능 중심의 유형 분류체계로 새롭게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자립지원 상한 연령을 현행 만 24세에서 아동복지법 수준인 만 25세로 상향하고, 경계선 지능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기능 평가에 따라 만 29~30세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책 제언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다기관 데이터 연계 체계의 법제화 검토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다기관 데이터 연계 체계의 법제화 검토가 필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 중 실제 쉼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30.2%에 불과하며 나머지 다수는 친구의 집이나 거리, 모텔 등 비공식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굴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외사례 중 싱가포르의 '지역화 커뮤니티 네트워크(LCN)'나 미국의 'Safe Place'와 같은 민관 거점 네트워크와 같은 조기 발굴과 데이터 통합 모델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의 출결 데이터, 경찰청의 가출 신고 데이터,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안전망 간 위기청소년 조기경보 데이터 연계체계를 응급 위기안정 단계에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거점들을 '청소년 세이프플레이스'로 지정하여 상시적 접근이 가능한 조기 개입 접점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이에 대한 법제화를 고려할 수 있다.

[정책 제언 3] 국가 차원의 전환기준과 지역 기반 전달·재정체계 구축

기능 중심 개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 운영모형과 유형별 인력·시설·예산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유형 전환에 필요한 지원 중 명확한 유형 전환 기준 제시가 24.7%로 가장 높았으며, 1순위 응답에서는 49.0%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응급·위기안정, 집중회복, 자립전환 유형별 대상 청소년, 입·퇴소 기준, 핵심 서비스, 사례관리 절차, 표준인력 및 시설기준과 함께 기능별 표준 운영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시설 분포와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 간 의뢰·전원·공동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정 기능이 부족한 지역에는 권역 단위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재정적으로는 기존 시설의 기능 전환비, 전문인력 추가 인건비, 기능별 프로그램 및 통합사례관리비, 시설·공간 개선비, 교육·컨설팅 및 전환지원비를 구분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 전환 및 예산 지원의 과정에서 서비스 공백이 발

생하지 않도록 시설 전환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의 구축과 필요 예산에 대한 지원 및 기본운영비에 반영하여 기능 중심 개편이 청소년복지시설 현장의 추가 업무 증가 및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재정이 함께 보강되는 구조적 개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책 제언 4] 보호기간 유연화와 유기적인 트랙 전환 체계

제도적 측면에서 성과 기반의 보호기간 유연화와 유기적인 트랙 전환 체계를 통해 자립지원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드롭인 센터 역할을 하는 '응급위기안정'(트랙1) 유형은 1주일 이내 보호를 유지하되, 다른 트랙(집중회복, 자립전환)은 시설 유형의 고유 기능에 충실하여 입소자 개별 목표 성취 시까지 보호기간을 유연화함으로써, 쉼터 입퇴소를 반복하는 이른바 '쉼터돌이' 현상을 해소하고 트랙 간의 연속적인 자립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트랙 전환 시에도, 청소년이 학대나 가출 피해 이력을 반복 진술하며 겪는 2차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용의 '표준 연계 서식'을 공통 적용하고,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판정회의' 및 전체 체계를 조정할 '통합사례관리 조정자'를 배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랙 간 전환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면적 기능 수준(회복 수준, 자립 준비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별 청소년의 실제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보호의 연장과 종료를 유연하게 판단하는 성과 연동형 시스템을 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집중회복 유형 내 편입을 제안한다. 기존의 '집중회복'(트랙2)의 유형 내 '교정특화형' 혹은 '법원연계형'으로 편입하여 전문 심리치료 인력과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일반 고위기 청소년과의 통합 케어를 통해 긍정적 교정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재포지셔닝이 필요하다. 추가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후속 연구에서 이 부분이 충실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5] 기능 중심 운영모델에 부합하는 평가 및 행정관리체계 전환

기능 중심 운영모델에 부합하는 평가 및 행정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능 중심 운영모형이 청소년복지시설의 새로운 운영체계로 안정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시설 평가 및 행정관리체계 역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응급위기안정, 집중회복, 자립전환

등 시설별로 상이한 기능과 서비스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시설의 실제 운영 성과와 청소년의 긍정적 변화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의 규모, 이용인원, 프로그램 운영 횟수 등 투입 및 단순 산출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각 시설에 부여된 기능과 목적에 따라 해당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와, 서비스 이용 청소년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가결과를 시설 간 서열화나 비교 또는 시설의 행정적 관리나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시설의 개선과제를 파악하고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운영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능 중심 운영모형이 실질적인 청소년복지 전달체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가 및 행정관리체계를 기능 중심 운영모델에 부합하게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제언 6] 청소년의 위기·회복·자립 과정에 기반한 기능 및 서비스체계 개편

청소년복지시설은 기존 시설 유형과 보호기간 중심에서 응급·위기안정-집중회복-자립전환의 기능 중심 체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유형 전환 조사에서 기능 중심 전환 필요성은 72.1%였으며, 일시청소년쉼터는 응급·위기안정, 단기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집중회복,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중장기청소년쉼터는 자립전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집중회복 기능은 심리·정서 회복, 생활 안정, 행동 변화, 가족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위기개입→회복→자립준비→퇴소 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예산도 기존 시설별 운영비 중심에서 벗어나 기능별 전문 프로그램과 통합사례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별도로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및 각 트랙별 유기적인 협의 조정을 위해서, 청소년복지시설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정, 협의 및 결정하는 업무,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입소기간에 대한 설정이 기존과는 달라지기에 각 트랙 중 어떤 트랙으로 청소년이 배정되어여 하는가에 대한 청소년의 입소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중간 평가 및 퇴소 평가를 위한 심의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정책 제언 7] 다학제 전문인력 배치와 실전형 자립공간의 재구조화

정책적 측면에서 다학제 전문인력 배치와 실전형 자립공간의 재구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복합 위기청소년의 치료와 밀착 케어를 위해서는, 기존 사회복지사 중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전문인력(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을 추가 배치하고, 종사자 소진 방지를 위해 기존 사례관리자와 분리된 '사후관리 전담요원' 및 '자활작업장 관리인력'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특별히 자립전환(트랙3) 유형에 체험형 자활작업장 및 자립빌드업 주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외부의 직장 적응 실패를 완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체험형 '자활 작업장(카페, 편의점 등)'을 직영·위탁으로 운영하고, 독립 주거 훈련을 위한 셰어하우스형 '자립체험주택'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과밀한 시설 환경의 재구조화도 시급하다. 과밀환경이 스트레스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인 1실(7~10㎡) 확보 및 수면과 활동 공간의 물리적 분리를 위한 환경 개선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 시설의 인프라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침상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유연한 권고가 요구된다.

[정책 제언 8] 기능 전환에 상응하는 인력 확충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 구축

기능 중심 개편이 실질적인 서비스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능별 업무량과 전문성을 반영한 인력기준 개편과 추가 재정 투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유형 전환 조사에서 필요한 지원으로 예산 지원 확대가 19.1%, 인력기준 개선이 17.0%로 나타났으며, 전환 과정의 우려에서도 예산 부족 12.7%, 인력기준 미비가 15.3%로 주요하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응급·위기안정형에는 초기 위기평가·정신건강 선별·안전확보 인력을, 집중회복형에는 상담·심리정서·가족개입 및 사례관리, 사후관리 전문인력을, 자립전환형에는 주거·진로·생활·자립 및 사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 예산 역시 이러한 전문인력 보강에 따른 추가 인건비와 기능별 프로그램비, 사례관리비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특히 기능 중심 개편에 따른 예산은 기존 시설의 전환, 통합사례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전문인력 보강을 중심으로 우선 편성하고, 신규 시설 설치, 대규모 공간 재구조화 및 시설 기능 재편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소요예산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또한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기능 전환 초기의 추가 재정부담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서비스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능 전환에 필요한 추가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9]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강화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청소년 인터뷰 결과, 청소년복지시설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단순히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보호시설을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성장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이자 거주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기청소년쉼터의 경우, 단기쉼터에 비해 구성원의 변동성이 낮고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생활 안정성이 높았으며, 참여자들은 쉼터 선생님과 라포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면서 실제적인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반면 참여자들 대부분이 시설의 노후화 등 열악한 환경, 사생활 보장이 안 되는 협소한 다인실, 집단생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개인공간과 공용공간 분리 및 다인실에서 1~2인실로의 전환,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시설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설을 제공하는 것'에서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정폭력, 학대, 방임, 가정경제의 파탄 등으로 원가정에서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지 못했던 고위기 청소년에게, 쉼터는 사실상 '집'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능 중심 운영모델에서는 각 기능별로 주거의 목적과 수준을 차별화한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응급위기안정 단계에서는 위험으로부터 즉시 벗어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보장하고, 집중회복 단계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심리적 회복과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1인실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자립전환 단계에서는 집단생활을 벗어나 실제 독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 소규모 공동주거, 독립형 주거 등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10] 시설 퇴소 이후 청소년 지원 구체화: 아동 및 청소년 자립지원 및 사례관리 연계 강화

현재 아동청소년보호체계는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구분되어 있고, 이러한 분절된 전달체계로 인하여 서비스 배제 또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은 부처에 관계없이 이용자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부처와 관계없이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제도를 아동, 청소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계 방안을 제안해 보면, 이들은 아동보호 및 자립준비청년 제도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복지시설과 아동보호 및 자립준비청년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먼저, 보호가 더 필요한 경우의 연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9~17세 청소년에게 추가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입양, 원가정보호 중 9~17세 청소년에게 적합한 결정을 내린 뒤 아동을 보호하고,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침 내에 필요시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하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인 희망이음에서 청소년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보호가 아닌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를 연계할 수 있다. 그간에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역시 자립준비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원체계 이용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학계 및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이러한 이용 불평등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 청소년쉼터 퇴소 및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는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예, 경기도)의 경우 자립준비청소년은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과는 달리 자립준비청소년은 국가장학금에서 성적기준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최근 삭제되었다.

그 외에 자립준비청소년은 주거 및 생활 지원으로 청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취업 지원으로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및 감면 혜택이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자립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 상관없이 자립정착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비스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소년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자립지원 전담기관 이용대상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기 또는 연장보호종료된 자 또는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가 5년 이내인 자이다 보니, 사회적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임에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관련 개정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자립지원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자립전담기관은 부처 관련성과 관계없이 아동청소년보호체계를 이용한 청년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또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인 희망이음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을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 시스템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현재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 현장의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보호, 자립지원 등의 사후관리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청소년 및 아동복지 체계 간의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도 요구된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별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 위원회 내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이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의 보호조치(보호, 재보호, 퇴소 처리 등)에 대해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 사례결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청소년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사후관리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제언 11]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당사자 참여 기반의 운영체계 마련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당사자 참여 기반의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복지시설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성장,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시설과 이용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와 지원의 주체로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가진 대상으로 바라보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 스스로 시설 이용에 대한 낙인과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으로 규정하기보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권리의 주체이자 자립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과 서비스가 실제 청소년의 욕구와 경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이용규칙, 퇴소 및 자립지원 정책 등을 마련할 때, 실제 이용 청소년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청소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고 서비스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용자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당사자 참여형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설 중심의 보호서비스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하는 이용자 중심의 청소년복지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정책 제언 12] 다양한 정체성과 배경을 지닌 청소년을 위한 특화 서비스 기반 마련

다양한 정체성과 배경을 지닌 청소년을 위한 특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해외사례분석에서는 캐나다의 성소수자 특화 전환거주 프로그램과 원주민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다문화, 장애 청소년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현장전문가 FGI에서도 다문화가정 배경의 언어소통이 어려운 청소년의 입소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조사에서도 경계선

지능,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청소년의 비중이 시설유형에 따라 최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집중회복 기능 내에 언어지원(통번역) 연계,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비차별적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및 시설 입소기준 마련, 장애,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개별화된 사례관리 매뉴얼을 표준 운영지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약을 자립전환 단계의 필수 연계망으로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 제언 13] 종사자 처우 개선

현재 청소년복지시설은 양질의 인력 유입과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요건의 강화가 아닌 처우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청소년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인력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인력의 문제는 잦은 이직과 채용의 어려움에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및 지자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일생활균형지원제도, 휴가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소규모시설은 이러한 점에서 불리하므로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낙후된 공간 개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 및 여건 마련 등도 요구된다.

[정책 제언 14] 종사자의 심리지원 및 슈퍼비전 체계 제도화

종사자의 심리지원 및 슈퍼비전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의 FGI에 의하면 고위기 청소년과의 밀착 생활 속에서 만성적 직무소진을 겪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호소했으며 이는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청소년과의 신뢰관계 단절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과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건비, 복리후생 개선과 더불어 정서적 소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종사자 대상 정기 심리상담 및 사례별 전문 슈퍼비전을 의무화하고 자살시도나 자해 등의 고위기 사례 발생 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대응 심리지원(EAP)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기존 데이터의 2차 분석, 청소년과 실무자 FGI, 현장 의견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모형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운영모형의 방향과 기본 틀을 제시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기준 등은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 시설의 각 트랙별 기준과 트랙 운영을 위한 매뉴얼 연구, 성과지표 및 시설 평가지표의 수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틀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은 도전이 따르며,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와 조율 등이 필요하다. 그 과정 안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개편을 위해 기존의 것 가운데 우선되어야 할 것을 선별하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에게는 기회가 되고, 실무자들에게는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그동안 어두운 허허벌판에서 묵묵히 땅을 일구고 식물을 키우는 일들을 해왔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이 한 올 한 올 실을 엮는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김범구, 김수영, 진영선, 김민정, 조은실 (2023).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희망친구 기아대책.

김영한(2023).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웅수. (2018). 독일의 소년보호정책과 법적 지원에 관한 연구 – 청소년 대안시설 하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9**(2), 81-102.

김지연, 백혜정 (2017).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모형 개발 연구**. 세종: 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혜, 정경은, 박지영, 김기남, 조규필 (2006a). **단기청소년쉼터 세부운영모형 개발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김지혜, 정경은, 박지영, 김기남, 조규필 (2006b). **일시청소년쉼터 세부운영모형 개발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김혁 (2019). 일본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개입 및 그 시사점. **치안정책연구, 33**(1), 147-182.

남미자・김시연・마한얼・정찬송・정용림・황혜신(2024).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거주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교육인류학연구, 27**(1), 117-148.

노현주, 김성아 (2024). 일본의 취약 청년 지원 정책: 니트와 히키코모리 청년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024(가을), 71-85. https://doi.org/10.23063/2024.09.6

류황석 (2023).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일본의 지원 정책과 현황: 히키코모리 지원과 ‘고독・고립 대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겨울), 38-50. https://doi.org/10.23063/2023.12.4

박희진, 최선아, 김선미, 김규희, 송아영. (2026). 가정 밖 청소년에서 홈리스 유스(Homeless Youth)로: 주거권 중심의 지원체계를 위한 개념 전환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3**(1), 218-244.

서정아, 박선영 (2016).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2025). **2025년 청소년사업안내**.

성평등가족부 (2024).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

송아영 (2021). 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의 특징과 원칙: 한국 노숙인 주거정책을 위한 함의. **사회복지연구, 52**(3), 85-116.

양미진, 지승희, 김태성, 조규필, 이자영 (2006).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모형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여성가족부 (2026.4.10. 추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1600

여성가족부 청소년지원과(202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매뉴얼.**

이민희, 이명숙, 정회, 이춘화 (1998). **가출청소년쉼터 운영모델**.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2020).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이주연, 주보혜, 김무현, 백혜정, 주하나 (2024).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영식, 정경은, 김윤나, 김웅수 (2017). **청소년회복센터의 현황 및 발전방안**. 서울: 법원행정처.

정경은, 박지영, 조규필 (2023).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모델 개발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정익중, 백혜정, 박현선, 천창암, 박현동 (2009).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 개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6.5.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https://www.ypec.re.kr/mps/chartData/view?menuId=MENU00784&infoId=YS_RA

허민숙 (2024).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이유: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입법개선 시급. **현안분석, 329**.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45603

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이미영 (2024).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황진구, 김지연 (20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구조조정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愛知県福祉局児童家庭課 (2026.4.10 추출.). 自立援助ホーム.
https://www.pref.aichi.jp/soshiki/jidoukatei/jiritsuenjo-home.html
全国自立援助ホーム協議会 (2021). 2020年度全国自立援助ホーム実態調査報告書.
https://zenjienkyou.jp/wp-content/uploads/2022/02/2020年度全国自立援助ホーム実態調査報告書.pdf
全国自立援助ホーム協議会 (2026.4.10 추출.). 自立援助ホームとは.
https://zenjienkyou.jp/about/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2026.4.10 추출.). *Runaway and homeless youth program*.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s://acf.gov/fysb/programs/runaway-homeless-youth
Boys' Town Singapore (2026.4.10. 추출.). *YouthReach services*.
https://www.boystown.org.sg/youthreach/programmes/Bundesministerium der Justiz. (1990). *Sozialgesetzbuch (SGB) Achtes Buch (VIII) – Kinder- und Jugendhilfe (SGB VIII)*.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8/
Careleaver e.V. (2022). *Handlungsleitfaden zur Umsetzung des §41a im SGB VIII*.
https://jugendhilfeportal.de/material/careleaver-ev-handlungsleitfaden-41a-sgb-viii-2022
COHHIO (2025, December 17). *Runaway & homeless youth (RHY) program*. Coalition on Homelessness and Housing in Ohio. https://cohhio.org/programs/youth-initiative/rh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March 26). Runaway and homeless youth: Demographics and programs (Report No. RL33785). U.S. Congress.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L33785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3). *Every child matters (Cm 5860)*. HM Government.
Fei Yue Community Services (2026.4.10 추출.). *Youth GO! Programme*.
https://fycs.org/youth-go/
Gaetz, S. (2019). *THIS is Housing First for Youth: A Program Model Guide.* Canadian Observatory on Homelessness Press.
Government of Canada. (2021, August 12). *Government of Canada invests in program to keep at-risk youth in school and away from crime*. Public Safety Canada.
https://www.canada.ca/en/public-safety-canada/news/2021/08/government-of-canada-invests-in-program-to-keep-at-risk-youth-in-school-and-away-from-crime.html

HM Government (2025, December 10). *Youth matters: Your national youth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youth-matters-your-national-youth-strategy

HM Government (2025, January). Identify and support young people at risk of being NEET. Department for Educatio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797ac51cbd1e3a508a22ccc/Identify_and_support_young_people_at_risk_of_being_NEET_Jan-2025.pdf

Homeless Hub (2026.4.10. 추출.). *Foyer – hub and spoke model. Canadian Observatory on Homelessness*. https://homelesshub.ca/book/youth-transitional-housing-toolkit/operations/foyer-hub-and-spoke-model/

Impact Canada (2026.4.10 추출.). *Alternative suspensions program*. Government of Canada. https://impact.canada.ca/en/challenges/alternative-suspensions-program

Information System Child and Youth Services in Germany (kinder-jugendhilfe.info) (2025a). *Residential care and other forms of assisted living*. https://www.kinder-jugendhilfe.info/en/tasks-and-fields-of-work/socio-educational-support-services/types-of-socio-educational-support-services/residential-care-and-other-forms-of-assisted-living

Information System Child and Youth Services in Germany (kinder-jugendhilfe.info) (2025b). *Support for young adults*. https://www.kinder-jugendhilfe.info/en/tasks-and-fields-of-work/support-for-young-adults/support-for-young-adults

Information System Child and Youth Services in Germany (kinder-jugendhilfe.info) (2025c).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42-administration-and-governance

Information System Child and Youth Services in Germany (kinder-jugendhilfe.info) (2025d). *Child and youth services and inclusion*. https://www.kinder-jugendhilfe.info/en/structural-framework/society/child-and-youth-services-and-inclusion

Institute for Global Homelessness (IGH) (2026.4.10 추출.). *Foyer – hub and spoke model*. https://ighhub.org/toolkit/subchapter/foyer-%E2%80%93-hub-and-spoke-model

Internationale Gesellschaft für erzieherische Hilfen (IGFH) (2021). *Neue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verabschiedet.
https://igfh.de/neues-kinder-jugendhilfegesetz-verabschiedet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 (2019). *Enhancing support for at-risk children and youth*.
https://www.msf.gov.sg/media-room/article/Enhancing-Support-for-At-Risk-Children-and-Youth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 (2020, October 6). *Education and housing support for young men and women who grow out of residential boys' or girls' homes*.
https://www.msf.gov.sg/media-room/Pages/Education-and-Housing-Support-for-Young-Men-and-Women-who-Grow-out-of-Residential-Boys'-or-Girls'-Homes.aspx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 (2026.4.10 추출.). *New mentoring programme to better support 100 at-risk youths over two years*.
https://www.msf.gov.sg/media-room/article/New-Mentoring-Programme-To-Better-Support-100-At-Risk-Youths-Over-Two-Years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 (2026.4.10 추출.). *Programmes to help at-risk youths*.
https://www.msf.gov.sg/media-room/article/Programmes-to-Help-at-risk-Youths

National Center for Homeless Education (2026.4.10 추출.). *Runaway youth*.
https://nche.ed.gov/legislation/runaway-youth/

National Network for Youth (2025, June 11). *Bill introduced: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rafficking Prevention Act of 2025*.
https://nn4youth.org/2025/06/10/bill-introduced-runaway-and-homeless-youth-and-trafficking-prevention-act-of-2025/

Nippon.com (2025, May 20). One step toward a better society out of adversity: A new bill of rights for and by children of the system. Nippon.com.
https://www.nippon.com/en/japan-topics/c12704/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2026.4.10 추출.). *Runaway and homeless youth. U.S. Department of Justice*.
https://ojjdp.ojp.gov/programs/runaway-and-homeless-youth

Public Safety Canada (2021, April 29). *Youth at risk development (YARD) program*.
https://www.publicsafety.gc.ca/cnt/cntrng-crm/crm-prvntn/nvntr/dtls-en.aspx?i=10071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Rossitto, C. (2020, September). Isolated together: Amplified vulnerabilities in Japan's children's homes.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8*(18). https://apjjf.org/2020/18/rossitto

Shelter England (2025, July 10). *Young people and care leavers housing options*. https://england.shelter.org.uk/professional_resources/legal/housing_options/young_people_and_care_leavers_housing_rights/young_people_and_care_leavers_housing_options

Shelter England (2026.4.10 추출.). *Emergency options for homeless 16 to 25 year olds*. https://england.shelter.org.uk/housing_advice/homelessness/emergency_options_for_homeless_16_to_25_year_olds

Shelter England (2026.4.10 추출.). *Housing help for care leavers*. https://england.shelter.org.uk/housing_advice/homelessness/housing_help_and_homelessness_if_you_are_a_care_leaver

Social Collaborative Singapore (2026.4.10 추출.). *Youth at risk*. http://wiki.socialcollab.sg/index.php/Youth_at_risk

VanDenBerg, J. H., & Grealish, E. M. (1996). Individualized services and supports through the wraparound process: Philosophy and procedur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5*(1), 7-21.

VanDenBerg, J. H., Bruns, E. J., & Burchard, J. D. (2002). History of the wraparound process.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35*(1), 1-14.

Walker, J. S., & Bruns, E. J. (2006). Building on positive outcomes: The Wraparound process.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38*(8), 1-11.

Wikipedia. (2025). *Foyer (housing model)*. https://en.wikipedia.org/wiki/Foyer_(housing_model)

Your Housing Group (2026.4.10 추출.). *Supported housing for young people*. https://www.yourhousinggroup.co.uk/im-looking-for-a-home/supported-housing-for-young-people/

Youth Services Bureau (YSB) (2026.4.10 추출.). *Housing and shelter*. https://www.ysb.ca/services/community-and-housing-services/housing-and-shelter/

Youth.gov. (2026.4.10 추출.) Federal programs: Homelessness and housing instability. https://youth.gov/youth-topics/homelessness-and-housing-instability/federal-programs

Youthlink. (2026.4.10 추출.) *Transitional housing program*. https://youthlink.ca/services/our-programs/housing-and-shelter/transitional-housing-program

부 록

1. 연구참여자 설명서

2. 연구대상자 동의서

3.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전환 관련 의견조사

부록 1

연구참여자 설명서

연구과제명 : 청소년복지시설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지원 실태 및 운영모형 개선 연구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지원 실태 및 운영모형 개선에 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주제 및 연구참여자 선정

1)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지원 실태 및 운영모형 개선에 관한 연구입니다.
2) 청소년복지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본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을 인지하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자
제외기준
-본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자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참여자의 경험자료를 왜곡하거나 진술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인터뷰 시점 3년 이내에 우울, 알코올 등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

2. 연구 방법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청소년복지시설 이용경험에 대해 심층면접에 참여하게 됩니다. 면접 과정은 녹음될 것이며 소요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이후 녹음된 파일은 녹취되며 면접이 끝난 이후 연구자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연락하여 당일 면접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3. 연구 참여 기간

귀하는 본 연구를 위해 1회 인터뷰 참여(2026년 4월)를 하게 됩니다.

4.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를 중도에 그만둔 경우 참여자와 관련된 자료(동의서, 참여 녹음 파일과 녹취록 일체)는 즉시 폐기됩니다.

5.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면접 도중 위험요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6.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가 연구 참여시 면접 참여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7.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8.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면접에 참여하더라도 면접 내용에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참여자 이름은 가명 혹은 익명 처리됩니다. 면접 참여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지켜집니다. 녹음 파일은 녹취가 완료된 이후 즉시 폐기하며, 녹취록은 연구 종료 후 3년을 보관한 후 영구 폐기됩니다. 면접 자료는 연구자들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문서 암호화가 설정됩니다.

9.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부록 2

연구대상자 동의서

연구제목: 청소년복지시설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지원 실태 및 운영모형 개선 연구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서명일:
(필요시)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입회인	성명:	서명:	서명일:
(필요시)			
연구책임자	성명: 000	서명:	서명일: 2026. . .

부록 3

구분	ID			

(기입하지 마세요)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전환 관련 의견조사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위탁연구인 '청소년복지시설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지원 실태 및 운영모형 개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모형을 기존 '기간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의견조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보호·지원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운영모형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은 연구 통계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호되오니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문 작성 대상 및 유의사항]

ㅇ설문대상 : **시설당 1명**(청소년복지시설장 혹은 실무책임자)

ㅇ유의사항 : 조사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설당 반드시 **1회만 실시**

연구참여 동의

우리 시설은 이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서 얻어진 정보는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참고자료로서,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에 대해 아래 박스란(□)에 체크(✔)해 주세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A. 시설의 일반적 특성 /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질문에 대해 해당 응답에 작성 또는 ✔표시 해 주세요.

A-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시설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②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③ 단기청소년쉼터
④ 중장기청소년쉼터 ⑤ 청소년자립지원관 ⑥ 청소년회복지원시설

A-2.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① 시설장 ② 중간관리자 ③ 일선종사자 ④ 기타( )

A-3. 귀하의 청소년복지시설 경력은 얼마나 되시나요? (년 개월)

A-4. 귀 시설이 속한 지역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1) 지역 규모		2) 권역 구분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① 수도권	② 충청권	③ 호남권, 제주권
③ 농어산촌	④ 기타 ( )	④ 영남권	⑤ 강원권	⑥ 기타( )

A-5. 아래 내용을 보시고, 2026년 7월 기준(설문조사 시점)으로 청소년 현황을 작성해 주세요.

구분	인원수
1) 귀 시설의 정원	( ) 명
2) 귀 시설의 현원	( ) 명
3) 약 복용과 관계없이 정신적·발달적 어려움(자살위기, 자해, 우울, 불안, ADHD,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등)을 겪는 청소년 실인원수 ※ 중복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소계가 합계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 명
3)-1. 자살 시도 경험 청소년 수	( ) 명
3)-2. 자해 시도 경험 청소년 수	( ) 명
3)-3. 우울, 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는 청소년 수	( ) 명
3)-4. ADHD 청소년 수	( ) 명
3)-5. 경계선 지능 청소년(느린학습자) 수	( ) 명
3)-6. 지적장애 청소년 수	( ) 명
4) 정신적·발달적 어려움(자살위기, 자해, 우울, ADHD 등)을 겪어 약을 복용하는 청소년 실인원수	( ) 명
5) 법적 공적 제재(법률, 행정 규정 위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실인원수	( ) 명
6)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 실인원수	( ) 명

※ 일시쉼터의 경우 7월 기준, 평균 인원을 작성해주세요.

B. 기능 중심의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전환에 대한 인식

B-1. 현 청소년복지시설은 주로 이용기간으로 시설유형이 구분되어 있으나, 시설유형을 모두 갖춘 지역이 드물어 지역불평등이 발생하고, 청소년 중장기 보호 욕구와 달리 퇴소, 재입소를 반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을 기능 중심([가칭] ①응급위기안정, ②집중회복, ③자립전환)으로 재편하는 안을 검토 중(아래 참고 사항 참조)입니다. 이러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 참고: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초안 신/구 비교

구분	현재(기간 중심)	개편(기능 중심)
시설유형	일시·단기·중장기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 처분)	응급·위기 안정(Outreach & Emergency Hub) /집중회복(Intensive Recovery & Healing) /자립전환(Independent Buildup & Transition)
기간구분	1~7일/ 3~9개월/ 3+1년/ 1+1년 ※ 회복시설(6개월+6개월)	기간 구분 없음(개별 개입 목표 성취시) ※ 회복시설 : 법원 위탁기간 준수(단, 위탁기간 종료시 본인 의사에 따라 적합 시설 재배치)
인력구조	사회복지사, 상담사 중심	기존 + 의료·심리치료 전문가(추가인력)
공간구성	유형별 시설 분리	A모델) 통합시설 내 분리 공존(한 건물) B모델) 분리시설 근거리 위치(근접 지역)

1) 응급 위기 안정 (Outreach & Emergency Hub) : 문턱이 낮은 개방형 '드롭인 센터' 형태로 운영되며, 가출 초기·배회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식사·위생 등 생존에 필요한 지원을 즉시 제공하는 기능
2) 집중회복 (Intensive Recovery & Healing) : 학대 피해나 복합 위기로 정서적 외상을 입은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에 앞서 심리치료, 치료 연계, 전문 상담 및 정서적 안정을 돕는 기능
3) 자립 전환 (Independence Buildup & Transition) : 정서적 안정을 이룬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실 및 셰어하우스 기반의 독립주거 훈련, 구직활동, 체험형 자활 작업장 등을 통해 실전적인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는 기능

B-1-1. 그렇게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B-2. 기능 중심으로 유형 재편 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3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① 입소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
② 쉼터 기능의 명확화
③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
④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⑤ 종사자 역할의 명확화
⑥ 운영 효율성 제고
⑦ 대책 없는 퇴소 예방(일명 “쉼터돌이” 문제 해소)
⑧ 기타 ( )

B-3. 기능 중심으로 유형 재편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을 1, 2, 3순위까지 표시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인력 기준 미비
② 종사자 업무 증가
③ 예산 부족
④ 시설 공간 재구성의 어려움
⑤ 기존 입소청소년 지원 공백 우려
⑥ 지역 내 역할 중복 또는 혼선
⑦ 기능 전환 기준의 모호성
⑧ 평가·행정 부담 증가
⑨ 시설 입소 대기인원 증가
⑩ 퇴소 기준 모호
⑪ 기타 ( )

B-4. 기능 중심으로 유형 재편 시, 기존 시설은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나요?
(기존 시설유형별 A, B, C 선택)

개편 유형 : A. 응급·위기안정　　B. 집중회복　　C. 자립전환

기존 유형	개편 유형
1) 일시쉼터(이동형)	□A　□B　□C
2) 일시쉼터(고정형)	□A　□B　□C
3) 단기쉼터	□A　□B　□C
4) 중장기쉼터	□A　□B　□C
5) 청소년회복지원시설	□A　□B　□C
6) 청소년자립지원관	□A　□B　□C

B-5. 귀하의 시설은 기능 중심 유형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고 보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B-6. 귀하의 시설의 현재 기능 중심의 전환 준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② 준비되어 있지 않다
③ 준비되어 있다
④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B-7. 기능 중심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은 무엇인지 1, 2, 3순위까지 표시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명확한 유형 전환 기준 제시
② 예산 지원 확대
③ 인력기준 개선
④ 종사자 교육체계 마련
⑤ 시설 기준 정비
⑥ 평가체계 개선
⑦ 단계적 전환 추진
⑧ 입·퇴소 평가 기준 마련
⑨ 기타 (　　)

B-8. 기능 중심의 전환(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Protec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for out-of home Youth and the Improvement of the Model of Youth Welfare Facilities

Although Korea's youth welfare facility system has achieved a degree of institutional coherence, regional disparities in the distribution and availability of facilities have produced uneven inter-facility coordination and differential access to services depending on where adolescents reside. At the same time,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out-of home youth have become increasingly diverse, and a growing proportion present with complex and high-risk needs, including mental health difficulties and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However, the existing operating system of youth welfare facilities has not sufficiently adapted to these changes. In particular,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which is organized primarily by length of stay—temporary, short-term, and medium- to long-term facilities—has clear limitations in delivering tailored interventions that correspond to adolescents' levels of crisis, individualized needs, and stages of recovery and transition to self-reliance.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ent study sought to examine regional disparities in service provision and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ength-of-stay-based operating system, and to propose an improved function-based operating model capable of more effectively addressing the crisis, recovery, and self-reliance needs of out-of home youth.

To accomplish these aims, the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protec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delivered through youth welfare facilities, relev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and the perspectives of both adolescents using youth welfare facilities and field practitioners. The research employed multiple methods, includ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secondary data;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ith 14 adolescents using youth welfare facilities;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ith 11 practitioners working in such facilities; a nationwide survey of 148 youth welfare facilities regarding perceptions of and readiness for a transition to a new facility classification system; and expert consult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a function-based integrated service platform

that shifts youth welfare facilities away from the conventional length-of-stay-based system. The proposed model consists of three service tracks structured according to adolescents' levels of crisis and service needs: (1) Drop-in Center & Emergency Hub, (2) Intensive Recovery & Healing, and (3) Independent Buildup & Transition. The Emergency Crisis Stabilization track is intended to provide rapid protection, initial assessment, crisis intervention, and linkage to community-based services for adolescents facing acute crises. The Intensive Recovery track is designed to deliver concentrated recovery-oriented services for adolescents with complex needs, includ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medical care, restor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and educational and vocational support. The Self-Reliance Transition track is intended to facilitate a stable transition to self-reliance and independent living through assistance with housing, income and livelihood, financial management, education and further study,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and daily living skills.

To reduce service gaps and discontinuities arising from regional disparities in facility distribution, the study proposes two alternative operational arrangements. The first is an integrated model in which all three tracks are housed within a single facility or building. The second is a networked model in which facilities performing the three respective functions are located within the same or adjacent regions and are systematically linked to one another. These alternative arrangements are designed to allow flexible implementation according to regional infrastructure, facility conditions, and adolescents' service needs.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proposed model is grounded i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spanning crisis, recovery, and self-reliance for out-of home youth. Six operating principles are identified: (1) youth-centeredness, (2) functional orientation, (3) continuity and integration, (4) choice and flexibility, (5) field participation, and (6) phased transition. In addition, the model reorganizes physical space, professional staffing, and service delivery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functions of each track. For the Emergency Crisis Stabilization track, the study proposes an initial intake area, a crisis screening and response room, and dedicated personnel for assessment and referral. For the Intensive Recovery track, it proposes stabilization rooms, family counseling room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For the Self-Reliance Transition track, it proposes spaces for independent-living experience and training, transitional housing linkage, and specialized self-reliance support staff. Across all tracks, bedrooms are proposed on the basis of a minimum double-occupancy arrangement, while single-occupancy stabilization rooms are recommended for the Emergency

Crisis Stabilization and Intensive Recovery tracks in recognition of the distinctive needs associated with crisis intervention and recovery.

The services assigned to each track are structured as follows. The Emergency Crisis Stabilization track includes protection and outreach support, street-based outreach counseling, safety education and risk prevention for adolescents exposed to street environments, and emergency crisis intervention with service linkage. The Intensive Recovery track includes safe protection and daily living support; multidisciplinary psychological, emotional, and medical care; family reunification and relationship restoration; continued education and basic career and vocational support; and legal, cultural, and leisure support. The Self-Reliance Transition track includes housing linkage and housing stabilization; income, livelihood, financial, and economic management support; employment, job training, and vocational capacity building; education, further study, health, and daily living support; and individualized self-reliance planning and case management.

Budget estimates for the proposed model were derived not by simply applying the personnel costs of newly established facilities, but by using the 2026 budgets of existing facilities as a baseline and incorporating additional personnel costs required for minimum staffing reinforcement and functional transition. On this basis, the estimated average annual operating budget per facility was approximately KRW 509.995 million for the Emergency Crisis Stabilization track, KRW 422.434 million for the Intensive Recovery track, and KRW 419.668 million for the Self-Reliance Transition track.

Finally, the study presents a medium- and long-term implementation roadmap and policy recommendations centered on phased transition in order to minimize field-level confusion and resistance associated with the move to a function-based operating system an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new system.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proposal to restructure youth welfare facilities from a protection-centered facility system into a function-based integrated service platform capable of supporting adolescents across the full continuum from crisis to recovery and self-reliance. Future research should develop detailed operating standards that take into account regional differences in infrastructure and workforce capacity, as well as the size and needs of the adolescent population, and should further test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odel through pilot implementation.

Keywords: out-of home youth; youth welfare facilities; operating model; function-based operation; emergency crisis stabilization; intensive recovery; self-reliance transition; integrated support system; implementation roadmap